삼일회계법인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삼일PwC경영연구원 | Samil Insight

December 2025

들어가며: 격랑의 2026년, 승패는 '정책에 대한 기업 전략의 정합성'

2026년 한국 경제 앞에는 거대한 파고(波高)가 예상된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인공지능(AI)의 내재화와 살벌한 지정학적 공급망 블록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징후가 아니다. 이는 산업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지각 변동이다.

이 혼란의 시기에 기업 경영진이 주목해야 할 나침반은 명확하다. 바로 '정부 정책'이다. 흔히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정부 개입을 성장의 걸림돌로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2026년을 앞둔 지금의 정책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낡은 규제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인구절벽, 에너지 위기, 안보불안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맞서 내놓은 처절한 생존 전략의 투영체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은 이 거대한 정책의 물줄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올라타느냐, 즉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기업 전략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다. 반도체, 방산,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 자산이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업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위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러-우 전쟁과 중동 불안이 불러온 방산, 조선의 호황은 정부의 육성 정책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AI와 에너지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2026년은 AI가 실험실을 벗어나 산업 현장 깊숙이 파고드는 해가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통신망은 '전기 먹는 하마'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과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를 서두르는 이유다. AI 기본법 제정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 줄 것이다.

제약, 바이오와 금융 시장도 정책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의 펀드 지원은 당근이지만, 상생 금융 요구는 채찍이다. K-컬처와 푸드 역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등에 업고 변방에서 글로벌 주류로 도약하고 있다.

2026년 이후 기업 경영은 고차방정식이다. 기술적 초격차는 기본이다. 그 기술이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지 묻고, 증명해야 한다. 탄소중립, 공급망 안보, AI라는 시대적 과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정책은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해 설계된 항해 지도다. 리스크를 피하는 방패가 아니라, 변화를 읽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붉은 말띠 해인 병오년(丙午年), 기업의 명운은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 전략의 정합성'에서 갈릴 것이다.

삼일PwC's Industr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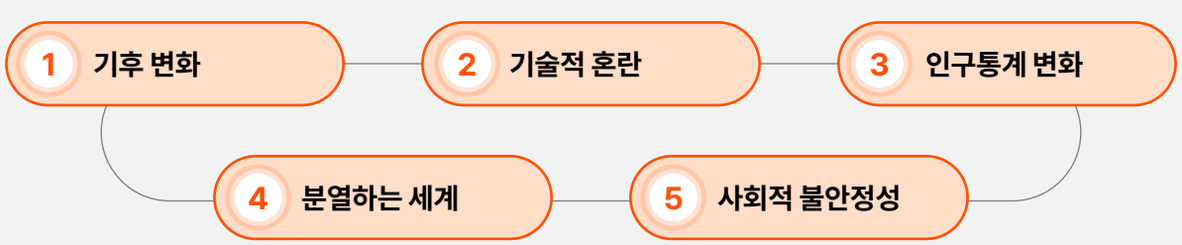
- **이재명 정부는 첨단 기술 인프라 확충(AI 생태계)을 바탕으로 ABCDE+2S* 전략산업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ABCDE+2S는 A(AI), B(BIO), C(Culture), D(Defense), E(Energy) + Semiconductor, Shipbuilding

- **삼일PwC경영연구원은 '2ABCDEF+2S' 개념을 재해석하여 2026년 정부정책에 기반한 각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A는 자동차(Auto), F는 금융(Finance)으로 재정의)**

구분	산업	업권별 Key Trend
A1	AI	AI 기본법, 위험 기반 차등 규제, AI 인프라 전력난·분산형 전력망 전환, 데이터센터·통신 인프라 슈퍼사이클, AI 서버 수요 급증, 국가 AI 정책기관 체계, AI 산업 지원체계, 국제 표준 기반 AI 거버넌스
A2	Auto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OEM 약진, 친환경차 성장 둔화 & 내연기관차 공급 부족, SDV·자율주행 레벨4·AI 기술경쟁
B	Bio	미국 관세·약가 정책 리스크 완화, 빅파마 특허 만료, 신약 투자 구조 재편, 후기 파이프라인 선호, 항암제 중심 R&D, GLP-1 비만 치료제 성장, 차세대 모달리티 투자 확대, 다적응증 자산(Pipeline-in-a-product)
C	Contents	K-푸드: 글로벌 수요확대, 지역 다변화, 현지 생산기지 확보, 식품 카테고리 다각화 K-뷰티: 수출주도 성장, ODM·인디브랜드 경쟁력, 선진국 시장확대 K-콘텐츠: 음악·웹툰 중심 성장, 게임 성장세 둔화, IP 확장전략 강화
D	Defense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유럽·중동 중심 수출, 무기체계 현대화·기술전, 현지화·조달체계 내재화, 생애주기 기반 장기 매출, 공급망·생산능력 확충
E	Energy	태양광 중심 구조전환, 해상풍력 산업화 본격화, 신재생 설비용량 확대정책, 계통·입지 중심 보급전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순배출제로 대응시장 성장
F	Finance	은행: 기업여신 중심 성장, 건전성 개선, NIM 하락 압력 심화, 생산적 금융 이행 생명보험: 보장성 중심 구조 고착,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여력 축소 손해보험: 자동차·장기보장 안정화, 단기부채 구조로 인한 위험자산 확대 한계
S1	Semiconductor	메모리 슈퍼사이클, HBM 전환 가속, AI 추론 확산과 NAND 수요 급증,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치 경신, 비메모리 정체와 TSMC 독주, 메모리 편중 산업구조 심화
S2	Shipbuilding	교체 사이클 본격화, 고부가·고난도 선종 집중화, 환경규제·연료전환 가속화, LNG선 중장기 발주 모멘텀, 장기 운송 수요 견조성, 국가별 CAPA 확대와 한국 고난도 경쟁력, 인력수급 제약, 생산공정 자동화

(PwC) 메가 트렌드가 주도하는 전세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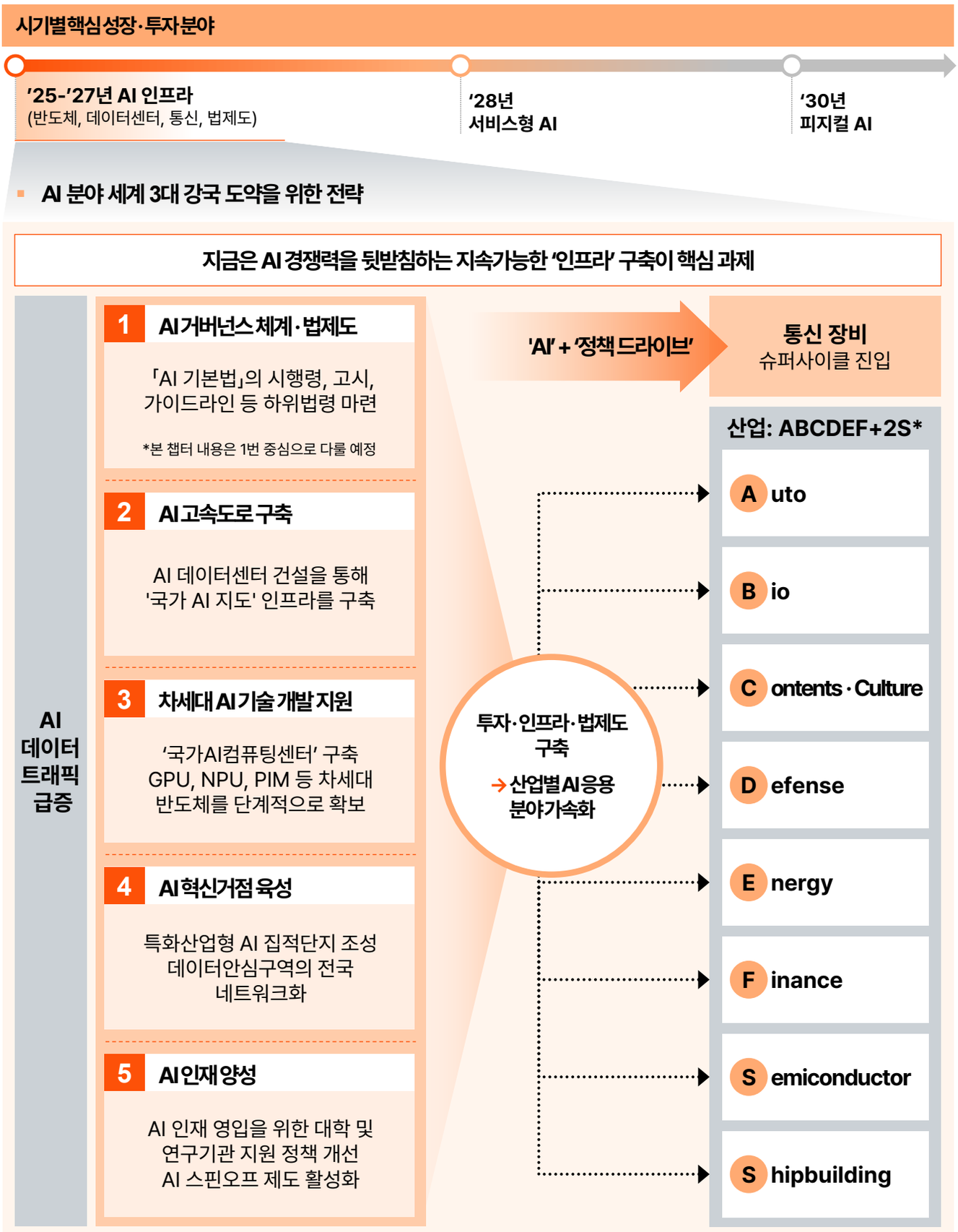
산업별 분석:
현황, 정부정책 및 전망

AI	4
Auto	9
Bio	15
Culture	22
Defense	38
Energy	45
Finance	50
Semiconductor	60
Shipbuilding	67

01

A1: AI

① 현황: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인프라다'



*산업 중 A,F는 삼일PwC경영연구원 자체적으로 다루는 산업으로, 정부의 ABCEDF(2S) 정책과는 차별화됨

② 정책 Focus: 글로벌·국내 AI 거버넌스 체계·법제도

*정부 추진 인프라 중 AI 관련 법제도가 AI 육성에 있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해당 주제 위주로 작성됨

■ '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5년 11월 12일 시행령 제정안 공개 → '26년 1월 시행 예정

-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체계 도입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 법률상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체화
국가 AI 정책 추진 기관	• AI 안전·신뢰 업무를 수행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정책·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그리고 AI 집적단지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근거 제시
AI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	•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을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으로 지정 •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 •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의 경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 공급, 먹는 물 생산 등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는 AI 중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삼일PwC경영연구원

■ 해외 주요국(미국, EU, 중국)의 AI 규제는 미국의 '유연한 시장 중심 모델', EU의 '위험 기반 포괄 규제', 중국의 '국가 주도형 통합 관리 체계'로 뚜렷하게 구분됨

- 미국은 단일 AI 법 없이 기존 부문별 법제 기반으로 기업 자율과 혁신을 우선시하며, EU는 AI Act를 통해 금지·고위험·제한적·저위험 등 AI 위험도 수준별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중국은 국가 전략·데이터 주권·행정 감독을 결합해 알고리즘,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AI 인프라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국가 주도형 구조를 유지 중

해외 주요 국가별 AI 제도 현황 비교

구분	미국	EU	중국
핵심 정책 및 비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21.01) AI 행정명령('23.10) **→ 민간주도 혁신 + 안전한 AI 확산**	AI Act('24.07) **→ 윤리 및 신뢰 중심 + 위험 기반 규제**	차세대 AI 발전계획('17) **→ '30년 세계 1위 AI 강국**
규제 접근 방식	단일 AI 법 없이 부문별 기존 법제 내에서 대응, 각 부처에서 지침·제도 마련	위험 기반 규제 체계(금지/고위험/제한적/저위험으로 구분하여 규제)	중앙정부 지시에 지역정부/국영·민간기업 합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거버넌스 구조	백악관 인공지능위원회, 과학기술정책실(OSTP)	EU 집행위원회, AI 이사회, 인공지능청(AI Office)	사이버공간관리국(CAC),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MIIT)
집행 특징	규제보다는 기술 혁신 및 경쟁력 중시	고위험·범용AI모델에 강한 의무 및 높은 과징금 부여	알고리즘 신고, 보안 평가, 국가표준 기반의 강한 행정 감독
AI 인프라 전략	AI Action Plan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 (오픈소스, 데이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EuroHPC 공동사업단 'AI Factory'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축	네이멍구, 닝샤 등 8대 거점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치(동수서산)
인재 양성	AI 교육 태스크포스 신설, AI 관련 수습제도 및 직업훈련 촉진	'Digital Europe' 약 13억 유로 투자하여 전문 인력 풀 확대 추진	'대학 AI 혁신 행동 계획' 기반 AI 학부 육성 ('18년 35개 →'24년 535개 대학)

자료: NIA(2024), KIEP(2025),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글로벌·국내 AI 거버넌스 체계·법제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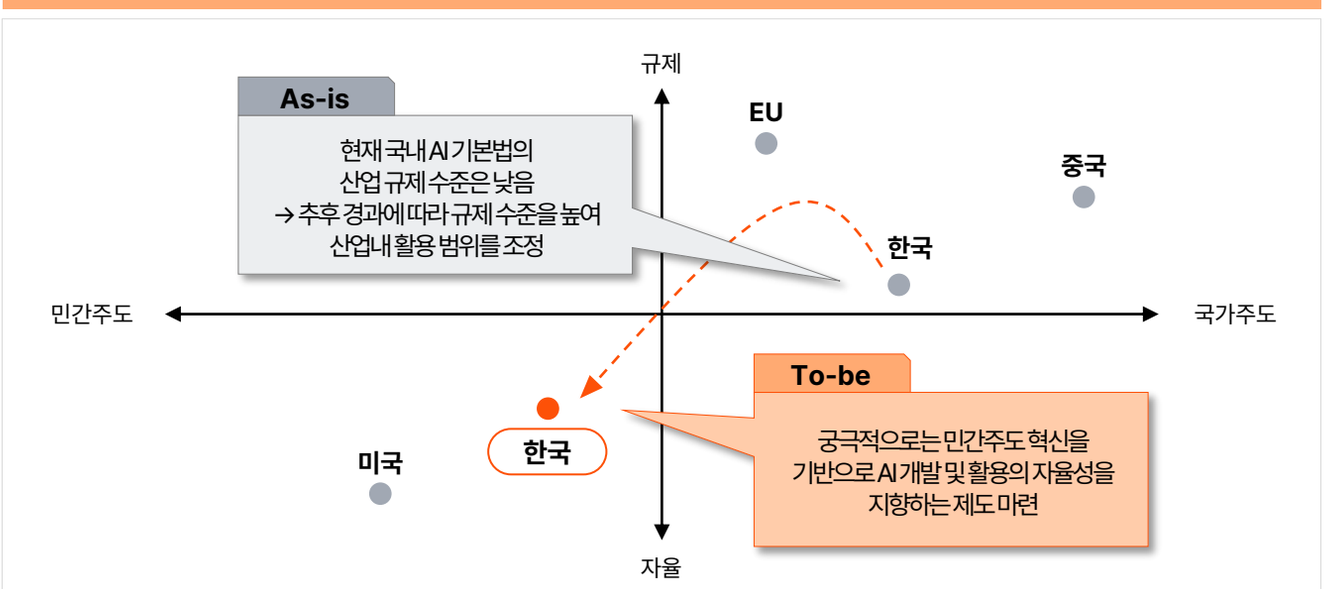
- **주요국의 AI 제도는 목적(기본권·안전 vs 산업진흥)과 정치·행정 체계에 따라 '사전적·강제적 규제'(EU·중국)에서부터 '원칙·표준 중심의 자율 조정'(미국)까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음**
- **현재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집행수단을 구체화하는 과도기적 국가주도 모델로 볼 수 있음**
  - 한국은 기본법에 따른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 등으로 안전과 신뢰 확보를 강조하되, 시행령의 세부 설계(위험도 등급화, 중소기업 부담 경감, 국가·민간 역할 분담)에 따라 EU의 엄격 규제와 미국의 자율 규범 사이에서 정책적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는 크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 ① 위험 기반의 차등 규제, ② 국가의 조정·집행 권한 및 민간의 표준·기술적 자율성의 명확한 분담, ③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설계

주요 국가별 AI 제도 규제 수준 비교

국가	규제 수준 (강도)	규제 성격(주요 수단)	국가주도 vs 민간주도(비중)
EU	上 (높음)	법률(AI Act), 사전 적합성평가·금지·투명성 의무	국가주도(중앙집행·회원국 집행) 우세
중국	上 (높음)	행정규정·등록·검열·안보 기반 통제	강한 국가주도(행정·검열)
미국	中 (변동)	행정명령·지침·표준(NIST AI RMF*)·주별 입법	민간·주(州) 주도 + 연방조정(혼합)
한국	中 (법제화 진행)	AI 기본법(포괄), 시행령(세부화 예정) 산업 규제 최소화 원칙	국가주도(법·거버넌스 정비) + 민간 준수 요구(과도기)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AI RMF)로, 개인 및 조직이 AI 시스템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 관리, 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AI 규제 방향 As-is vs To-be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AI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통신 必

기술 상용화 단계 →

'25-'27년 AI 인프라 → '28년 서비스형 AI → '30년 피지컬 AI

서비스형 AI

- **신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및 인프라 지원 정책은 헬스케어, 교육, 금융 등 서비스형 AI 분야 전반에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
  - AI 기반 건강 진단 시스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
  - 다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존재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25)을 마련하는 등, AI 활용시 고려해야할 리스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데이터 관리 전략이 요구됨

피지컬 AI(Physical AI)

-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와 기반 모델, 전략기술 로드맵 재정비, 산학연 공동 로봇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피지컬 AI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과기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피지컬 AI 시스템의 고속 연산·실시간 처리를 뒷받침
  -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과 「K-휴머노이드 연합」('25)을 통해 '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AI 인프라 (~'27년): 정부 + 민간 협력

1 AI를 움직이는 동력원은 결국 '전기'

- **AI 연산 급증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 중 → 이는 단순 수요 폭증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 및 송전망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신호**
  - 데이터센터는 2~3년 만에 가동에 들어가나, 송전선 및 발전설비는 최소 5~7년이 걸림.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누적되며 전력 병목이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
- **현재 국내 전력망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고 있어, 급격히 늘어나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분산형 시스템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발전소,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조합해, 필요한 전력을 현장에서 생산·소비가 가능
- **AI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에 대응하고 예측기반 전력 가격 및 수요 관리를 하는 등, AI가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전략 고려 필요**
  - AI 산업 육성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기술 + 정책 → 통신장비 성장 견인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며,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저장·처리하는 통신장비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음**
  -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은 '24~'30년 사이 과거 7년 대비 3배 증가할 전망
  - 통신장비는 AI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하지 않으면 AI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게 됨
- **AI 확산과 더불어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 확대 계획(BEAD[1]), 한국의 6G 상용화 로드맵 및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 등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통신업계는 향후 5~10년간 슈퍼사이클 본격화될 예정**
  - 고성능 AI 모델 수요로 장비 단가 상승세 전환
  - 국내 기업(대한광통신, RFHIC 등)은 광통신·전력증폭기·AI 서버용 패키지 등에서 기회 존재

1)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광대역 평등 접근 프로그램): 미국의 58조 원 규모의 광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

02

A2: Auto

① 현황: '관세 충격 완화로 우려 대비 양호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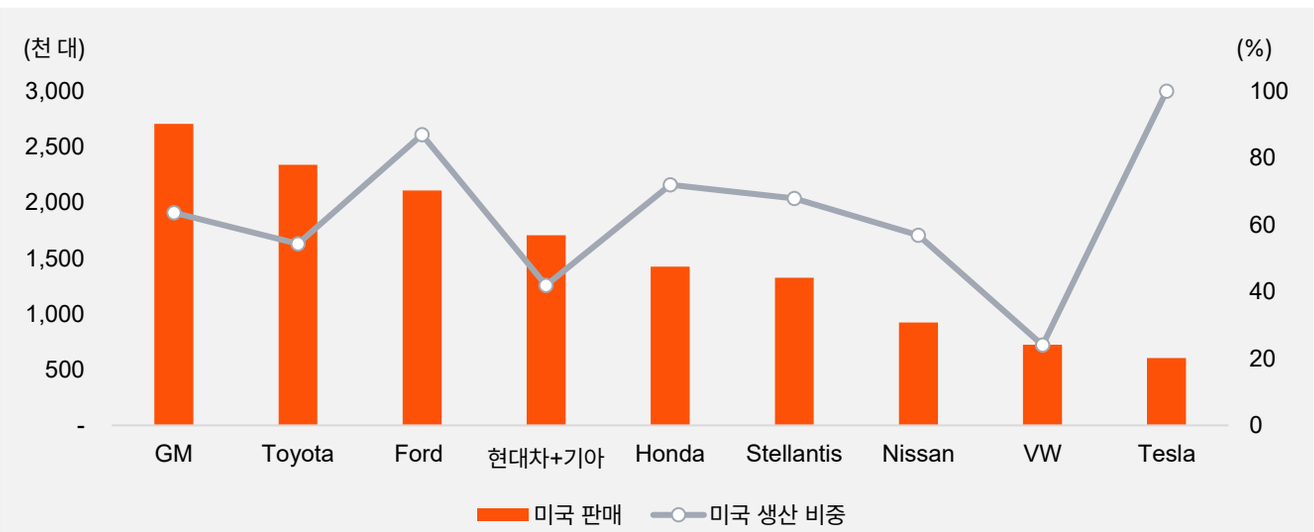
- **2025년 글로벌 신차시장은 당초 ▲전년도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금리 인하 ▲ 공급망 안정화로 인한 생산증가 등으로 +3.3% 성장이 예상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기존 전망보다 다소 낮은 약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Global Data, '25.3Q)**
  - 무역전쟁 우려로 연초 이후 2025년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역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던 상황
  - 그러나, 주요국 신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최초 제시 25% 이상) 됨에 따라, 2025년 3분기 이후부터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가 반등하며, 연간 +2.5% 수준의 성장을 기대

- **올해 자동차 업종 내 가장 중요 이슈는 미국의 관세였으며, 현재('25년 11월)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인이나,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
  - 국가별 對 미국 자동차 관세협상을 살펴보면, 최초 제시한 관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합의
  - 한국은 FTA로 무관세였던 상태에서 15%로 전환되어 충격이 컸지만, 일본·EU와 동일 조건 확보로 경쟁력 회복을 기대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

	기존	최초 제시	최종 합의
EU	2.5%	30%	15%
일본	2.5%	27.5%	15%
한국	0% (한미FTA)	25%	15%
중국	2.5%	25%	협상 지연

주요 자동차 OEM의 미국 판매량과 미국 생산 비중 ('24년 기준)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전기·자율 중심 미래차 전환 가속'

■ 미래차 전환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

-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
- '25년 11월 한미 관세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인하(기존 25% → 최종 합의 15%)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산적
-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25년 11월)'을 발표. 주요 내용은 ▲관세 대응 및 수출 경쟁력 확보 ▲AI 자율주행 시대 준비 ▲국내 자동차 생산기지 역할 강화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

美 관세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정책금융 15조원 이상 공급:** '25년('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지속 • **전기차 승용 보조금 확대**: 7,150억('25년) → 9,360억('26년) •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 운수회사 대상 친환경차 구매금융 지원 • **FTA 확대**: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 조성, 한-말레이시아 FTA 신속 발효 등 • **중소·중견 부품기업 지원**: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 **국내 생산 400만대+α 유지 목표** • **친환경차·첨단부품 생산 및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차기술개발강화로2030년에는전기차주행거리1,500km, 충전속도5분, 내연차수준가격달성 •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선제적 지원** -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 지정 -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 • **전문인력 육성:**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 육성
AI 자율주행 시대 준비	•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지원** - 자립화율: 현재 5% → '30년 10% 목표 -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 확보 • **AI 모빌리티 실증 컴플렉스 조성:**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 GPU 활용 지원 •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6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 예정 -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6년에는 자율주행 관련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확대 • **SDV 표준 추진** -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 구성 - 한국형 SDV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 주도하고 SDV 시장 선점
글로벌 확장 및 투자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 지원** -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 - 기술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 **국내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여 균형있는 성장 도모** -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 조성 -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적극 활용 -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조성

자료: 대한민국 정부 부처 합동,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수요(Market),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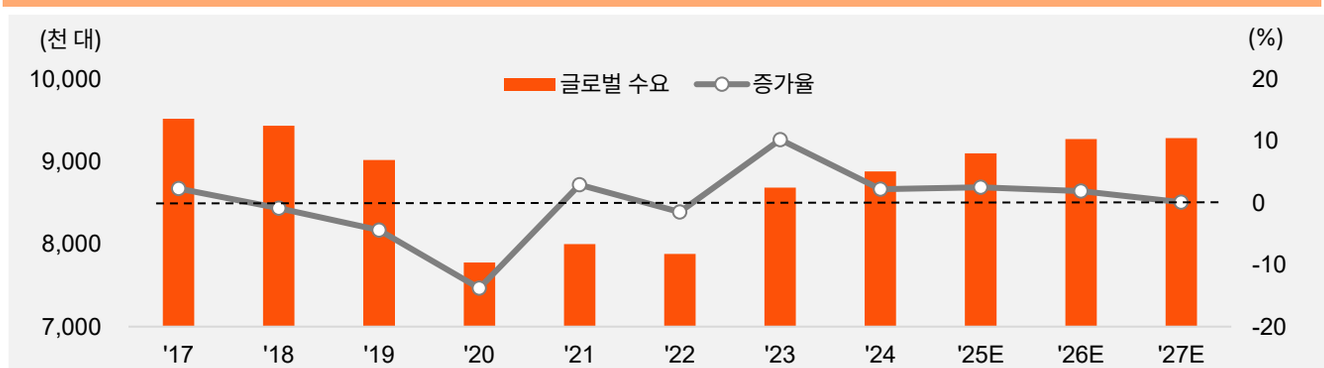
2026년 글로벌 수요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9,272만 대 전망

- 인도와 서유럽 등의 성장에도 불구, 중국과 미국 시장의 둔화 → 글로벌 전반적으로 2% 수준의 낮은 성장 전망
- 지역별로 살펴보면,
  - 미국: 1,584만 대(YoY +0.1%), 경기 둔화·고용지표 악화로 가계 소비여력 감소. EV세액 공제 종료 또한 부정적 요인
  - EU: 1,513만 대(YoY +1.5%), 소비심리 개선, 환경 규제 강화, 보급형 BEV 출시에 따라 친환경차 중심 수요 증가
  - 중국: 2,763만 대(YoY +1.0%), 정부의 이구환신(폐차 및 갱신 보조금, EV 구매세 면제) 정책이 수요를 견인
  - 한국: 162만 대(YoY +0.2%), 가계 소비여력 감소로 '25년 수준 수요 유지

차종별로는 친환경차 수요가 +10.7% 증가한 2,275만대로 26.2% 침투율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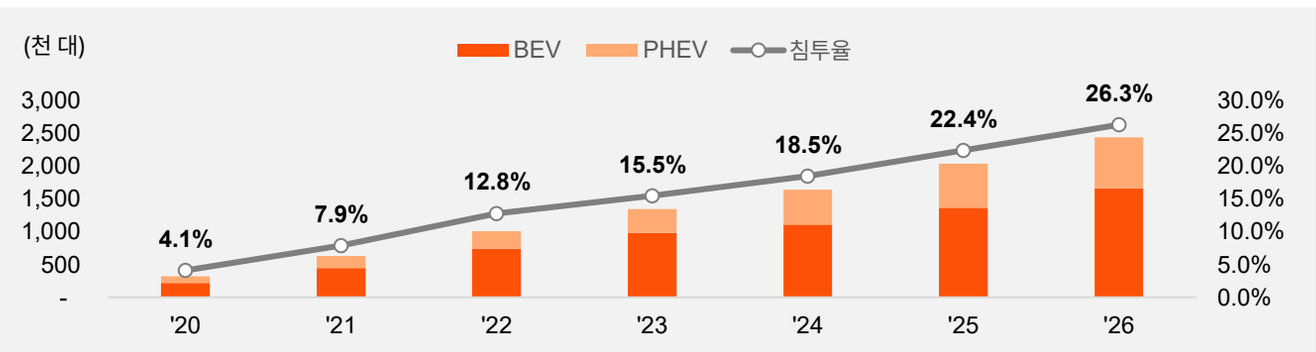
- 2025년 친환경차 성장률(+19.6% 예상) 대비 둔화된 +10.7% 성장 전망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중국: BEV 침투율이 30%를 넘어서며, 성숙 단계 진입. 이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
  - 미국: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 2025년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19.6%)에도 불구, 미국은 역성장(-7%). 2026년에도 감소 지속될 것으로 전망(기관별 편차가 있으나, '25년 대비 5~20% 수준 감소 전망)
  - 유럽: BEV 침투율이 20%를 넘으며 지속 확대
  - 인도, 아세안: 친환경차 보급 초기. 전환 초기답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자료: GlobalData, 현대차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글로벌 친환경차(BEV, PHEV) 수요 전망



자료: GlobalData, 현대차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③ 전망: '공급(Player), 중국 OEM의 약진 지속'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9,377만 대 전망

- 전통 OEM 업체들의 성장 정체 vs. 중국 OEM의 고성장 → 2025년 BYD가 GM을 제치고 6위, 길리가 10위 진입
- 2026년 가장 높은 생산 순증은 BYD(62만대), 르노-닛산-미쓰비시(44만대), 스텔란티스(37만대) 순으로, 중국의 약진 지속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105%에 도달했으나, 이는 중국 OEM의 약진에 기인

- 도요타를 제외한 전통 OEM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함
  - '19년 대비 '26년 생산량: 도요타(100%), 현대차그룹(95%), VW(80%), 스텔란티스(80%), 포드(75%), GM(73%) 순
- 전통 OEM의 생산 회복이 더딘 이유는 ▲중국 OEM 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비탄력성 지속 ▲ 전기차 전환 투자로 CAPA 운용 효율성 약화 등의 복합 요인에 기인
- 특히 전기차가 기존 예상 대비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당분간 내연기관차 공급 부족과 전기차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과거 대비 낮은 가동률 전망
  - EV는 수요 대비 생산시설 과잉 vs. 내연기관은 생산시설 감소에 따라, 높은 수요 대응 어려움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GlobalData는 2030년까지 65% 수준의 OEM 가동률을 전망

기술적으로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화, 그리고 AI 및 로봇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 격화

- SDV: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리를 통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SDV 기술이 주류가 될 전망
- 자율주행: 제한된 구역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버스, 셔틀 등 특정 상용차를 중심으로 상용화 시작
- AI 및 로봇 기술 융합: 차량 내부는 물론,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통합되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AI 및 로봇 관련 기술 투자 지속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

	자동차 생산					
	'22	'23E	'24E	'25E	'26E	증가율
OEM계	8,252	9,093	9,041	9,217	9,377	1.7
도요타	1,056	1,133	1,053	1,102	1,064	-3.4
VW	855	914	871	864	855	-1.1
현대차그룹	702	742	729	729	707	-3.0
스텔란티스	642	679	648	623	650	4.3
르노-닛산-미쓰비시	650	683	582	588	632	7.5
BYD	187	304	430	491	553	12.5
GM	488	503	450	436	430	-1.3
포드	223	267	329	397	412	3.7
혼다	403	418	417	406	386	-5.0
길리	391	414	380	354	348	-1.7
기타	2,657	3,035	3,152	3,226	3,341	3.6

자료: GlobalData, 현대차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④ 결론 및 시사점: '수요 변화 대응과 기술 선점을 아우르는 전략 필요'

2026년 산업 전망

- 수요: 중국과 미국 시장의 둔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의 성장 정체 (YoY +1.9% 성장 전망)
- 차종: 중국과 유럽은 BEV 중심의 친환경차 성장을 지속하나, 미국의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당분간 PHEV가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
- Player: 중국 OEM의 약진 + 미국 관세로 인한 전통 OEM들의 이익 감소 진행 → 업체별 이익 양극화 심화

한국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국내	내수 시장 침체	- 2024년 내수 판매는 -6.3%감소. 2025년은 기저효과와 정부의 내수 진작정책에 따라 +4% 수준의 성장 기대 - 향후에도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누적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성장이 제한적
해외	미국의 관세정책	- 자동차 부문 상호관세 15% 부과로 미국 시장 소비자 수요 감소 - 글로벌 전반적으로 공급망 불안정 지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중국OEM의 유럽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한국OEM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 차량 전동화는 지속. 그러나 속도가 다소 둔화 - 규제 방향성과 OEM 전략 변화로 유럽은 BEV 중심, 미국은 HEV 중심 성장
	미래 기술 투자	-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AI 및 로봇, 생산자동화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지속

시사점

1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

- 차량 전동화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다만, BEV 보급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PHE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EV 전환은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HEV/PHEV 및 내연기관차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2 현지생산 증대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관세 전쟁 대응

- 현지 생산 증대 및 관세에 따른 가격 저항을 낮추기 위해 저가 수출 모델 출시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업체를 다양화하는 멀티소싱 전략 시행. 또한 핵심 부품 및 기술은 내재화 추진
-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

3 미래차 기술 선점 위한 전방위 협력 강화

- 기술 개발을 위한 자체 투자 지속: 전동화, 자율주행, SDV, 연료 다양화를 위한 투자 지속
- 민-관 협력을 통한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충전·수소 스테이션 확대, 차량 데이터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생태계, 글로벌 통신·보안 규격 선도를 위한 표준화 구축 등
- 기술 제휴: 내부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스타트업·빅테크와 공동 개발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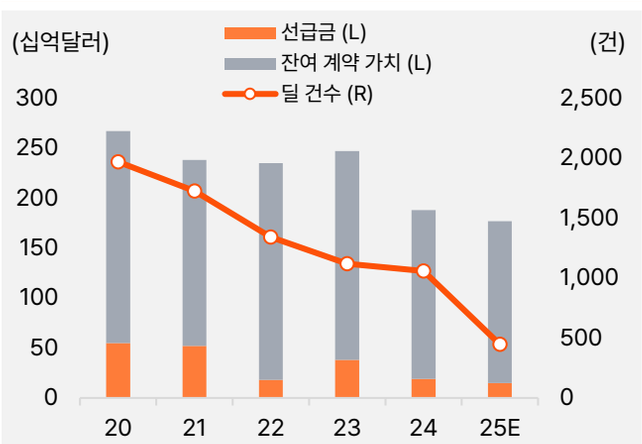
B: Bio

① 현황: '정책 불확실성 속 신약 투자 구조 재편'

2025년 Review: 관세·약가 불안정 → 신약 투자 위축과 후기 파이프라인 투자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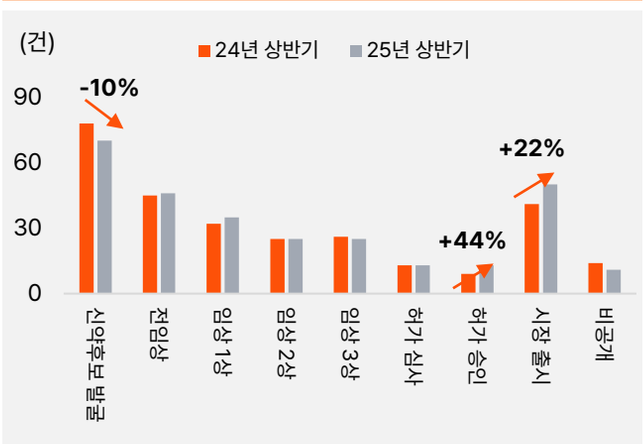
- **미국 관세 및 약가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2025년 글로벌 신약 개발 및 투자 시장 기조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초대형 M&A는 사실상 부재했음
  - ✓ **2025년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건수: 2023년 1,119건, 2024년 1,059건 대비 **감소**
  - ✓ **2025년 M&A**: 300억 달러 이상 메가딜 부재, 전년 대비 딜 건수 **감소**, 평균 딜 규모는 상승
- **후불형 계약 구조 확대:** 빅파마의 투자 전략이 보수화되면서 라이선싱 계약에서 선급금(Upfront)을 축소하고 성공 단계별 지급금(Milestone) 비중이 확대되는 후불형 계약 구조가 확대됨
- **후기 파이프라인 투자 선호:** 위험이 큰 초기 파이프라인보다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후기 임상 단계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함. 2025년 상반기 기준 신약후보 발굴 단계 딜은 2024년 상반기 대비 10% 감소한 반면, 동 기간 허가 승인 단계와 시장 출시 단계 자산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22% 증가함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추이



자료: Evaluate, 삼일PwC경영연구원

임상 단계별 라이선싱 계약 (1H24 vs. 1H25)



자료: IQVIA, 삼일PwC경영연구원

- **국내 바이오텍 기술 이전 계약은 활성화:** 보수화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텍들은 2025년 빅파마와 8건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 국내 기업들의 후기 단계 임상 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음

2025년 국내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

국내 기업	인수 기업(파트너사)	계약금	계약 규모	계약일	비고
지투지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	비공개	비공개	2025-01-24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InnoLAMP를 활용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 개발
	유럽계 빅파마	비공개	비공개	2025-09-29	
올릭스	일라이 릴리	비공개	9,117억원	2025-02-07	MARC1 siRNA 비만·MASH 치료제
	로레알	비공개	비공개	2025-06-09	siRNA 기반 피부·모발 치료제
알테오젠	아스트라제네카	654억원	1조 9,640억원	2025-03-17	SC(피하주사) 제형 개발 3개 품목
에이비엘바이오	GSK	739억원	4조 1,104억원	2025-04-07	BBB(뇌혈관장벽) 투과 플랫폼
알지노믹스	일라이 릴리	비공개	1조 9,000억원	2025-05-15	RNA 편집 기반 유전성 난청 치료제
에임드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	비공개	1조 4,000억원	2025-10-15	ADC 신약 후보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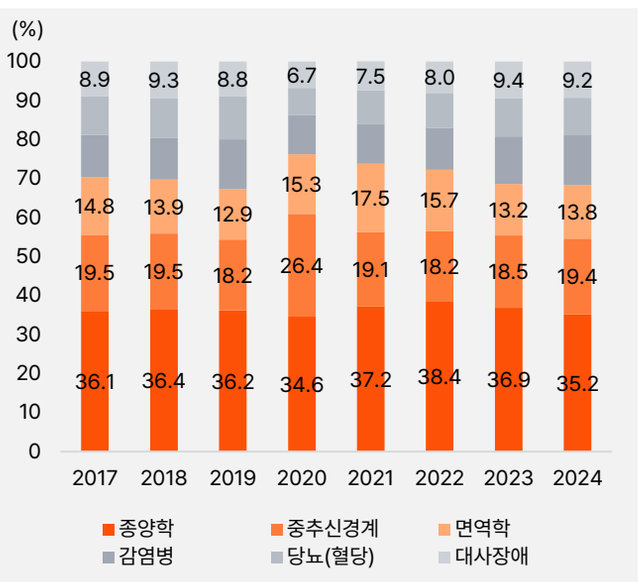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일PwC경영연구원

① 현황: '항암제에서 비만약으로'

2025년 Review: 전통강자 Oncology, 신흥강자 GL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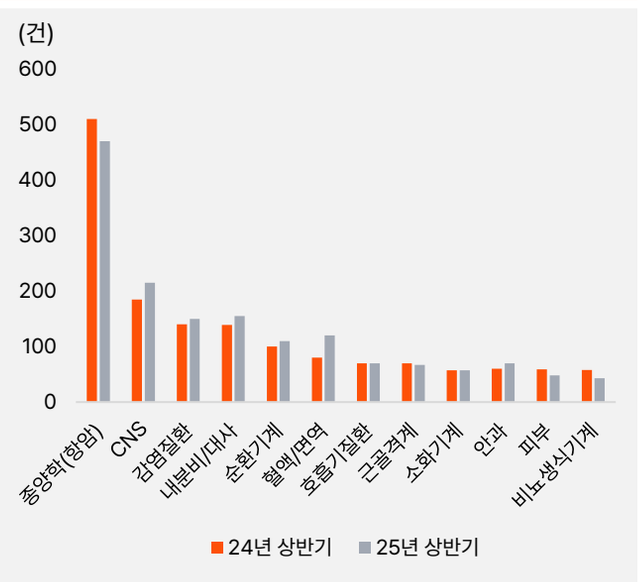
- **글로벌 신약 개발·투자 계약 비중 1위는 여전히 항암제**
  - ✓ **2025년에도 항암제 딜 강세:** 치료분야별 글로벌 딜 중 항암제 비중은 '17년부터 '24년까지 35~38% 수준을 유지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25년에도 항암제 강세는 지속됨. '25년 상반기 기준 적응증 명시 거래 중 약 39%가 항암 분야로 1위, 18%가 중추신경계(CNS) 분야로 2위를 차지함
  - ✓ **ADC와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25년 항암제 R&D는 표적 항암제인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와 이중항체 면역항암제(암세포와 면역세포에 동시 결합해 암세포 공격)에 집중됨. 주요 예시로는 ADC(엔허투, 다트로웨이), 이중항체(이보네시맙)이 있음
  - ✓ **중국의 공격적 R&D 진행:** 2025년 중국 바이오텍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중국 신약 중 라이선스 아웃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항암제였으며, ADC와 이중항체 부문에서 특히 경쟁력이 부각됨

2017~2024 치료분야별 글로벌 계약 건수 비중



자료: Global Data, 삼일PwC경영연구원

치료분야별 딜 건수 비교: 1H25 vs. 1H24



자료: IQVIA, 삼일PwC경영연구원

- **글로벌 의약품 시장 매출 1위로 부상한 비만 치료제**
  - ✓ **비만 치료제 주도 시장 성장:** 2025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GLP-1 기반 비만·대사질환 치료제(Eli Lilly의 마운자로와 젭바운드, Novo Nordisk의 위고비 등)였으며, 해당 의약품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고 빅파마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 **2025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등극:** 2025년 3분기 기준 Eli Lilly의 마운자로와 젭바운드 합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마운자로 65.1억 달러, 젭바운드 35.8억 달러) 기존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약 81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매출 의약품으로 부상함. 마운자로와 젭바운드는 주성분이 Tirzepatide로 동일하며, 허가된 적응증과 판매 지역에 따라 제품명이 나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합산하여 집계함
  - ✓ **비만약 양대축, Eli Lilly의 독주와 Novo Nordisk의 성장 둔화:** Lilly의 2025년 시가총액은 GLP-1 우위를 기반으로 Novo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빅파마 판도를 바꿈. Novo는 GLP-1 제품 효능 격차, 생산 부족 및 공급 불안정, 차세대 파이프라인(CagriSema)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됨
  - ✓ **Pfizer의 Metsera 인수 성공:** 비만약 자체 개발에 실패한 화이자는 유망한 경구용·주사형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미국 바이오텍 멧세라 인수전에 참여, 노보노디스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 → 비만약 시장 양강 구도를 흔들고 3강 체제 구축할 수 있는 기반 확보한 것으로 평가

② 정책 Focus: '규제 혁신과 R&D 투입 강화'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 지원을 단행할 계획
- 한국은 현재 최고 수준의 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 보유,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을 위해 신약 개발 관련 규제 완화, 기술-인력-자본 연계 지원, 앵커-바이오텍 동반 성장 지원 등을 실행할 것
- 바이오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 확대 정책 중 2026년에는 임상 3상 특화 펀드가 출시될 예정
-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 심사 등 규제 개선, AI 신약 개발 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추진 방향

비전과 목표

- 비전: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 목표(~2030년):
  - ✓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 ✓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

- 제품 개발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선
  - ✓ AI활용 의약품 규제 로드맵 마련,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 등
- 심사 과정의 고도화·투명성 제고
  - ✓ AI 심사 도입, 허가심사팀 운영 및 심사인력 확충
-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지원
  - ✓ 이중 약가제도 확대, 허가-평가-협상 동시진행 제도화, CDMO 기업 해외진출 지원 규제 마련

기술-인력-자본 연계로 혁신 성장 가속화

- AI 신약 개발 등 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 ✓ AI 기반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자율 실험실 구축, 데이터 수집-표준화-활용 인프라 활성화 등
-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및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 AI-바이오 융합 등 핵심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부 펀드 확대 및 펀드 간 연계 강화 등

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초격차 확보 위한 제조 혁신과 사업화 지원
  - ✓ CDMO 총력 지원, AI 융합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바이오벤처 스케일업
- 바이오 안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
  - ✓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해외 현지 거점 및 네트워크 강화, 특허 확보 지원 등

자료: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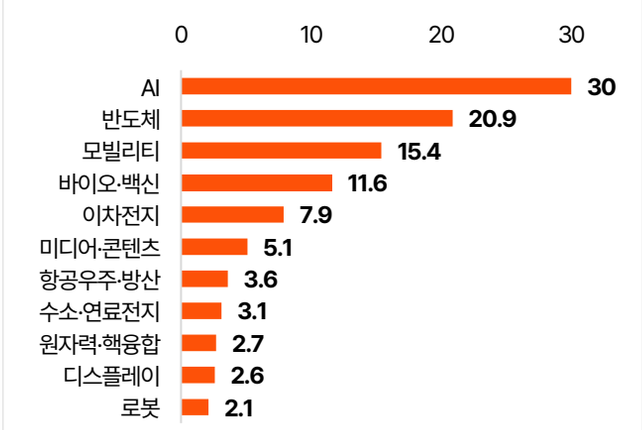
바이오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 확대

초기	전임상	1,2상	3상
과학기술 혁신펀드 400억 ('25)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27)		
	초기 바이오 투자펀드 500억 ('25)	기술혁신 전문펀드 500억 ('26~)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26)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400억 ('25)		

←-- 정부 펀드간 연계 강화로 끊김 없이 자금 공급 --→

자료: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지원금액(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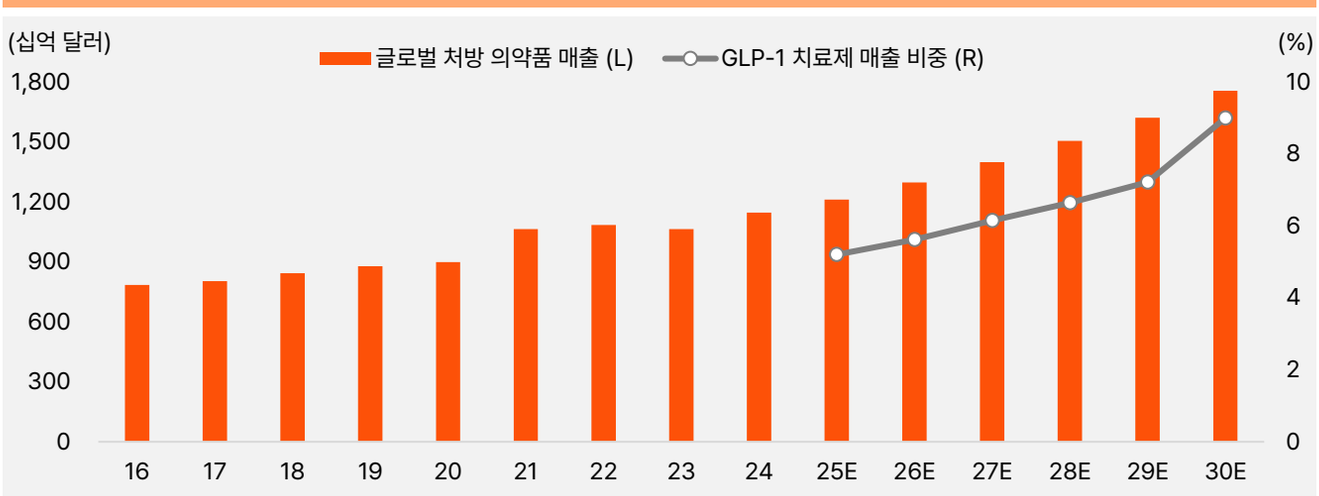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GLP-1 주도 성장 본격화'

2026년 Forecast: 비만약 고성장세 지속과 경구형 출시

- **GLP-1 정의:**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은 음식 섭취 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함. GLP-1 기반 치료제는 상기 호르몬 작용을 모방한 약물로, 비만과 당뇨 등 대사 질환 치료에 사용됨
- **GLP-1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의 폭발적 매출 성장 지속 전망:**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에 등극한 GLP-1 기반 치료제는 2030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6년에도 해당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 전체 처방약 시장 중 GLP-1 기반 치료제 매출 비중이 2030년 9%까지 확대될 전망: 2024~2030년 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 연평균 성장률 7% < 동 기간 비만 치료제 연평균 성장률 20% 전망
  - ✓ Tirzepatide 계열(마운자로, 젭바운드) 매출은 2030년 620억 달러에 도달해 역사상 최고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전망 → AbbVie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최고 매출의 3배, Merck의 항암제 키트루다의 2024년 매출의 2배 수준
  - ✓ 2030년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 중 절반인 5종이 GLP-1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유망한 파이프라인 후보 10개 중 4개도 GLP-1 기반 약물이 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처방 의약품 매출과 GLP-1 치료제 매출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Evaluate, Fortune Business Insights,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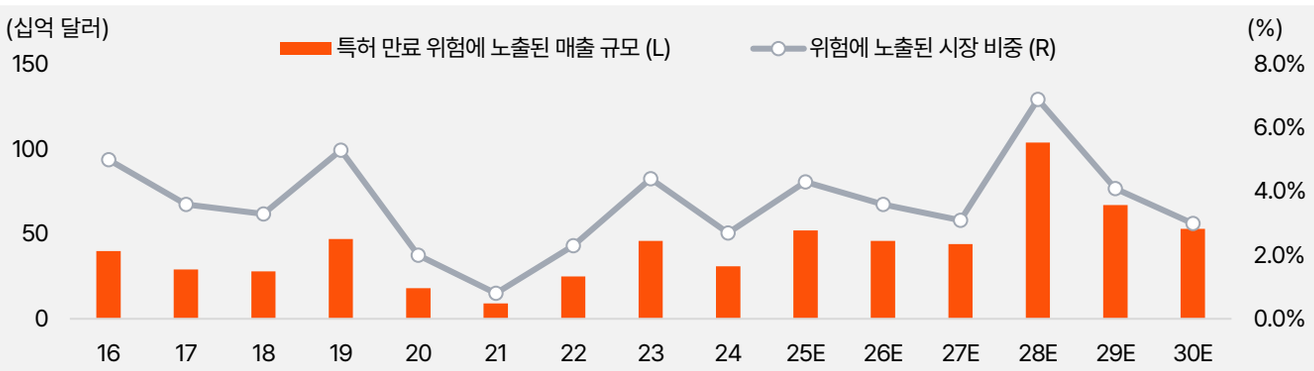
- **항비만 신약 개발 방향성은 경구형과 다중작용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가 아닌 먹는 비만약과 다중작용제(1개 약물로 여러 표적을 조절해 복합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약물)가 될 전망임. 2026년 경구형 비만 치료제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격적인 업계 경쟁 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 **경구형 GLP-1:** Eli Lilly는 경구용 GLP-1 작용제 오르포글리프론을, Novo Nordisk는 경구용 세마글루티드 고용량 버전 출시를 준비 중임. 오르포글리프론은 소분자 기반이라 생산 비용이 낮고 대량 생산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고 있음
  - ✓ **다중작용제:** GLP-1 단일 작용제의 부작용 극복과 차별화된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로, 베링거인겔하임의 서보두타이드(GLP-1와 글루카곤 수용체 듀얼 기전), Lilly의 레타트루타이드(GLP-1,GIP, 글루카곤 수용체 3개 동시 자극), Novo의 카그리세마(GLP-1, 아밀린 듀얼 기전) 등이 개발 중임
- **관련 국내 기업 전망:** 2026년 국내사의 비만 및 MASH(대사성 지방간염) 영역 주요 임상 결과가 다수 발표될 전망
  - ✓ **한미약품:** 2026년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업화, 에피노페그듀타이드(듀얼아고니스트) 2b상 완료, 3상 개시,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트리플아고니스트) 2상 완료 예상
  - ✓ **디앤디파마텍:** 동사는 최근 화이자가 인수한 미국 바이오텍 멧세라에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포함 7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했으며, 2026년 경구용 비만 치료제 2개 파이프라인 1상 결과 발표 전망

③ 전망: '신규 모달리티 투자 확대'

2026년 Forecast: 美 약가 인하, 빅파마 특허 만료 → 신규 모달리티 & 다적응증 파이프라인 강화

- **미국 약가 인하 정책 시행:** 미국 관세 리스크는 해소, 2026년부터 미국 약가 정책(IRA 약가 인하, MFN 가격 적용, TrumpRx 플랫폼 판매, 관세 면제 3년) 시행 예정 → 빅파마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IRA 1차 적용 약물은 이미 특허만료, 메디케이드 매출 감소분 리베이트가 일부 상쇄 가능)이나, 고가의 혁신 제품 개발 필요성 확대
- **빅파마 특허 만료 위기:** 빅파마는 향후 5년간 특허 만료로 인한 3,0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매출 손실 위기에 직면함. 이는 전체 시장의 3~4%에 해당하며, 2028년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로 인해 약 7%까지 급증할 전망임. 단기적으로는 Merck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만, AbbVie, J&J, Roche, BMS 역시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의 누적 매출 위험에 노출되고, 상위 25개 제약사의 평균 누적 위험도 약 24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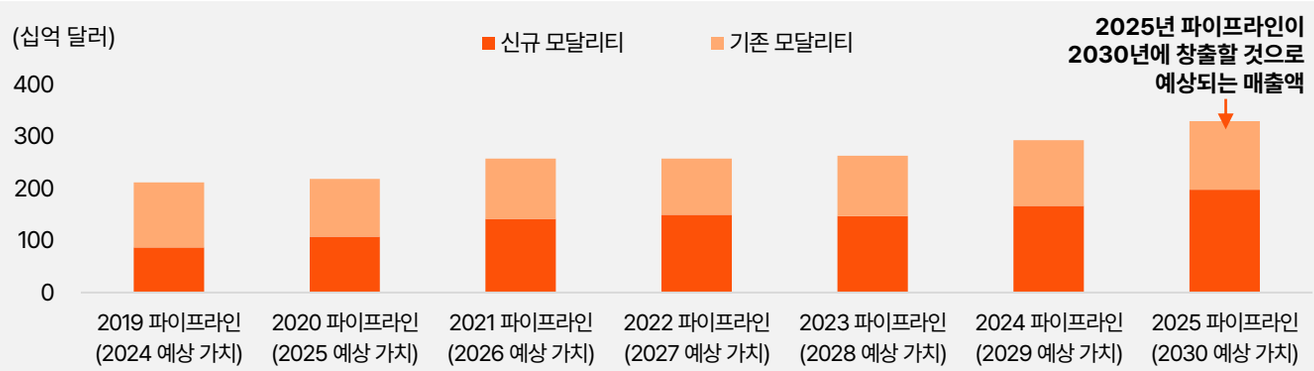
특허 만료로 인한 글로벌 매출 위험 규모 (2016~2030)



자료: Evaluate, Fortune Business Insights, 삼일PwC경영연구원

- **차세대 경쟁력 재확보 방향은 신규 모달리티와 다적응증 확대 가능 자산**
  - ✓ **신규 모달리티(New Modality):** 모달리티란 의약품이 표적을 공략하는 방법 또는 약물이 약효를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하며, 기술적 관점에서는 약물의 기술 플랫폼, 분자 형태 등을 뜻함. 주목해야 할 차세대 모달리티로는 ADC, 이중항체, RNA, GLP-1/FGF 이중작용제 등이 있음 → 2026년에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파이프라인 내 신규 모달리티 비중 확대 지속 전망
  - ✓ **다적응증 확대 가능 자산(Pipeline-in-a-product):** 하나의 근본적인 물질 또는 기술이 여러 질병이나 적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함. 휴미라는 다적응증 블록버스터의 대표 사례로, 현대 후속 주자들로는 Sanofi의 Dupixent(천식부터 피부염까지 15개 적응증), AbbVie의 Skyrizi(건선, 크론병 등 4개 적응증)와 Rinvoq(8개 적응증)이 있으며, Skyrizi는 2030년 세계 2위 매출 약물로 전망되고, Rinvoq는 비GLP-1 자산 중 가장 높은 매출 CAGR(16% 이상)을 기록할 전망됨

향후 5년간 파이프라인 가치 중 신규 모달리티 비중 확대 전망



자료: Evaluate, BCG,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결론 및 시사점: '혁신 모달리티와 비만 치료제 중심 경쟁력 재정비'

2026년 美 정책 불확실성 완화, 빅파마 보수적·선별적 투자 지속

- 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 2026년부터 미국 약가 정책(IRA 약가 인하, MFN 가격 적용, TrumpRx 플랫폼 판매, 관세 면제 3년) 시행 예정 → 전반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 빅파마 영향 제한적이나 고가의 혁신 신약 개발 필요성 확대
- 빅파마 특허 만료로 향후 5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매출 손실 위기, 극심한 R&D 효율 저하 직면
  -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투자 선호 지속 → 2026년 후기 임상 본격화되는 국내 자산 경쟁력 확대
  - ✓차세대 경쟁력 재확보 방향은 신규 모달리티(New Modality)와 다적응증 확대 가능 자산(Pipeline-in-a-product) → ADC, 이중항체, RNA, GLP-1 다중 작용제 및 제형 변경 부문 투자 확대 및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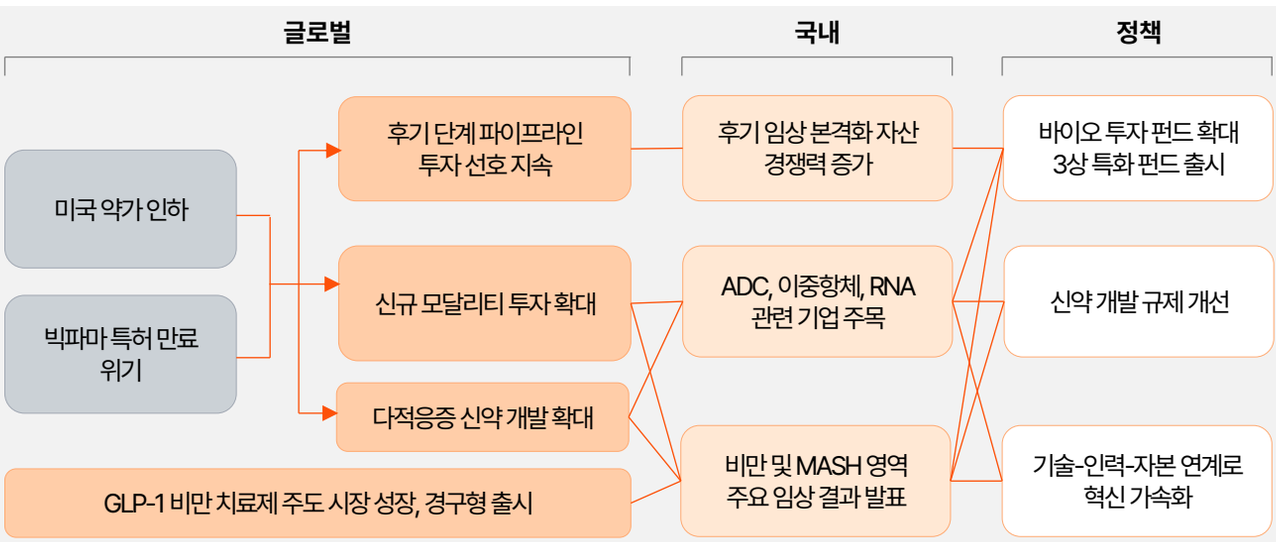
메가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

- 2025년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한 GLP-1 기반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의 폭발적 매출 성장은 2026년에도 지속될 전망, 글로벌 빅파마 패권의 핵심도 비만 치료제 우위 확보가 될 것
- 비만 치료제는 단기 유행 약물이 아니라 중기적 메가 트렌드로, 2030년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 중 절반인 5종, 유망 파이프라인 상위 10개 중 4개가 GLP-1 기반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
- 2026년 국내 기업들의 비만 및 MASH(대사성 지방간염) 영역 주요 임상 결과가 다수 발표될 전망으로, 특히 한미약품과 디앤디파마텍에 주목

제약·바이오 관련 국내 정책 효과 기대

-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함
- 바이오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 확대 정책 중 2026년에는 임상 3상 특화 펀드가 출시될 예정 → 국내 기업들의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지원 효과 기대
-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 심사 등 규제 개선, AI 신약 개발 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력 양성 및 자금 지원 확대 등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차세대 신약 개발 가속화 기대

2026년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04

C: Culture

(Food, Beauty, Contents)

C: Culture

‘K-Culture 세계화 트렌드 확산’

- **K-Culture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융합된 콘텐츠 산업 전반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K-POP,K-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를 넘어 한식, 미용,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한국적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며 국가 브랜드 제고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K-Culture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K-푸드		• 현지 맞춤 제품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로 확장 • 라면을 비롯한 간편 식품부터 김, 김치, 과일 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 한식의 세계화로 세계 각지의 한식당이 급증하며 소스류 등 수출 동반 증가 • 중국, 일본 위주→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로 확장되고 있음
K-뷰티		• 인디브랜드 & ODM 중심으로 수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음 • 한류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제품 소개, K-콘텐츠 속 제품 노출 등을 통해 글로벌 확장 지속 • 중국, 일본 위주→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로 수출 지역 다변화
K-콘텐츠	K-POP	• BTS, Blackpink 등 대형 IP를 중심으로 세계 음악 시장 주류 등극 • 팬덤 경제, 공연·IP 비즈니스 중심 •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 신시장 개척(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오디션, 현지 아이돌 등)
	K게임	• K-콘텐츠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MMORPG 게임 중심에서 벗어나 콘솔/모바일 게임 등 다양화 필요 • 중국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주목 • E-스포츠 대회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
	K드라마 & 영화	• 국내 제작사와 해외 OTT 플랫폼 간의 공동 제작 성행 • 글로벌 OTT를 통해 기존 콘텐츠를 신시장(중동·아프리카 등) 보급
	K웹툰&웹소설	• 한류 콘텐츠의 원천 IP로서 웹툰/웹소설 기반 드라마/영화의 인기 •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중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진출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K-컬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에 대해 공약**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 문화, 관광, 스포츠를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수준을 넘어 K컬처 성장이 방한 관광대로 이어지고, K-뷰티, 푸드 수출을 동반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전략체계도

비전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목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	
실행전략	①**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육성**: IP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및 K-컬처, 아트 세계 확산 지원	②**K-컬처 연관 산업 전략적 지원**: K-푸드, 뷰티, 관광 등 한류 연관 산업 연계 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③**K-컬처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고도화**: K-이니셔티브를 위한 국제문화교류 강화, 해외 거점 및 저변 확대	④**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인문 창작 역량 강화**: 창작 인프라·예술인 복지 등 창작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문화강국위원회 등 정책인프라 마련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① 현황: 'K-푸드, 수출 호조 속 판매 지역·품목 다변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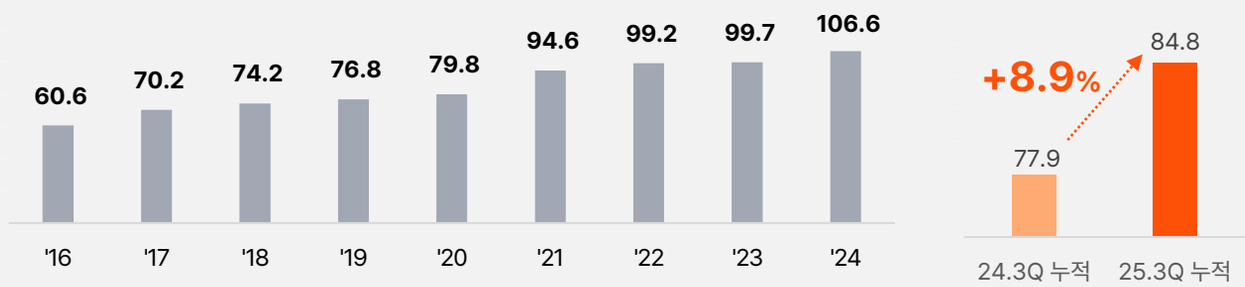
■ K-컬처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인기 지속. '25년 3Q 누적 수출 8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성장

- 국내 음식료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누적된 물가 부담, 저성장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
- 반면, 해외에서는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며,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히 성장
  - '24년 K-푸드 수출 금액은 106.6억 달러(+7% YoY)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25년은 1-9월 누계 84.8억 달러(+8.9% YoY) 기록하며 성장 지속
- K팝, K드라마, K 웹툰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흥행 콘텐츠 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너지 발현

■ 판매 지역 및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특정 국가·상품에 대한 의존도 약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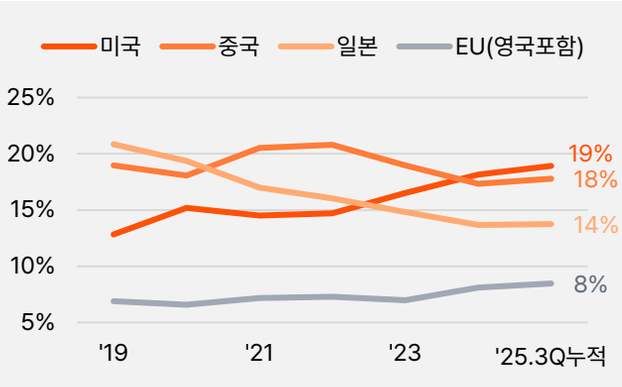
- 판매 지역: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에 집중되던 구도에서 미국·EU 등 서구권으로 확산
  - K-푸드 수출 내 주요국 점유율 변화('19년→ '24년): 일본(21%→14%), 미국(13%→18%), EU(7%→8%)
  - 25년 1-9월 지역별 수출 금액은 미국 16억 달러(+13.1% YoY), EU 7.3억 달러(+14.2% YoY), 중국 15억 달러(+12.4%) 기록하며 성장 견인. 반면, 일본의 경우 엔화 약세로 상대적으로 성장률 저조(+6.7% YoY)
- 판매 품목: 가공식품 위주 수출 성장 지속. 라면과 김 등 기존 인기 품목 외에도, 베이커리 · 빙과 등 품목 다양화
  - 2019-2024년 5개년 연평균 성장률: 가공식품(+12.5%), 축산물(+10.1%), 음료(+8.7%), 농산물(+5.3%), 담배(+2.8%), 주류(-2.1%)순으로, 가공식품과 음료의 인기(관세청)

K-푸드 수출액 추이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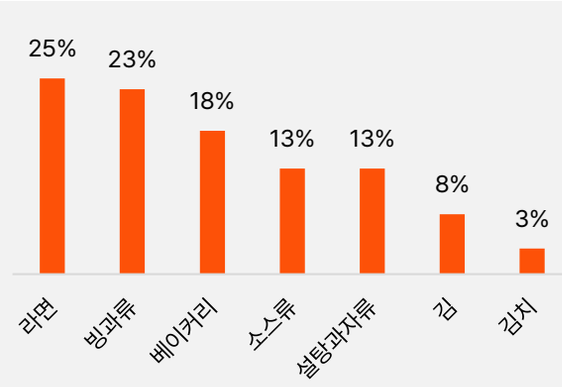
자료: KATI,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비식품 제외

K-Food 수출 국가별 비중 추이 (%)



자료: KATI,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비식품 제외

주요 품목 YTD 수출액 증가율 (%)



주) '24년 3Q누적대비 '25년 3Q 누적 기준
자료: KATI,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글로벌화·푸드테크 기반 도약'

'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년)' 수립,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을 위한 준비 지속 (농림수산식품부 주도)

- 2027년까지 식품산업을 현재의 1.7배 수준인 110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
-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기술 실증을 진행
-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라면, 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하고, 연간 수출액이 1억달러 이상인 품목을 2023년 11개 → 2027년 20개 목표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식 관광상품인 'K-미식벨트'를 15개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
-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해 김치의 경우 원료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자동화 공정을 개발할 것이며, 전통주 중에서 명주를 육성해 수출상품으로 키우고, 장류도 소스 산업으로 육성
- 식품사와 농가의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료 생산단지를 확대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2023~2027

비전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K-Food'
목표	• [산업 성장] 식품산업 규모: '21년 656 → '27년 1,100조원(연평균 9%) • [수출 확대] K-Food 수출액: '22년 88.2 → '27년 150억불 • [농업 연계] 국산 원료 사용량: '21년 594 → '27년 800만톤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주요 과제
	첨단기술활용 식품산업 성장	지역-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
	K-Food의 경쟁력 강화	K-Food 수출 확대/국내 미식산업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외식서비스 품질 제고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산 위상 제고/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전통 장류를 중심 산업으로 육성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농업-기업간 가공용 원료생산체계 구축/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식품·외식 기업의 경영 안정화/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비전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 식품 관련 법·제도·통계 등 인프라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NEXT K-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할 계획 (정부 부처 합동)

글로벌 NEXT-K 프로젝트 요약

목표	2030년까지 K-푸드 연간 수출액 150억 달러 달성
추진 방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목표	• 유망 K-푸드를 선정하고 지역별 확산 전략을 수립 • 해외 인증과 마케팅 지원으로 신시장 개척을 지원 •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에 집중하도록 지원

자료: 언론보도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기업·정부 투자 확대로 수출 호조 지속 전망'

■ 주요 식품 기업들이 해외 수출 육성 전략과 정부 정책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음식료 기업들은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 · 유럽 · 동남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 상품 개발, 생산시설 투자, 유통망 확보 등 해외 진출에 박차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현지 생산 시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CJ그룹, 삼양식품 등 미국 현지 공장 개설 주력
  - 해외 확장에 다소 소극적이던 오뚜기·SPC그룹 ·하이트진로 등 기업들도 해외 생산시설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 추진
- 정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과 '글로벌 NEXT K-프로젝트'에 기반하여, K푸드 수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속할 전망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매출 비중 (십억 원, 2024년 기준)

	매출	해외매출	해외 비중	주력 품목
삼양식품	1,728	1,336	77%	라면
오리온	3,105	2,015	65%	제과
CJ제일제당	11,353	5,581	49%	가공식품(만두, 피자, 치킨, 김, 즉석밥 등)
농심	3,439	1,375	40%	라면
대상	4,255	1,417	33%	가공식품(김치, 소스 등)
풀무원	3,214	635	20%	가공식품(김치, 냉동식품 등)
롯데웰푸드	4,044	857	21%	제과, 빙과
SPC삼립	3,428	650[1)]	19%[1)]	제빵
빙그레	1,463	154	11%	빙과

1) '23년 해외매출 비중(19%)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Capex 투자 계획

	내용
2025	KT&G(카자흐스탄 담배), 삼양식품(국내 밀양 2공장 6월 가동), 오리온(러시아, 베트남, 국내 진천 통합생산기지), 롯데웰푸드(인도), 오뚜기(미국 착공)
2026	KT&G(인도네시아 담배), CJ제일제당(헝가리), 농심(국내 녹산 하반기 가동), 오리온(베트남 하노이 3공장)
2027	하이트진로(베트남), CJ제일제당(미국), 삼양식품(중국), 노바렉스(국내 2공장 완공), 오리온(국내 진천 통합센터, 러시아 트베르 공장)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화 가속을 위한 제품, 채널, IP 다각화 필요'

K-푸드

K컬처의 인기와 더불어 음식료 기업들의 해외 성장 본격화, 기업 대응 전략 필요

-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음식료 내수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해외 진출 성과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 현재는 해외시장 진출 초창기 수준으로, 지역 및 카테고리 확장 가능성 고려 시 고성장 지속 가능
  - (기업 대응 전략) 제품 현지화+유통망 확보+마케팅 전략의 성공적 결합 시 K-Food의 파급력 증대
    ① 히트 상품 발굴 및 제품 현지화) 지역 식문화,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핵심 상품군 선정
    → 현지인 입맛, 인프라(콜드체인), 원재료 수급 등 반영하여 현지화
  - ② 시장 다변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EU 서부권 시장 공략과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신흥 시장 발굴 지속
  - ② 제품 다변화) 라면에서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빙과류, 간편식 등 스테디셀러 제품군 개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인해 수출 호조 지속되고 있으나 대응형 수출 전략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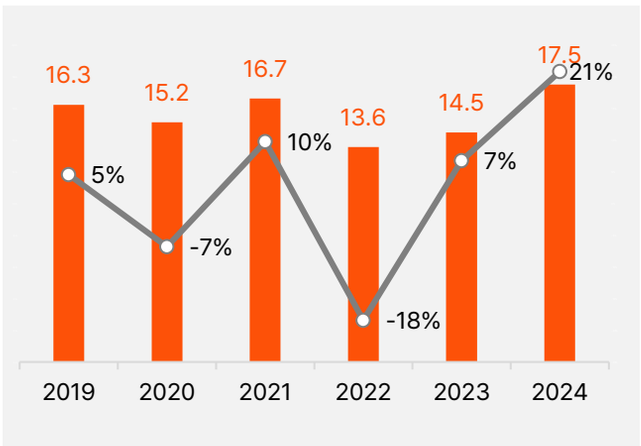
- 한국의 상호관세는 미국의 타 주요 농식품 수입국에 대한 관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미국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 가능
- 다만 가격에 민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수요 감소 우려 상존
- (기업 대응 전략) 관세 정책에 따라 제품 믹스 변화, 공급망 정비, 원산지 검증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① 제품 믹스 변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적은 가공/기호식품 위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미국 내 지역별 전략 차별화/고도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② 공급망 정비) 미국 현지 생산, 또는 OEM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효과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집중된 기존 생산기지의 생산단가 메리트의 전략적 비교가 필요함
  - ② 원산지 검증 체계 마련)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비 필요

① 현황: 'K-뷰티, 수출 호황이 견인한 본격적 외연 확장'

(생산)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대부분 유형에서 생산이 증가, 2024년 17.5조원(+20.9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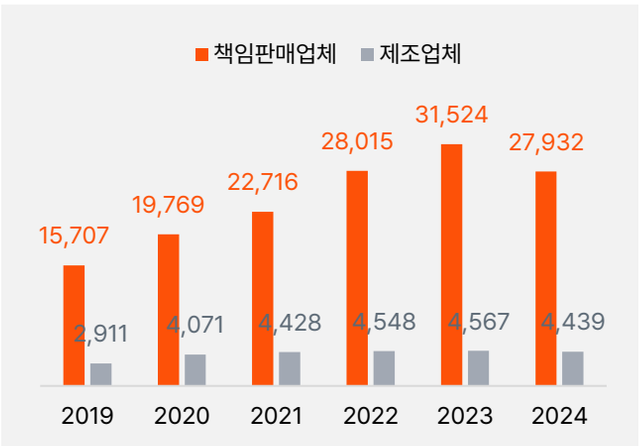
-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중심의 수출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짐
  - 기초화장품은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중심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1조 6,411억 원, +30.2%) 기록
  - 색조화장품은 립제품(립글로스, 립스틱 등) 중심으로 생산 증가액(+51.4%, +3,364억원)을 보이며 기초화장품에 이어 생산액 2위 달성
- 산업 성장에 힘입어 2019-2024년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1.5배, 책임판매업체(화장품 브랜드)는 2배 증가
  - 특히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OEM중심 생산/H&B스토어&D2C채널 발달로 사업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
  - 향후 진입장벽은 여전히 낮으나,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로 인한 초기 마케팅 비용 및 CAC(고객획득비용)증가로 영세 브랜드 설립 및 지속성은 낮아지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

국내 화장품 생산 규모 추이 (조 원,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일PwC경영연구원

국내 화장품 업체 수 추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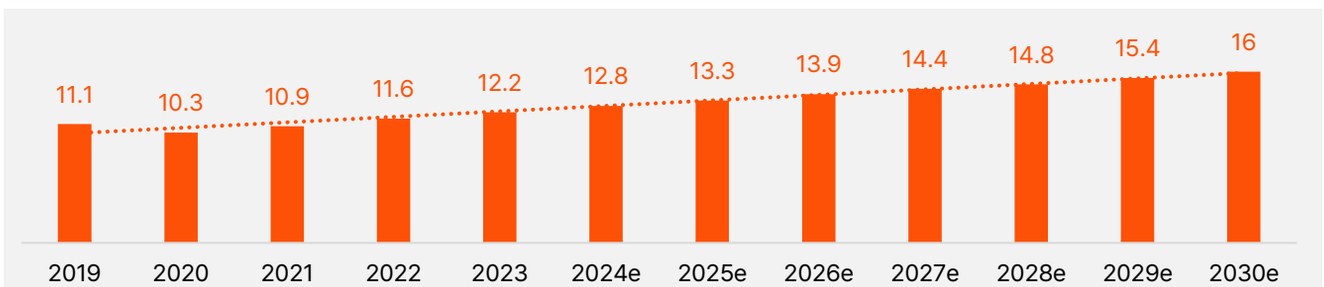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일PwC경영연구원

(내수) 제품 다각화와 방한 관광객 구매로 약진, 그러나 이미 시장 성숙도가 높은 수준

- 2019년-2023년 팬데믹 기간 동안 외부활동 감소 및 방한 구매 감소 연평균 성장률 약 2.3%의 저조한 성장률
- 엔데믹 이후 외부활동 재개와 방한 구매율 반등으로 약진
- 그러나 국내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예상 성장률('24-'30 CAGR 9.3%) 대비 국내 예상 성장률('24-'30 CAGR 3.7%)은 낮은 수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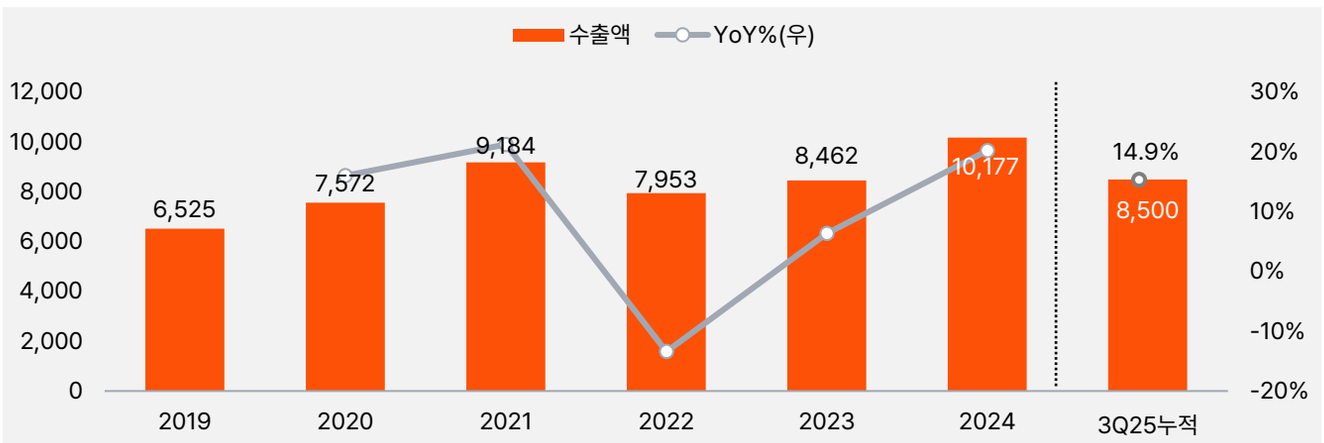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삼일PwC경영연구원

① 현황: '미국·유럽·중동 등 글로벌 시장 다변화로 성장 지속'

(수출)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K-뷰티의 위상이 올라가며 수출 다변화 및 성장 지속

- 한국은 2024년 화장품 수출액 100억달러 이상(+20.3% YoY), 2025년 3Q 누적 85억 달러(+14.9% YoY) 달성하며 고성장 중
-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전체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였으나, 2025년 3분기 대중 누적 수출 비중은 18.6%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였음
- 대신 미국 전체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2015년 6%→2024년 22.4%를 차지하며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21년 수입국 1위를 달성하고 2024년 수입점유율 30.3%로 압도적 우위 달성
- 미국·일본에 더해 유럽·중동에서도 성장세가 확인되며, K-뷰티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 중

K-뷰티 수출액 및 증감율 추이 (백만 달러,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화장품 국가별 수출 시장 규모 (십억 달러,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분기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중국	3,807	24.4	중국	4,882	28.1	중국	3,612	-26	중국	2,777	-23.1	중국	2,498	-10	미국	1,670	18.1
2위	홍콩	715	-22.8	미국	841	17.7	미국	839	-0.2	미국	1,214	44.7	미국	1,906	57	중국	1,577	-11.6
3위	미국	641	21.7	일본	784	22.4	일본	746	-4.9	일본	802	7.5	일본	1,036	29.2	일본	819	10.4
4위	일본	639	59.2	홍콩	578	-9.5	홍콩	394	-31.8	홍콩	502	27.3	홍콩	580	15.5	홍콩	404	3.3
5위	베트남	263	17.9	베트남	304	15.4	베트남	375	23.4	베트남	498	32.7	베트남	538	8	베트남	340	-11.5
	전체	**7,572**	**16.1**	**전체**	**9,184**	**21.3**	**전체**	**7,952**	**-13.4**	**전체**	**8,462**	**6.4**	**전체**	**10,203**	**20.6**	**전체**	**8,500**	**14.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무역협회

② 정책 Focus: 'K-뷰티, 2강 목표 전방위 수출·혁신 생태계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K-뷰티 산업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약속**

- 중소기업 수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바우처 확대 등의 지원을 약속
- 글로벌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금·인력·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도 언급(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될 예정이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 계획도 언급
-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도 확산시키고,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지방 유치를 꾀하는 방안도 포함

■ **'K-컬쳐 문화강국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K-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 2030년까지 K-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
-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제도를 통해 수출 신시장 개척 등의 글로벌화 지원 방침. 이에 인디 브랜드 중심 수혜 예상
- 2025.0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K-뷰티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최우선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를 지원받을 계획

  (1)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약속하여, K-할랄 화장품 수출확대 지원(해외인증 등)등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2)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체험·문화·관광·산업융합)조성을 통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

밸류체인별 정부 지원정책

밸류체인	주요 지원정책 (현황)	2026년 정책 방향 (추정)
원료	• 화장품 원료 관리·안전 기준 강화 및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	• ESG·워터리스·고체제형 확산과 연계해 친환경 원료·지속가능 패키징 R&D 지원 비중 확대
제조/R&D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제형에 '고형제(고체제형)'를 추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중심의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 K뷰티론 정책자금 사업	•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본격화(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기술 교육, 품질·규제 대응 패키지 지원 등) • 정책자금 연장 및 규모 확대
브랜드/기획	• 중소·벤처 K-뷰티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방안(특화된 상담·대응 체계, 신시장 진출 역량(브랜딩, 마케팅, 규제, 물류) 강화, 수출 유망 기업 발굴·육성 등) • 수출바우처 글로벌 마케팅 지원	• 기재부 "한류 연관산업(K-패션·푸드·뷰티)"을 새로운 K-수출 성장동력으로 지목, 연내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유통	• 2025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유통관리 기본계획" 별도 발표(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표시·광고 관리, 리콜·추적관리 체계,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불법제품 단속 등) • 온라인 수출지원·이커머스 지원 사업(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온라인 수출, 글로벌 쇼핑몰 구축, 디지털 마케팅, 현지화(번역) 등을 지원)	• 온라인 유통 규제+육성의 투트랙
수출·해외 마케팅	• 식약처의 국제협력·수출지원 • 관세청 「GLOW-K 수출지원 방안」(2025.9):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통관애로 해소,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후속 3차 수출바우처 공고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상정

자료: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인디브랜드·ODM 중심 성장 주도 전망'

■ 화장품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및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ODM/인디브랜드 중심의 수출 선전 지속 예상

① 개인형·맞춤형 화장품(AI·빅데이터 기반 피부분석 등), **②친환경·지속가능성**(재활용 패키징 의무화 등),

③ 디지털 전환(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마케팅 급성장),**④지역 다변화**(중국,동남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의 수출 확대)

■ (ODM) 글로벌 1위 제조역량으로 K-인디 브랜드를 서포트, 글로벌 대형사 위탁 생산 역시 확대

- K-뷰티의 제조 역량은 글로벌 표준으로, 한국 제조 클러스터의 합산 점유율은 사실상 세계 1위 수준
-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겨냥하여 기획-개발-생산 주기를 압축해서 실행할 수 있음
- MOQ(최소주문수량)의 유연성으로 인해 초기 브랜드의 실험이 가능하며, 히트가 터진 상품은 빠르게 대량생산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
- 글로벌 대형 브랜드도 한국 ODM의 빠른 속도와 경쟁력 있는 단가로 인해 채택하는 경우 다수(로레알, 에스티로더, 랑콤, P&G, LVMH 등)
- 화장품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맞춰 TTM(제품 출시 속도)을 단축하고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강점을 보이는 K-뷰티 ODM의 글로벌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인디브랜드) 수출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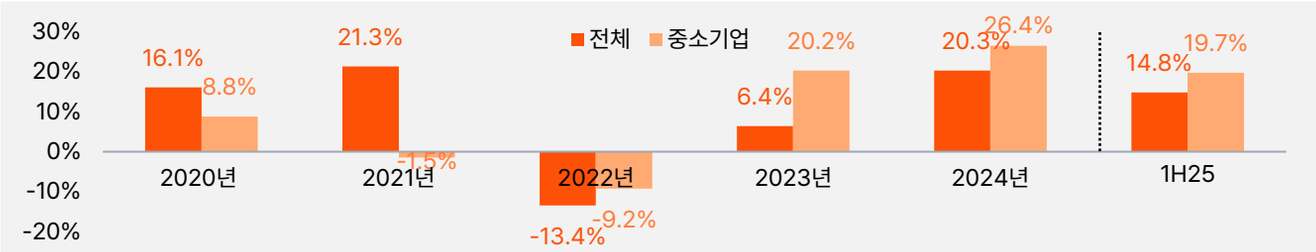
- 화장품은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이며, 인디브랜드 수출 증가율은 2024년 기준 26.4%로, 전체 화장품 수출 증가율(20.3%)보다 약 6%p 이상 높음
- 팬데믹 이후 시장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대기업과 달리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동남아, 미국, 일본 등 시장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
- 향후 철저한 기획력과 유통 전략, 고객분석, 자금운용 등이 뒷받침 되어 매출을 확보한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될 것으로 예상

인디 브랜드 회사 매출액 추이 (억원)

회사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에이피알	2,199	2,591	3,977	5,238	7,228
(주)코스알엑스	803	1,233	2,044	4,862	5,898
브이티	1,074	2,268	2,402	2,955	4,317
(주)더파운더즈	-	299	576	1,432	4,278
(주)구다이글로벌	109	117	413	1,396	3,237
(주)달바글로벌	-	692	1,453	2,008	3,091
(주)크레이버코퍼레이션	292	260	383	798	3,034
(주)티르티르	412	466	1,237	1,551	2,736
(주)비나우	66	238	592	1,148	2,658
(주)마녀공장	393	626	1,018	1,050	1,279

자료:Quantiwise, 각사, 삼일PwC경영연구원

전체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 vs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 증감율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2025년 전년대비성장률은 1H24 누적 수출액대비 1H25 누적 수출액증감률

④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화 가속을 위한 제품, 채널, IP 다각화 필요'

K-뷰티

인디 브랜드의 경우 초기에 빠르게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후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며 고착화

- 초기에는 아마존, 틱톡 등을 중심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리뷰 축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이후 세포라, 얼타, 버라이어티숍 등 주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력을 검증하고 소비자와의 접점 고착화
  -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세포라의 듀얼 전략, 일본은 드럭스토어 및 버라이어티숍 중심, 유럽은 아마존과 드럭스토어 · 백화점 병행, 중동은 리테일 및 약국 체인 중심으로 설계 권장
  - 실리콘투와 같은 글로벌 벤더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 리스크 분산
- 브랜드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K-컬처의 감성(한류, 웰빙, 자연주의, 한방, 미니멀 루틴 등)을 결합하는 전략이 유효

레거시 브랜드의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인디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병행 필요

-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북미 · 유럽 · 아세안 등 유망 시장 타겟 필요
- 인디브랜드에 대한 M&A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체널 경쟁력 강화
  - 국가별 채널 우위, 기존 제품군의 카테고리 공백, LTV/CAC 지표 등을 고려하여 인수대상 선별
  - 인수 후에는 브랜드 · 유통 · 제조 전반에 걸친 PMO를 가동해 SKU 정리, 채널 리밸런싱, ESG 패키징 등 추진
  - 글로벌 유통망 공유하여 인수 브랜드의 해외 진출 가속화

ODM/용기 업체의 경우 CAPA 확충 및 고부가가치 카테고리 집중 전략 필요

- CAPA 확충 시 스마트팩토리 도입, 라인 포맷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
- 미국 OTC 규제를 고려한 선케어 제품 군, 기능성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수익성 제고 추구

① 현황: 'K-콘텐츠, 저성장 환경 속 선별적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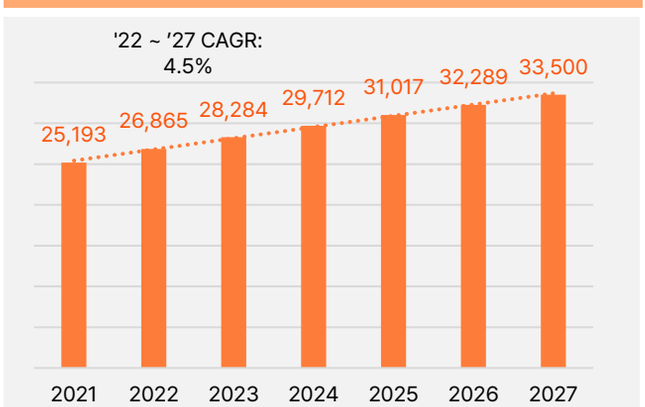
■ 세계 콘텐츠 시장은 엔데믹 이후 다소 위축되면서 성장폭이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2025년은 3조 1천억 달러(+4.4% YoY) 전망

- 팬데믹 기간 실내 생활이 늘면서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야외 활동 재개 및 경기 둔화 영향으로 콘텐츠 소비 다소 위축
- 특히 출판, 방송은 미디어 이용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역성장 또는 성장폭이 더 크게 감소하였으나, 영화/애니메이션/음악 시장은 영화관/공연 부문 회복되며 꾸준히 성장
- 국가별 시장 규모로는 미국, 중국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지만, 인구 및 경제력에 비례해 확대되는 만큼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
- K-콘텐츠의 주력분야인 게임, 음악, 영화, 만화의 비중은 콘텐츠 시장의 10% 내외지만,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성장세는 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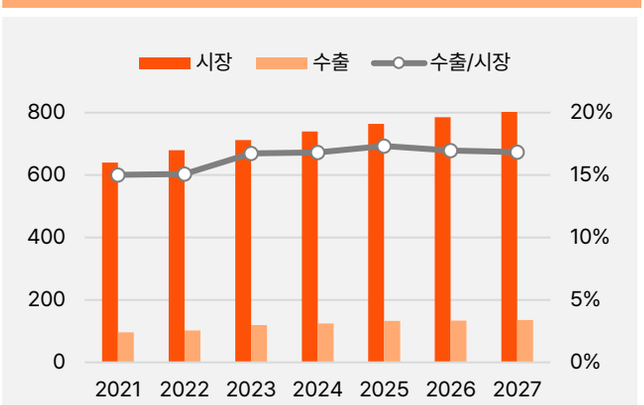
■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는 157.6조원(+2.2%YoY) 로,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시장은 글로벌 예상 성장률('22-'27 CAGR 4.5%)에 비해 낮은 성장률(3.45%)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0-2022년 디지털 중심으로 음악, OTT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관련 시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
-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분야는 방송(-3.0% YoY), 애니메이션(-4.5% YoY)이며, K팝 성장에 힘입어 음악(+7.3%YoY), 웹툰 성장으로 인해 만화(+13.4%YoY)는 성장하고 있음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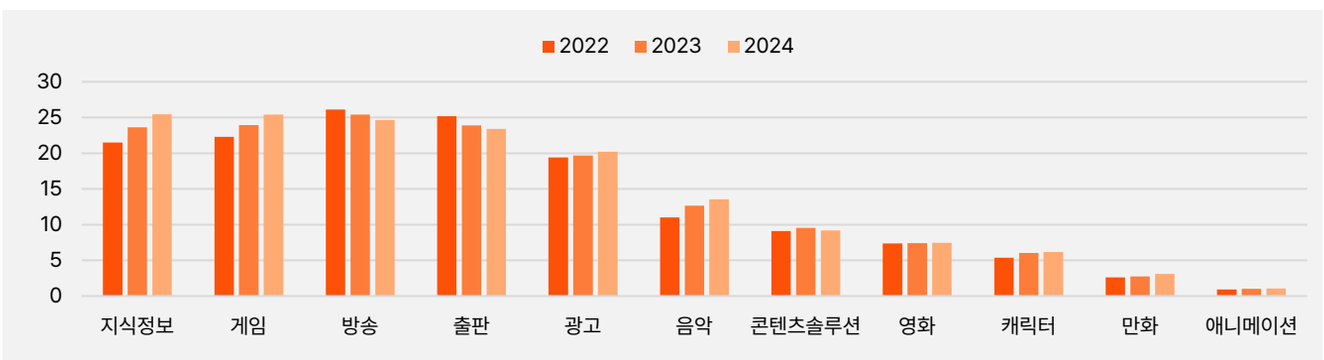


연도별 콘텐츠 매출액 및 수출액 (억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연도별 콘텐츠산업 산업별 매출액 규모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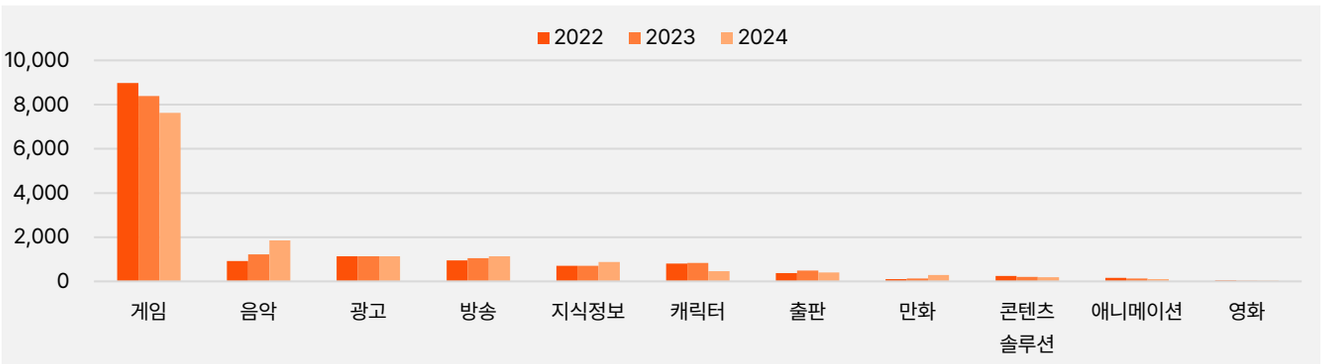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PwC경영연구원

① 현황: '게임·OTT 둔화 속 음악·웹툰 중심 성장'

2024년 수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36억 달러, 2010년 이후 연평균 10.8% 증가

- 팬데믹 시기 디지털 중심으로 음악, OTT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분야는 게임(-9.1%YoY), 애니메이션(-15.2%YoY) 등이며, 특히 비중이 높은 게임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꺾인 상황
- 반면 K팝과 K웹툰의 성장으로 음악(+51.5%)과 만화(+61.3%)분야 수출 증가하였으며, 비중 상 60%를 상회하던 게임은 50%대에 진입하였고, 음악 수출은 10%를 넘어선 14%를 차지
- 2026년 BTS, Blackpink, 빅뱅 등 대형 IP의 동반 활동시기 도래로, 음악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연도별 콘텐츠산업 산업별 수출액 규모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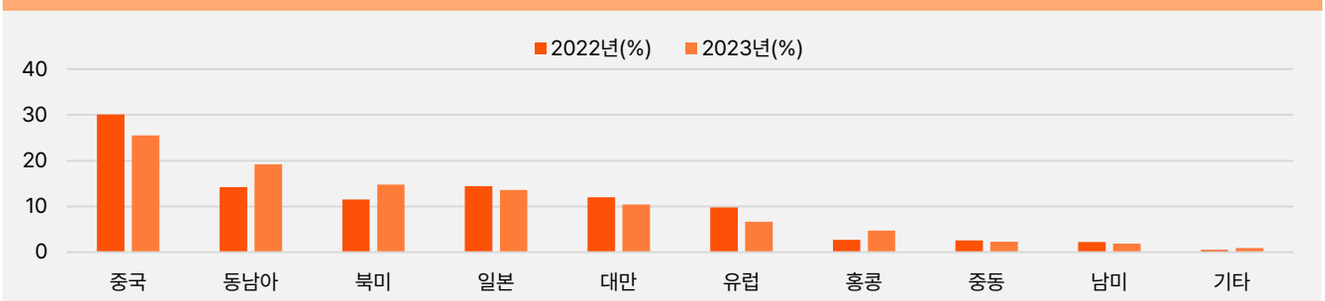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PwC경영연구원

게임의 경우 한한령 여파로 중국 게임사 상장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시장 매출 감소하였으며, 한국 게임 업계의 주력 분야인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게임의 인기도가 하락

- 한국 게임 수출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 시장에서 매출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 모바일과 PC용 MMORPG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해왔으나, 과금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로도 누적되었고, 차별화된 신작 역시 부족한 상황임
-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시장 확대 여부 및 수혜 분야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문화안보 전략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개방하는 것이라 전면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한한령 기간 동안 중국 콘텐츠의 자급 역량이 커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으며, 외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아 언제든 규제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중국, 터키 등에서 개발한 짧고 가벼운 캐쥬얼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국내 게임 수출 국가별 비중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K-콘텐츠, 성장 둔화세를 투자 중심 전환으로 돌파'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소비재 수출 증대 및 방한 관광 확대 등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 둔화 추세로 인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적
-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컬처의 확산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세부 과제 정리

과제명	세부내용	추진기간 (25~'30)
①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육성	콘텐츠 미래전략 펀드 신설	26-30
	K-방송영상·OTT 콘텐츠 및 유통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25
	종대형 공연형 아레나 조성	26-30
	K-아트 신성장동력 활용, 해외진출 지원	25-30
	한국어·전통문화 신한류 성장산업 육성	25-30
	AI 융합 뮤지엄 및 K-뮤지엄 아카데미 추진	26-30
	K-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세계적 확산	25-30
②K-컬처 연관산업 전략적 지원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25-30
	뷰티, 패션 등 중소기업 수출 전문특화 육성	25-30
	K-컬처 연계 통한 K-푸드 홍보	25-30
	K-컬처 활용 K-뷰티 해외 진출	25-30
	K-컬처 연계 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25-30
②K-컬처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고도화	코리아센터 확중	26-30
	K-컬처 해외거점 확대	26-30
	재외공관 활용 K-컬처 확산	26-30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25
	K컬처 봉사단 추진	26-30
	국제스포츠 외교 강화	25-30
④K-컬처의 기반, 문화예술·인문창작 기반 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및 대가기준 개선	25-27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및 복지사업 시범 추진	26-30
	꿈의 예술단 지역·분야별 확대	26-30
	학교 교육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25-30
	문화강국위원회 설치	25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제작비 부담 완화와 수익구조 혁신 추진'

방송·영상 콘텐츠 업계에서는 제작비 증가로 인한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

- 방송 콘텐츠의 경우, 글로벌 OTT에 유통되면서 영향력은 증대하였으나,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있어 성장 한계에 갇힌 상황임
- 이에 구매 여력이 있는 글로벌 OTT와는 달리 국내 OTT·방송사의 경우 드라마 제작 발주를 줄이는 상황
- 최근 넷플릭스 등 OTT에서 회당 출연료 상한선을 정해 제작비 감소 및 제작편수 소폭 증가 예상
- 드라마의 경우 판매, 배급 라인 없이 1-2개의 OTT/채널에 선판매한 뒤 제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부족한 제작비에 대해 추가로 펀드 투자를 유치해도 추가 판매를 못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국내 OTT나 스튜디오 기업이 여러 해외 OTT나 방송 채널로 유통망을 넓히는 것이 병행됨
- 기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작 자금 지원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OTT로 인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것임에 따라 유통 경로 다각화 및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 필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서 '숏폼 드라마'의 등장

- 숏폼 드라마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는 세로형 콘텐츠 형태의 회당 1~2분 내외,에피소드당 50~150편 정도로 구성되는 짧은 드라마로, 자극적이고 빠른 플롯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
- AI를 활용하여 빠르게 극본을 작성하고, 짧은 회차/단순한 서사구조/세로형 화면에 맞춘 단순한 촬영으로 제작비가 비교적 낮아 신생 제작사와 창작자들의 진입이 활발
- 국내 업계는 자극적인 서사진행의 중국 숏폼 드라마에서 탈피하여 K드라마와 웹툰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 숏폼 드라마 플랫폼

플랫폼명	기업명	국적(출시년도)	주요 특징
ReelShort	Crazy Maple Studio/ COL Group	미국/중국 (2022년)	• 중국 웹소설 IP와 플랫폼을 보유한 COL Group 투자한 Crazy Maple Studio(실리콘밸리 소재)가 운영 • 인앱 코인 기반 단편 결제, 광고 시청 모델 • 미국 시장 최대 점유율을 보유했으며, 오리지널 드라마 중심인 미국 현지화 플랫폼으로 주로 서구권 시장 공략
DramaBox	Dianzhong Tech	중국 (2022년)	• 중국 모바일 도서 플랫폼과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텐중테크가 운영하는 글로벌 숏폼 플랫폼 • 미국 시장 2위 점유율, 한국 시장 1위 점유율 • 중화권,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미국, 중남미로 확대 중 • 아시아계 미국인 등 K드라마·중국 드라마 팬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콘텐츠를 번역 또는 재제작
비글루	스푼랩스	한국 (2024년)	• 글로벌 진출 위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8개 언어 서비스 제공 • 영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미국 사업 확대 •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이 1200억원 투자
숏챠	왓챠	한국 (2024년)	• OTT 기업 왓챠가 모바일 최적화를 내세우며 출시 • 한국 외 중국, 일본, 미국 시장 타깃
탑릴스	폭스미디어	한국 (2024년)	• 게임 배급사 네오리진의 자회사 폭스미디어가 개발·운영 • 미국 숏폼드라마 플랫폼인 '플렉스TV'와 협약을 맺고 1000만 달러 콘텐츠 투자 펀드를 결성, 제작 투자 병행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④ 결론 및 시사점: '수출 주도 산업 도약 위해 현지화·맞춤화 필요'

K-콘텐츠

(K-POP) 음반 판매 둔화 지속, 글로벌 확산 전략을 통해 대응

- OST·애니메이션·게임·웹툰 등 융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콘텐츠 다양화 및 IP 확장 필요
- 신흥 시장 투어 및 AR/VR/메타버스 콘서트 등으로 접근성 강화하여 공연 · 라이브 비즈니스 확대
- BTS · 블랙핑크 등을 이을 차세대 글로벌 스타 발굴을 위한 투자 지속

(K-게임) 중국과 MMORPG 게임 위주 수출 전략 탈피, 트렌디한 게임 개발 및 시장 다변화

- 중국 외 대체 시장(동남아·중동·남미 등) 확보하고 현지 퍼블리셔·인플루언서 협업하는 등 맞춤형 현지화 전략 필요
- MMORPG 의존에서 탈피하여 캐주얼·콘솔·클라우드 게임 강화
- 인기 게임 IP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하고, K팝·K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와 콜라보를 통해 팬덤 경제 강화

(K-드라마, 영화) OTT 제작비 증가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성장 한계 타파

- AI·가상 프로덕션 활용해 제작비 절감하고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캐스팅 최적화하는 등 제작 효율화
- 웹툰·웹소설 기반으로 드라마·영화로 리메이크하고 K팝·게임 IP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하여 흥행율 제고
- 숏폼·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강화

(K-웹툰) 글로벌 플랫폼 도약에 주력하며 IP 수익화 전략 구성 필요

- 현지 작가를 섭외하고 번역 품질 개선하여 북미·유럽·동남아 현지화 강화
- 웹툰 → 드라마·영화·게임·굿즈로 확장하여 IP 비즈니스 확대하고 광고·구독·굿즈·IP 라이선싱 병행하여 수익 다변화
- AI 기반 작화·컬러링·번역 자동화로 제작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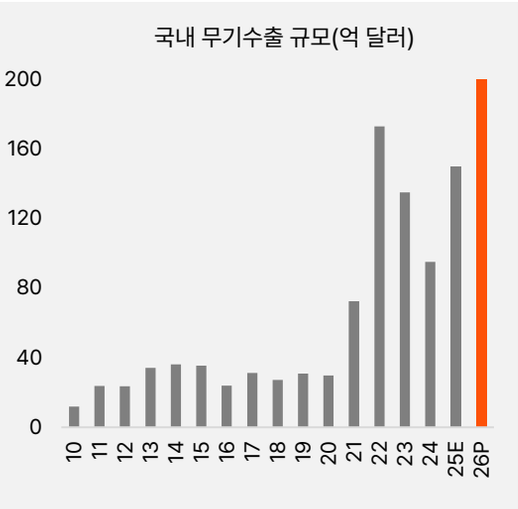
D: Defense

① 현황: '방산 성수기 지속, 대형사 중심 업사이클'

2025년 Review: 방산 수출 확대로 업황 업사이클 지속

- 국내 방위산업은 대형 방산업체 중심의 수주 개선으로 업황 호조. 3Q25기준 대형4사 방산 수주 잔고 100조원 수준
- 국내 방산 수출은 '22년에 사상 최대 기록 후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유럽, 중동 지역에서 '24년 체결된 수출 계약 이행 및 신규 수주로 '25년도 수출 반등. 금년 방산 수출은 약 150억달러 수준 예상
  - 폴란드 K2 전차의 2차 계약 이행 확정, 루마니아 K9 자주포 신규 수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수출의 본격 생산 및 인도로 '25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임
- '25년 국내 대형 방산업체의 방산 매출액은 약 20조원 규모 예상. 업체 전체 매출액은 약40조원, 영업이익은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시장 컨센서스)
-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은 무기 공급 능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유럽의 방위력 강화 목표에 따라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음

방산업체 수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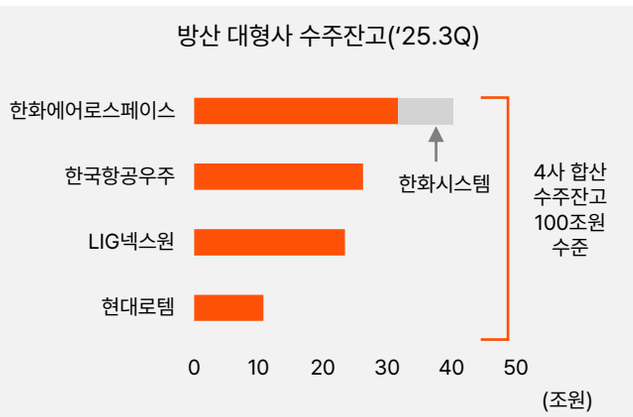
자료: 방위사업청,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수출 품목 및 지역

무기체계	주요 수출 품목	주요 수출국
화력	K-9자주포 탄약류	핀란드,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미국 등
항공	KT-1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경공격기	폴란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태국, 이라크, 필리핀, 세네갈
함정	1400T급 잠수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연안경비정, 함정전투체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영국, 필리핀, 페루
유도	천궁-II지대공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해성대함미사일 등	폴란드, UAE, 사우디 등
기동	K-2 전차, 장갑차, 군용차량, 파워팩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
기타	전투기 창정비, 케이블, 광학부품	미국,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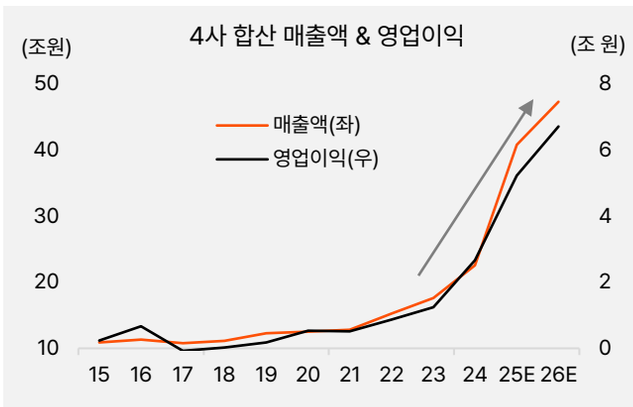
자료: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방위산업 대형업체 수주잔고



자료: 방위사업청, 삼일PwC경영연구원

방산업체 실적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Quantiwise,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상기 실적은 4개사의 연결기준, 방산, 비방산 합산 기준

② 정책 Focus: 'K-방산, 국가 전략산업 패키지 가동'

전략 산업을 방위산업 지정: 신정부 출범이후 K방산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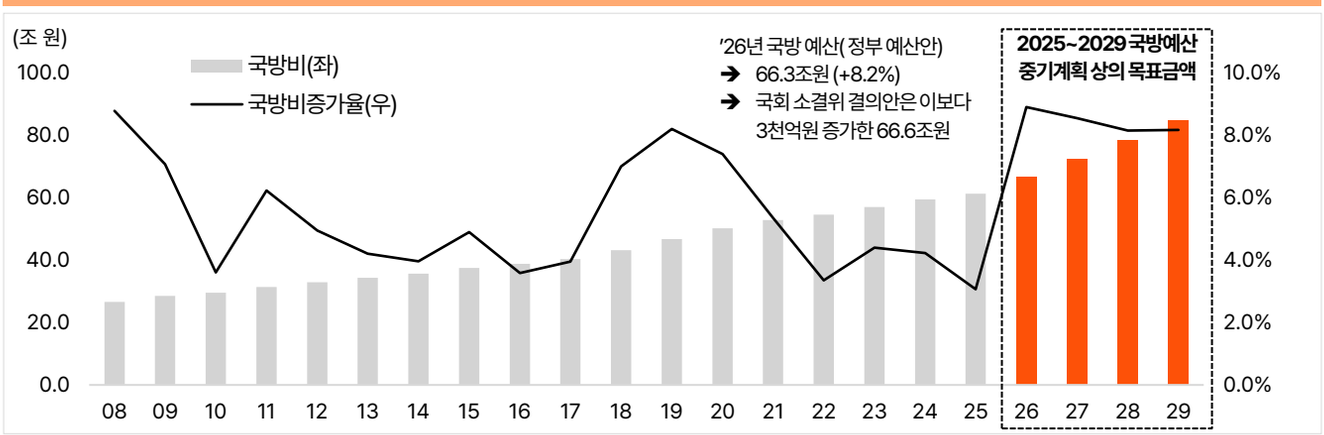
- **[국가 전략산업 위치 재확인]** 방위산업이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부각, 정부는 4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지정. 신정부 관료들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국방예산 증액]**: '26년도 정부의 국방 예산안 66.3조원(+8.2%), 국회 국방위 의결안 66.6조원(+8.7%)
  - 국방 R&D 예산 19.2% 증액, 미래 전장환경 대응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 **[금융/세제지원]**: **방산 R&D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과 정책 금융 지원**
  - '24년 '신성장 · 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25년 7월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1]을 '신성장 · 원천기술'에 추가하여 방산 수출 관련 R&D와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방산 정책금융 목표액 증액: '25년 3.24조원→ '26년 4.0조원 이상, 구매자 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 **[국방 관련 정책 펀드 및 민-관 협력 펀드 확대]:** K- 방산 혁신펀드 및 수출 지원 펀드 결성
  - 정부주도의 2차 방산기술 혁신 펀드 증액 결성('25~'27):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우주·AI·드론·반도체·소재 등 6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
  - 민간 주도로 미래 첨단 방산 혁신 펀드 조성(LIG-IBK 방산혁신펀드, 군인공제회 출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산업 지원 동향

신정부 방위산업 지원의지 확인	• 신정부 공약집에서의 4대 핵심산업 및 26년도 4대 전략 산업 중의 하나로 방위산업 지정 • 대통령 및 정부 관료의 중동 외교를 통한 방산 수출 전폭 지원
국방예산 증액	• '25-29 국방중기계획 기준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증가율 연평균 8% 이상 • '26년 방위비 '19년 이래 최대폭 증가한 66.3조원(+8.2% 정부 제출안 기준, 국회 소위원회 의결 기준으로는 +8.7% 증가한 66.6조원), R&D 예산 5.9조원 책정으로 대폭 증가
금융 및 세제지원	• '24년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 편입, 해당 기술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 '25년 7월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방산 수출 관련 R&D와 시설(설비) 투자금액에 대해 각각 20~40%, 3~12% 투자세액 공제 결정 • 방산 정책금융 목표액 증액: '25년 3.24조원→ '26년 4.0조원 이상
국방 관련 펀드 결성	• K- 방산 수출 펀드 결성: 수출역량 중기·초기 기업에 투자 • 2차 방산기술 혁신 펀드 증액 결성('25~'27):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우주·AI·드론·반도체·소재 등 6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

자료: 언론보도, 국방부, 방위산업청, 삼일PwC경영연구원

국방비 예산 추이('25-'29년 국방중기계획반영)



자료: 언론보도, 국방부, 방위산업청, 삼일PwC경영연구원

1) 글로벌공급망 진입 · 안정화 기술 : 방산물자('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1) 등으로 지정된 무기체계 및 해당 구성품(소재 및 부품 포함)을 국제경쟁력 강화(① 방산수출, ② 공급망 안정화 등)를 목적으로 개조, 개발, 형상변경, 성능개량, 양산하기 위하여 설계 · 제작 · 조립 · 인증 · 시험평가 등의 기술

③ 전망: '지정학 효과로 기술경쟁 국방증액 시대 개막'

2026년 Forecast: 글로벌 방위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

- **글로벌 방위산업 성장 환경 조성**: 글로벌 방위비 지출 증가는 러-우전쟁이 촉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지속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자체 방어능력 강화 강조에 따른 국방비 증액 촉구로 본격화되었으며, 이제 국방력 증가가 기술 경쟁으로 진화하면서 성장세가 기조적으로 변화됨
  -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 따른 글로벌 무력 발생 확대**
  -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의 변화**: 미국 우선주의, 각 국가별 자체 방어 능력 강화 및 방위비 지출 확대 촉구
  - **전쟁의 영역 확대 및 무기체계 고도화로 방위력 강화가 기술 경쟁으로 진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사이버전, 전자전, 무기의 AI 활용 확대로 변모하며 국방 R&D 증액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추세
  - **각국의 자국 방어 강화 정책**: '26년도 미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방예산 승인. 유럽도 GDP 대비 5%까지 방위비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발표, EU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제한 완화

글로벌 분열과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 방위력 강화 태세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성장 지속

지정학적 불안 지속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무기 기술경쟁 심화	자국 방어 강화 정책
• **글로벌 무력 분쟁 발생, 변수에서 상수로 인식** • 국가간 이익 충돌, 자원공급망 불안, 자원·영토 주권 등 이해관계의 상충 확대 영향	• 미국 우선주의, 세계 경찰로서 미국 역할 축소 • **각 국가별 자체 방어 능력 강화 및 방위비 지출 확대 촉구**	• **전쟁의 영역 확대 및 무기체계 고도화** •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 사이버전, 전자전, AI 활용 확대로 변모하여 국방 R&D 증액 필수	• 미국, '26년 역사상 최대규모의 예산 승인 • 유럽, 유럽 재무장 계획에서 **EU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제한 완화**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미국과 유럽의 방위 정책 강화

	정책	주요내용
미국	**국방 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 **한 해에 편성되는 미 국방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 • '25년: 국방 예산 8,952억달러, **미군사 산업 혁신 및 기술 현대화** • **'2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승인(총 9,247억달러(+8.8%yoy))** - **비효율적인 법령 폐지 및 무기 획득절차 간소화** - 유럽, 우크라이나 지원하되 나토 역할 강조 - 무기체계 관련 미래 전장 대비 **무인기의 AI 활용확대, 극초음속기, 6세대 항공기에 중점 투자** - 사이버 보안 분야 및 국방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중점
유럽	**유럽 재무장** ReArm Europe, 25.03	•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 8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 • **'유럽 안보 및 행동(Security and Action for Europe, SAFE)' 프로그램 신설:** EU 공동예산 1,500억 유로를 담보로 회원국들의 방위 장비 공동조달시 저금리 대출 제공 • **방위 예산 확대, 회원국간 공동조달 촉진, 역내 기업 우대 및 역내산 사용** 제안 • **방위비에 대해 EU 재정준칙 예외 조항 허용**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GDP 대비 각각 3%, 60% 이하로 제한에 예외 허용 → 방위비 GDP 대비 1.5% 증액 허용시, 최대 6,500억 유로의 방위 예산 추가 확보 가능 • **우선투자분야: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포병시스템, 탄약 및 미사일 비축, 드론 시스템, 사이버 보안, 군사기동력 및 전력 인프라 보완, 우주 분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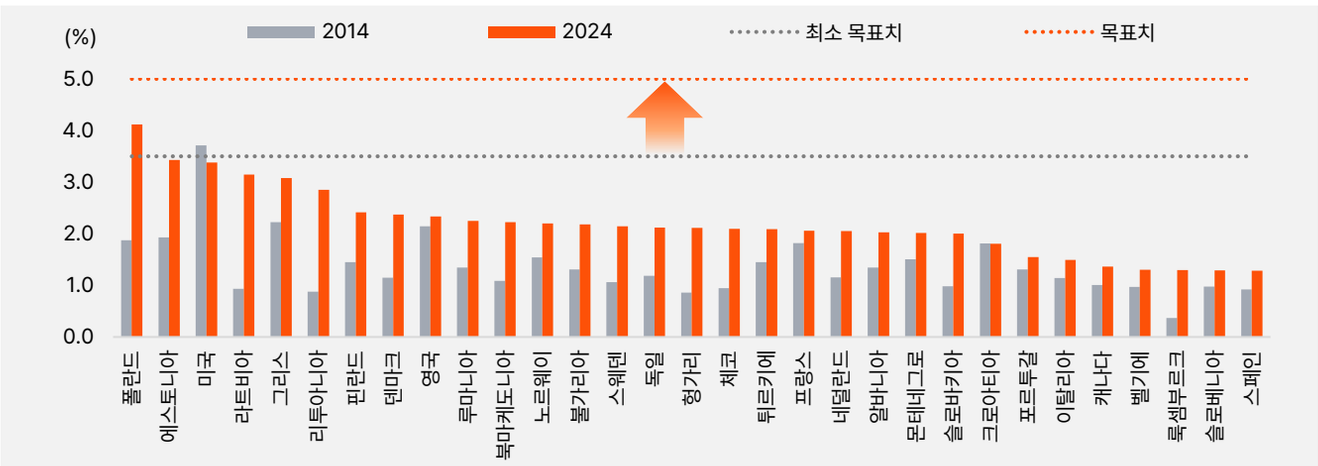
자료: 미국방부, EU집행위원회, 삼일PwC 경Z영연구원

③ 전망: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 수혜 예상'

2026년 Forecast: 유럽, 중동 중심의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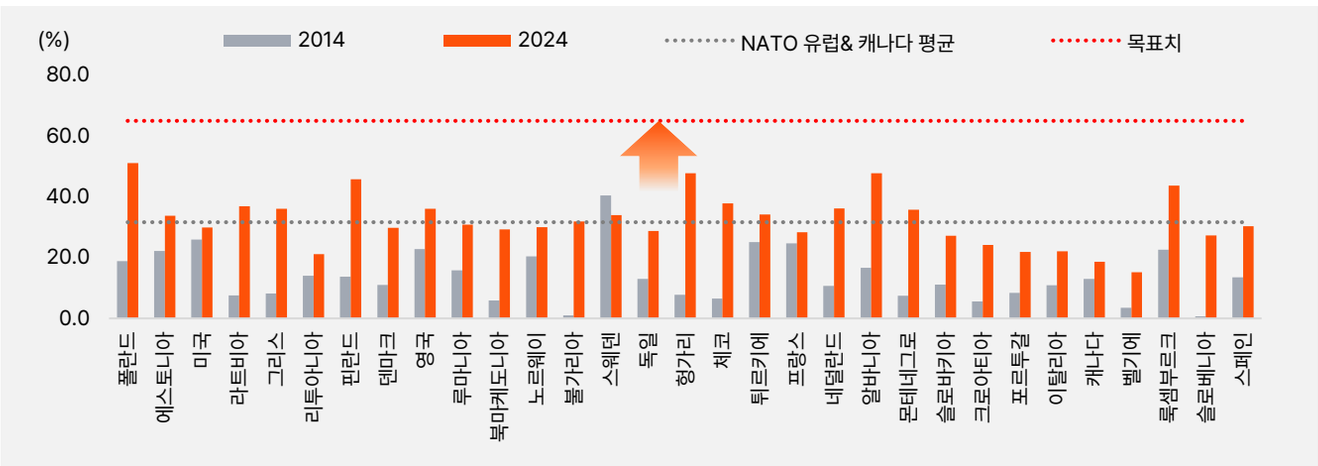
- 무기 재고 자체 확충 여력 부족한 유럽, 무기 현대화 및 재고 확충이 필요한 중동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성장 전망
- 대규모 수주실적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따라 탄약 등의 소모품 후속 수출, MRO 등과 같은 무가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장기 수출 기반 마련
- **[유럽] 유럽 재무장 계획과 NATO의 방위비 확대 결의(헤이그 회의)에 따라 유럽 국가의 방위비 고성장 예상**
  - NATO 방위비 증액: NATO 유럽회원국과 캐나다는 '35년까지 최소 GDP의 3.5%까지 방위비를 지출, 방위비에서 군사장비 지출 비중을 65%까지 상향 시키기로 합의함
  - 이 목표가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방위비 지출은 +73.5%, 연평균 5.7% 증가, 무기 및 R&D 지출은 +256.3%, 연평균 13.5% 증가될 전망. '35년까지 GDP 5%라는 목표를 충족한다면 방위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5%, 무기 및 R&D 수요는 1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 방위비 확충 및 무기 지출 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망 확충 절실하며, 아직까지 무기 재고를 빠르게 확충하기에는 시간 소요

NATO 회원국의 GDP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 및 목표치



자료: NATO, 삼일PwC경영연구원

NATO 전체 방위비 지출 중 군사장비 지출 비중 및 목표치



자료: NATO,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

- **[중동] 유럽에 이은 주요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
  -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방공망(레이더·발사대) 수출, 현지 노후화된 전차와 장갑차의 교체 수요 증가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 글로벌 무기 수입액 상위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다수 국가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건설수주, 원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과의 협력을 이어왔으며, 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 일환으로 방산분야 수출 확대 기대감이 고조됨
  - 중동은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왔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을 중심으로 천궁-II, 비궁, K9, K2 전차, 수리온 등을 수입하였으며 유럽보다 구매 여력이 높고 정부의 외교적 지원과 결합하여 무기 수요 증가할 전망

2026년 Forecast: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 추구

- **유럽: 역내 우선 구매 정책 대응 및 신속 공급을 위한 현지화 수출과 현지화 전략 확대**
  - "Buy European 정책" 등 역내 무기 우선 조달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구매 비중을 전체의 50% 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확대 중
- **중동**: 러-우 전쟁 이전 무기수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방공망 등에 대한 수요 지속. 유럽 다음의 수출 주력지역으로 주목받으며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
-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해군력 증강을 위해 현지화 요구에 대응

방산업체의 현지화 전략

업체명	주요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호주: AS-9 / 레드백 현지 생산 • 폴란드: 천무용 유도탄 JV 설립 및 공장 착공 임박 • 루마니아: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현지 생산 공장 건설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역본부 개설 및 현지화 협의 진행 중
현대로템	• 폴란드: K2 2차 물량부터 현지 생산 예정
한국항공우주	• 폴란드: FA-50PL 부품 현지 생산 및 조립 추진 중 • 페루: FA-50 & KF-21 부품 조건부 현지 생산 MOU 체
한화시스템	•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한 현지 해군 사업 진출 기회 모색 중
LIG넥스원	• 해외 JV 설립 이사회 통과, 천무 수출 이력을 계기로 중동이 될 가능성 높으나 미국, 아시아 등지도 거론중임.

자료: 각사, 언론보도

④ 결론 및 시사점: '현지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성장 기회 선점 필요'

글로벌 방위산업 성장세 지속

- 글로벌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 환경 조성, 각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 지속
- **지정학적 분열 및 무력충돌 리스크는 이벤트적 요소가 아닌 상수로서 인식** → 국방력 강화 요구 증가
- 무기 공급망 확충에는 시간 소요되어 여전히 **수요대비 공급 부족**
- AI, 무인무기 활용 등 미래 전장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무기 첨단화로 기술 경쟁 심화 -> 방산질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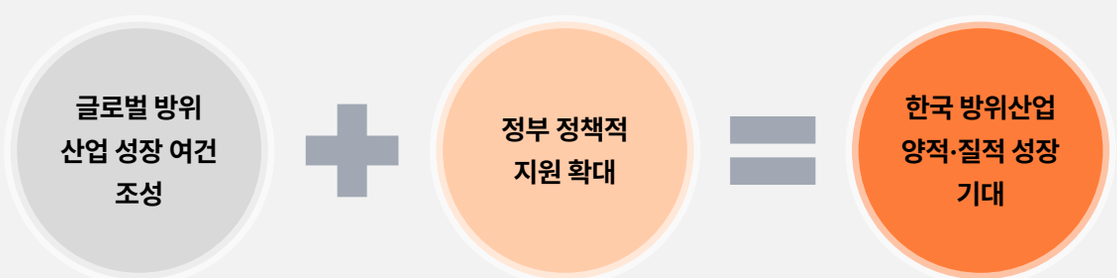
국내 방산 수출 확대 지속

- **수출 지역 다변화**: 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이외의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 등 지에서 한국산 무기 수입 검토, 중동 노후 무기 교체 및 현대화, 전세계적인 지정학적 분쟁 증가에 따라 무기 수요 증가
- **단순 수출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진화**: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대규모 수출 증가 뿐 아니라, 현지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출 확대 모색. 유럽의 역내 우선 구매 정책에 따른 현지 공급망 편입 필요, 현재에서의 원활한 무기 및 소모품 공급을 위해서도 현지화 전략 필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에 박차

- 현재 한국 무기체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지원 확대 및 미래 전장 대비한 R&D 지원 강화
-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 확인,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수출 금융지원, 세제혜택 확대, 방산 벤처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결성 등으로 금융 세제 지원
- 미래 전장 현황 변화에 따라 AI무기, 무인무기, 국방SW 등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R&D 지원으로 미래 전장 대비 및 수출 품목 확대도 기대
- 다만 무기체계 개발·도입·양산의 신속성 및 절차적 측면의 편리성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

2026년 방위산업 전망- 글로벌 방산 성장 환경과 정부지원, 국내 경쟁력 바탕으로 성장 지속 전망



- 각국의 자체 방위능력 향상 기조
- 지정학적 충돌 및 분쟁은 상시 요인으로 변화
- 무기수요는 공급 대비 부족

-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 금융 세제 지원 확대
- 정부의 외교적 노력 강화

- 대내외적으로 방위산업 성장에 우호적 환경과 정부 지원으로 지속 성장 전망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06

E: Energy

① 현황: '태양광 중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성장세'

■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10% 돌파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였음
- 총 발전은 증가, 에너지원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1.7%)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서 가스(+6.0%), 원자력(+4.6%)이 증가한 반면 석탄발전은 감소(-9.6%)

에너지원별 발전량 (GWh)

구분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계**
2023	180,494	184,927	157,749	**56,562**	1,487	3,784	3,044	**588,047**
2024	188,754	167,159	167,205	**63,155**	1,204	4,677	3,413	**595,567**
증감율	4.6%	-9.6%	6.0%	**11.7%**	-19.0%	23.6%	12.1%	**1.3%**

자료: 전력통계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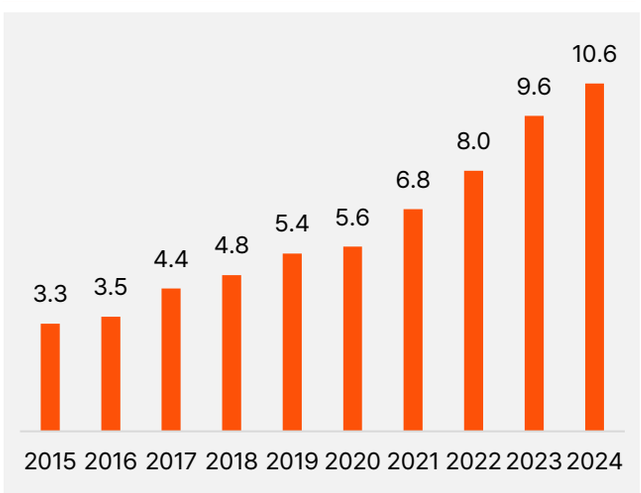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 설비용량이 2024년 대비 3.0GW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년대비 10.8%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
-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체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82.7%를 차지하며 재생 에너지 중 주력 전원으로서의 가능성 재확인

재생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MW)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합계**
2020	**14,575**	1,636	1,806	256	1,322	**19,594**
2021	**18,161**	1,708	1,841	256	1,445	**23,410**
2022	**20,975**	1,893	1,812	256	1,801	**26,736**
2023	**23,943**	2,151	1,805	256	1,811	**29,965**
2024	**27,095**	2,248	1,803	255	1,846	**33,246**
Nov-25	**30,035**	2,386	1,815	255	1,841	**36,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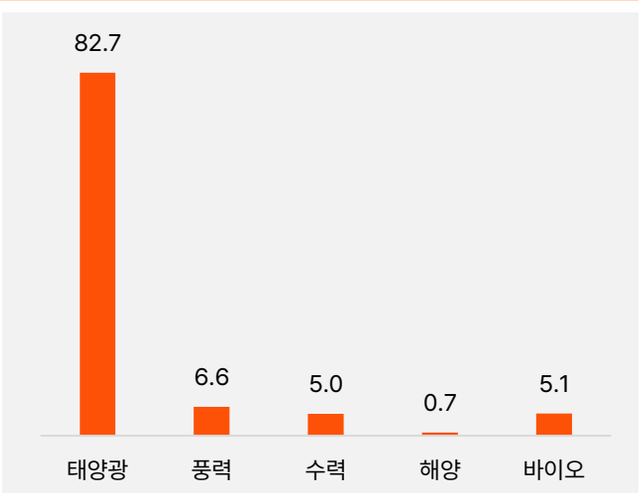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



자료: 전력거래소

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설비 용량 비중 (%)



자료: 전력거래소,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규제 대응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생 에너지 확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

- 정부는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 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무역 장벽 등 수출 대상국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 유지 및 확대,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에너지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전국에 해상망을 구축할 계획
-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연결하며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계 계획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 전국에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여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사업이 포함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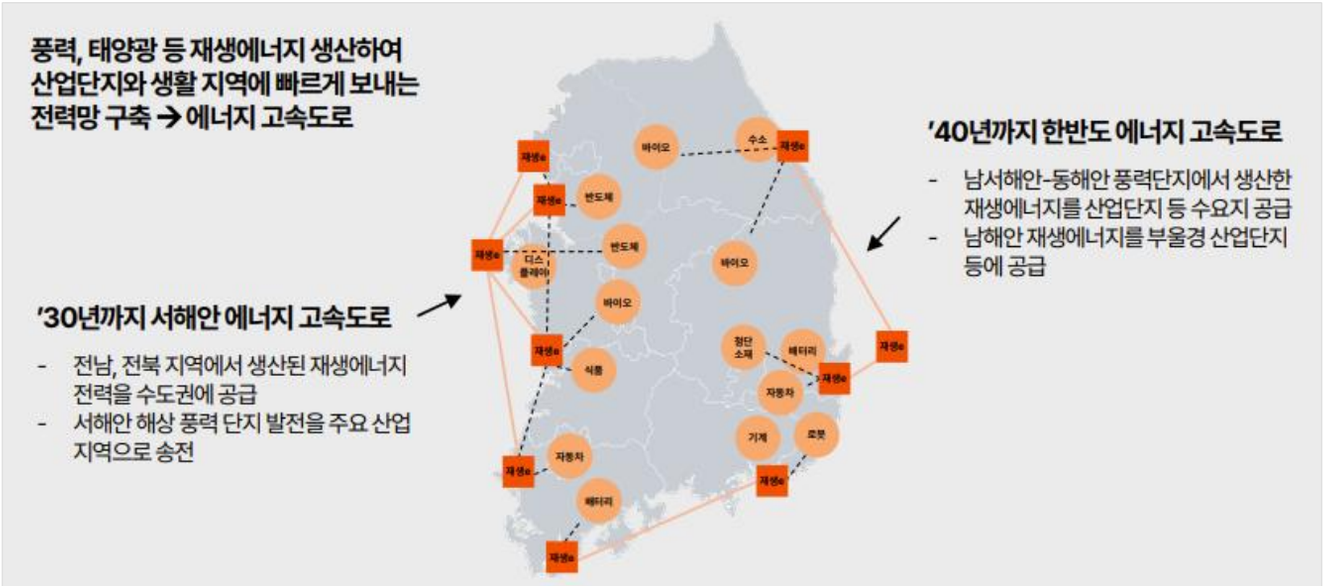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 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의 경쟁력 강화, 히트펌프·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정책, 전기차·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 투자

'햇빛·바람 연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 신안군의 사례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자료: 언론종합

에너지 고속도로 예상(안)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전망: '정부 주도적 해상풍력과 태양광 확산 예상'

2026년 Forecast: 해상풍력 및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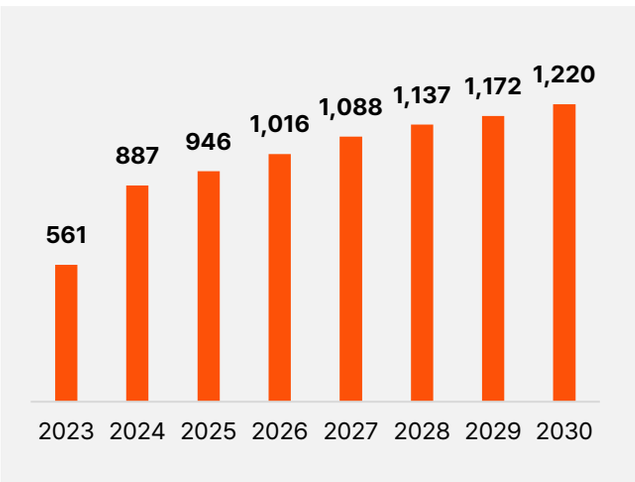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 정부주도 보급: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
- 보급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수용성·인허가 애로 해소 지원
-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등 공공 역할 강화

전략적 태양광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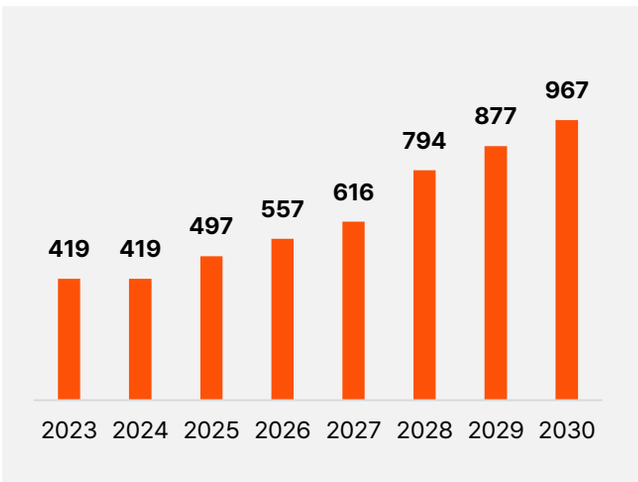
- 우수입지 발굴: 계통·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 계통·주민수용성이 우수한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확산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계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대

연도별 태양광 보급 목표 (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풍력 보급 목표 (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전원 구성 전망 (GW)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합계
2023	24.7	39.2	43.2	31.4	4.7	1.3	144.5
2025	26.1	40.8	47.3	40.8	4.7	1.2	160.9
2030	28.9	31.7	58.8	80.9	5.2	0.7	20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속될 전망

탄소 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량은 흡수원(숲 등)을 통해 상쇄하여 전체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정부 목표 선언: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으며,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

④ 결론 및 시사점: 'RE100 및 저탄소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역적 추세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과 구조적으로 연동되며, 해상풍력, ESS, 분산전원 중심의 전원 체계로 전환
- 태양광·풍력 중심에서 계통 안정성을 고려한 '대규모 해상풍력 + 분산형 전원'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
- HVDC, 에너지고속도로, 계통예측 AI 구축 등이 전환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석탄화력 폐지와 원전 실용 노선 병행

- 석탄화력은 2040년 전면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감축이 진행되며, LNG 전환을 포함한 기저전원 구조 재편이 본격화
- 기존 원전의 안정적 활용·수명연장과 SMR·MMR 기반 수출 전략을 병행해 재생과 원전의 계통 안정성 조합을 확보 필요

수소·AI·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인프라 본격화

- 수소 생산, 도입, 저장, 활용 등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며, 2040년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산업군 확장 필요
- 암모니아 혼소, 수소터빈, 연료전지, 수소 모빌리티 등 다중 수요 기반이 동시에 성장 중이며, 상용화 가속을 위한 실증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AI 기반 계통운영, DERMS, 스마트그리드, AMI 도입이 확대되며, 전력망의 예측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에너지 융합 구조로 전환 필요

거버넌스·법제 정비로 정책 실행력 확보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전환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
- 탄소중립기본법, 전력·수소 관련 법제 개편과 절차 간소화, 국제 규범 대응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인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RE100 및 EU CBAM 대응력 확보

-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규제가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어, 기업의 RE100 이행 및 탈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 과제로 부상
- 송전·재생·저탄소연료 기반을 조기에 확충해, 수출기업의 CBAM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적 대응이 요구됨

AI·데이터센터 전력 안정성

- AI·클라우드·반도체 확대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망 혼잡·정전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상황
- 가상발전소(VPP), ESS, 스마트그리드 등 수요관리 인프라 등을 조기에 도입해 디지털 산업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기반을 마련 필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 확산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역 수용성이 성패를 좌우하며,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참여·이익공유 모델의 효과가 이미 확인되었으며, 지방·농산어촌 중심으로 이 모델을 확산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비수도권 산업 유치까지 연결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
- 해상풍력 및 태양광 확대로 송전망 포화, 계통 접속 대기 등 병목이 심화되고 있어, 송전망 선제 확충, 입지 절차 단축, 사전 컨설팅 제도화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를 해소 필요

에너지 안보 및 공급 안정성

- 재생·원전·수소 등 다원적 전원 믹스로 수입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수전해 단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야 함
- 전원 구성의 다변화와 계통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국가 전력안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07

F: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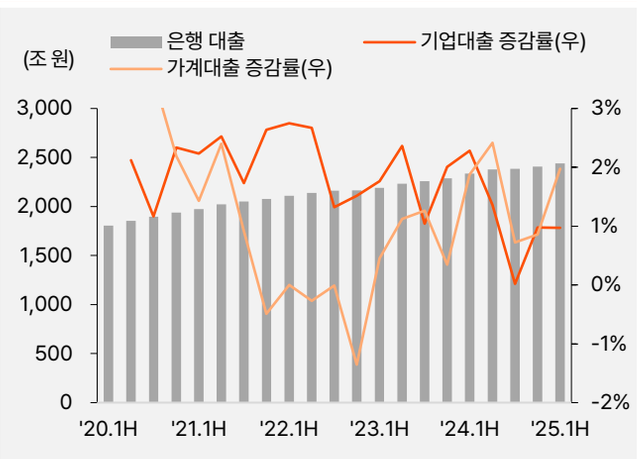
(Banking, Life & General Insurance)

① 현황: '은행산업, NIM 하락에도 순이익 견조'

2025년 Review: 수익성 회복과 건전성 개선이 동시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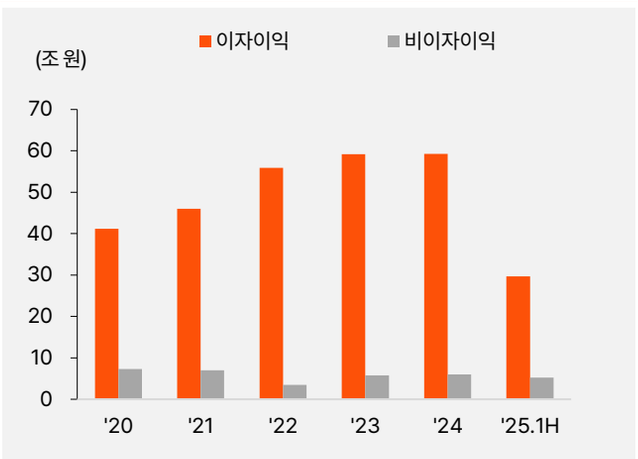
- 은행 대출은 2024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폭이 줄었으나, 2025년 들어 증가 흐름이 회복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25년 2분기 기준 기업대출은 전 분기 대비 1.0% 증감률을 기록하며 완만하게 둔화. 동 기간 가계대출은 증가율이 소폭 확대(2%)되며 최근 2년 중 가장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은행 대출 증가 흐름을 주도
- 이자이익은 2024년 정체 국면에 들어갔으나, 2025년에는 상반기 기준 전년 수준의 절반 수준을 이미 확보하며 기초 체력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동기간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개선 흐름을 지속

국내 은행 대출 및 증감률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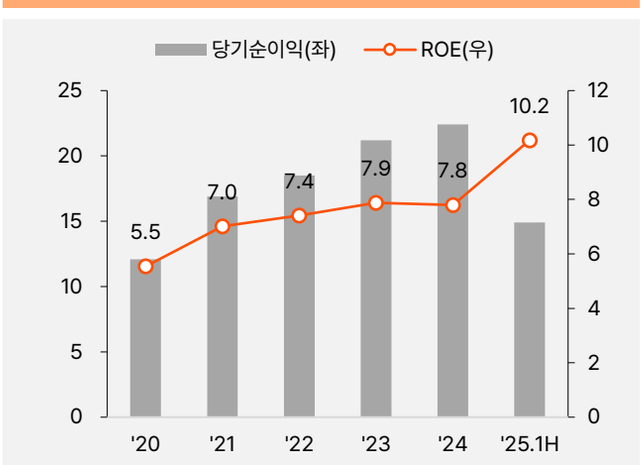
국내 은행 수익 구조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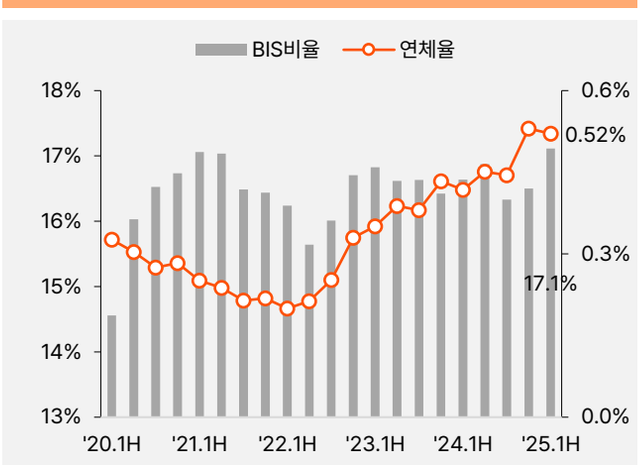
- 당기순이익은 2024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2025년 상반기 이미 전년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 ROE는 2024년에 소폭 하락했으나, 2025년 들어 10%대까지 뛰어오르며 분명한 개선세를 기록
- BIS 비율은 PF 축소와 충당금 부담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개선 흐름이 강화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는 17.1%을 기록.
- 연체율은 2025년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들어 부실 정리와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2025년 1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미세한 변동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는 추이

국내 은행 수익성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국내 은행 자본적적성 및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② 정책 Focus: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대전환'

■ 정부 측, '생산적 금융 + 포용금융'을 통해 이른바 금융 격차 해소 추진

- 이재명 정부는 금융을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하나로 정하고, 지금의 금융시장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배제되는 구조라고 진단
-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혁신·첨단산업 중심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과, 저신용·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을 동시에 추진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진행 현황

시기·행사	핵심 정책 방향	주요 특징(상세)
생산적 금융 초기 선언 2025.07.28	부동산 중심 금융 탈피, 산업·혁신 부문 자금공급 확대	• 금융권이 스스로 PF·부동산 위주 관행을 내려놓고 산업·혁신 분야로 대출·투자 방향 전환 약속 • 기술·설비투자 중심의 여신 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 금융이 "산업성장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금융위 공동 메시지 제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2025.09.15	정부–금융지주 협력체계 구축, 산업지원 강화	• 5대 금융지주와 금융위가 직접 정책 공조 체계를 마련한 첫 공식 석상 • 대규모 국가 성장펀드 조성과 민간 금융의 공동 참여 논의 본격화 • "산업지원 확대하되 리스크 관리도 강화"라는 정부 요구 명확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공식 발표 2025.09.19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 여신구조 혁신	•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 계획 확정 →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본격 투입 • 반도체·AI·이차전지·우주·바이오 등 10대 첨단산업에 금융자원 집중하겠다는 국가전략 공개 • PF·부동산 편중 완화, 기술·미래가치 기반 여신(기술신용평가) 도입 • 금융–산업–데이터 연계 기반의 심사체계(미래현금흐름·사업성 기반)로 전환 시사
업권별 생산적 금융 점검회의 2025.10.24	업권별 목표·실적 점검체계 마련	•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 생산적 금융 목표 수립(대출·투자 규모 포함) • 첨단·전략산업 대출·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마련 • 업권 특성에 따른 지원 방법 제시(예: 보험은 투자, 은행은 여신 중심) • 리스크 높은 산업군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필요성 강조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 발표 2025.11.17	첨단전략산업금융 실행 단계 진입	•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운용 구조·재원 조달 방식 확정 • '26년 첨단기금채권 발행 예정 → 시장형·정책형 자금조달 병행 • 전략산업 대출·투자에 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생태계 구축 • 금융권의 자본투입·대출 확대를 위한 세부 가이드 공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2025.11.18	첨단산업 범위 확대 및 제도 기반 강화	• 지원대상이 제조·기술 산업을 넘어 콘텐츠·핵심광물·우주·신소재 등으로 확대 • 첨단산업의 정의와 범위가 공식 제도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투자 근거 명확해짐 •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 구성 → 정부–민간 전문성 결합 구조 구축 • 정책금융기관(KDB 등)의 첨단산업 지원 권한과 범위 확대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 2025.11.18	생산적 금융 + 포용금융 투트랙 전략 확정	• 취약계층 금리부담 완화, 중신용·저신용자 보증 및 대환지원 확대 •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추심 관행 개선,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강화(고령층·저소득층 대상 지원책 포함) • 금융안전망 구축 → 금융 배제·이자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명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② 정책 Focus: '전략산업·스케일업 중심 금융공급 확대'

■ **주요 금융그룹, 전략산업 대출, 모험자본, 벤처·스케일업 투자 등 향후 5년간 80~110조 원 수준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

-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 국민성장펀드 출자, 모험자본 유도 정책 등 정책 프로그램과의 연계 증가 전망
-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508조 원을 생산적·포용금융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 중 약 70조 원을 포용금융에 배정하도록 유도. 아울러 각 지주의 포용금융 실천계획, 금리 구조,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추심 관행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금융(은행)업계 생산적 금융 추진 내용

금융그룹/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	포용금융·민생지원	특징
우리금융 80조 원 (5년)	**73조 원** • 그룹 공동투자펀드 10조 원 • 그룹자체투자 7조 원 • 융자 56조 원	**7조 원** • 서민금융대출 공급 확대, 정부 연계사업 지원 강화 • 서민금융상품 금융비용 경감 등	•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 생산적 금융 전환 전략 추진 • 우리투자증권 2조 원대 자본 확충 검토 • 증권 중심 벤처·스케일업 투자 확대
하나금융 100조 원 (5년)	**84조 원** • 국민성장펀드 출자 10조 원 • 그룹 자체 투자 10조 원 • 전략산업·기업대출 50조 원 • 중소기업 수출·공급망 지원 14조 원	**16조 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12조 원 • 청년·서민 포용금융 4조 원	• 경제성장전략 TF 구성(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전 계열 참여) • 생산적 금융 중심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자사주 소각·배당 등 가치 제고도 병행
NH농협금융 108조 원 (5년)	**93조 원** • 모험자본·에쿼티 투자 15조 원 • 기업 성장지원 대출 68조 원 • 국민성장펀드 출자 10조 원	**15조 원** • 농업인·취약계층 금융지원 • 우대금리·정책자금 연계	•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신설 • 농업·지역 특화 산업 중점 • 금융권 최대 규모(108조)
신한금융 110조 원 (5년)	**93~98조 원** • 국민성장펀드 10조 원 • 그룹 자체 초혁신경제 투자 10~15조 원 • 전략산업·혁신기업 대출 72~75조 원	**12~17조 원** • 취약계층·서민 신용회복 지원	• 생산적 금융 PMO 신설 • 신한 K-성장·K-금융 프로젝트 • 부동산 중심 구조 탈피 의지 강조
KB금융 110조 원 (5년)	**93조 원** • 투자금융 25조 원 (국민성장펀드 10조 + 자체투자 15조) • 전략산업융자 68조 원	**17조 원**: • 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추진체계 • 생산적 금융 펀드 신규 조성 • 계열사 연계 모험자본 공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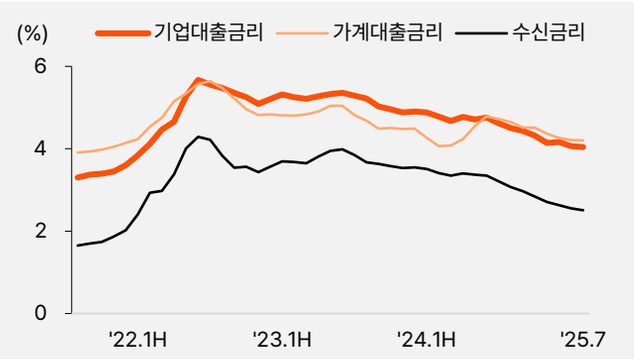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종합

③ 전망: '은행산업, 설비투자·R&D 등 기업여신 중심 성장'

2026년 Forecast: 자본규제 강화와 NIM 하락 압박 속 안정적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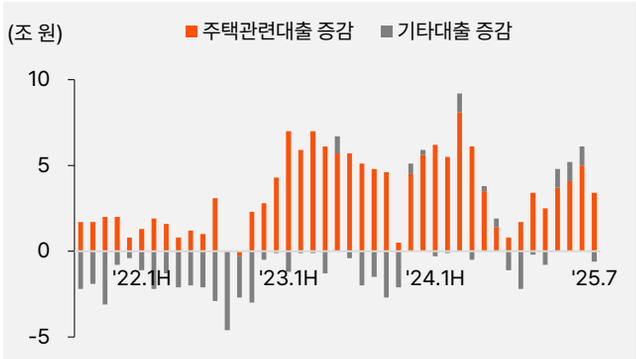
-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DSR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모두 증가 폭은 제한적. 반면, 기업대출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설비투자·R&D·혁신기업 지원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 이에 따라 2026년 전체 여신 성장의 중심축은 가계가 아닌 기업여신이 될 것으로 전망

은행 여수신금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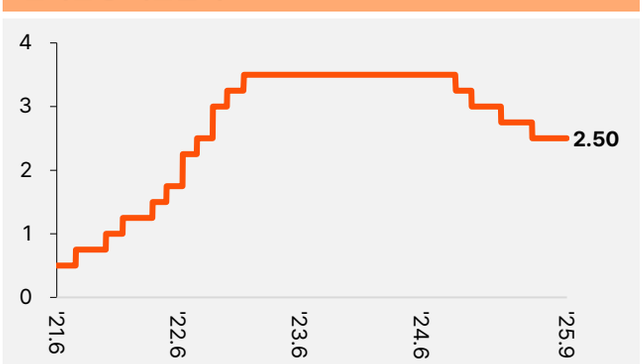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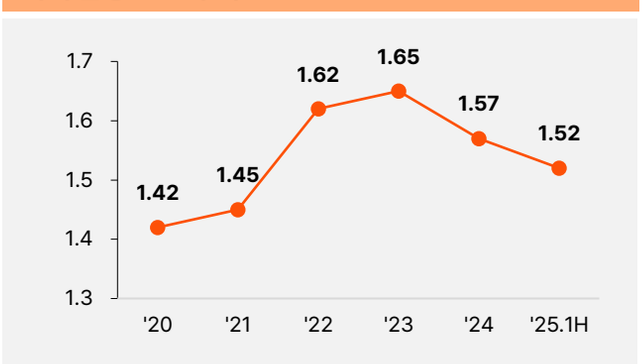
- 자본비율은 2026년에 안정 요인과 부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쇄 국면이 예상됨. PF 부실 정리와 부실채권 매각, 충당금 축소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대손비용이 완만히 낮아지고 건전성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
- 그러나 동시에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RWA) 하한 규제 상향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기업여신 증가 등이 RWA 부담을 키우면서 BIS 및 Common Equity Tier 1(CET1) 등 자본비율에는 하향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국내 은행 NIM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 NIM(순이자마진)은 2023년 정점(1.65)을 찍은 이후 2024년에 하락 국면(1.57)에 들어섰으며, 2025년 상반기 1.52를 기록하며 미세하게 하락하며 고금리 완화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
-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 부담,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압력 등이 겹치면서 2026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더불어, LTV 담합 과징금,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출연, 교육세 인상 논의 등 각종 제재·부담이 더해지면서 비용과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국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자산 증가, PF 정리 이후 충당금 부담 축소 등을 통한 ROE 개선 요인도 존재.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며 지배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ROE 역시 하락보다는 유지 또는 개선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④ 결론 및 시사점: 'ALM 고도화 및 정책 연계 자산 확대에 선제 대응'

은행산업

금리 하락기 예대마진 축소 대응 및 자산·부채관리(ALM) 정교화

- 예금·대출 가격결정 체계 정교화, 중·저신용 및 중소기업군 대상 가격 세그먼트 모델 개발·고도화 역량 강화
- 장기 확정금리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듀레이션 매칭 및 헤징 강화, 예대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고려한 중장기 조달구조 설계 역량 강화 필요
- WM, 외환, 수탁, 기업금융 수수료 수익 강화 등 비이자수익 확대 노력

정책 연계형 자금공급 모델 확립 및 위험가중치 변화 대응

- 정부의 '생산적 금융(혁신·벤처·첨단산업 지원)' 방향에 맞춰 모험자본, 기업성장 금융, 산업전환 금융 등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생산적 금융 확대 시 위험가중치 변동에 따른 BIS, CET1 자본비율 하락 리스크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내부등급법 고도화 등으로 완충자본 확보

기업·산업금융 중심 성장 전략

- 가계대출 규제(DSR·총량관리 등)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금융 비중 확대가 필수적
- 첨단제조·AI·바이오·인프라 등 정부가 지정한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여신을 확대하되, 고레버리지 차주(중견·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 모니터링 강화
- 낮은 자본효율 상품은 축소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금융·WM 중심으로 재배치 고려

디지털 역량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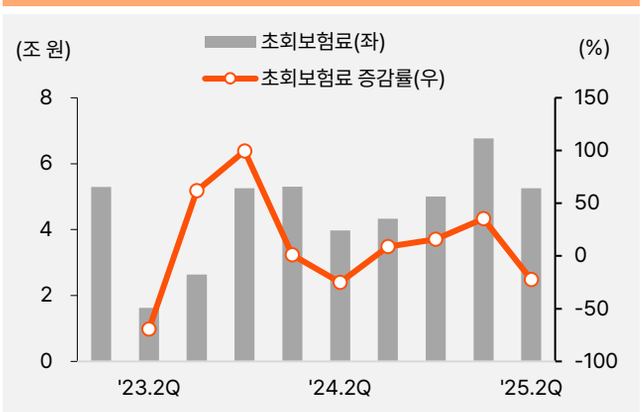
- 심사, 리스크 관리, 사기탐지 등의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고도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
- 편중된 익스포저 축소 및 부동산PF 관련 부실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강화

① 현황: '보험산업, 보장성 중심 재편으로 이익 체력 회복'

2025년 Review: (생명)보장성 중심 전환으로 수입보험료와 수익성 회복, (손해)자동차 및 장기보장 안정화가 보험료 성장과 이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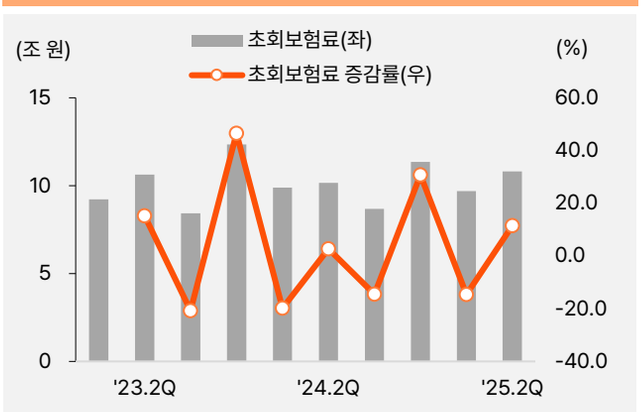
-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저축성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보장성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며 전체 성장을 주도
  - IFRS17·K-ICS 체계가 안착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치매, 간병 등 장기 위험보장 상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보험료 증가를 뒷받침
-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는 자동차·장기보장보험 중심으로 견조하고 탄탄한 증가세를 기록
  - 자동차보험은 물가·정비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조정이 이어지고, 손해율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 또한 건강·상해·질병 장기보장성 상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보험료가 확대

국내 생명보험사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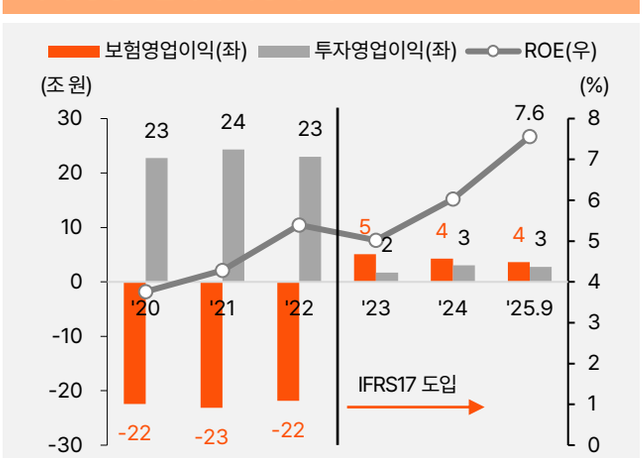
국내 손해보험사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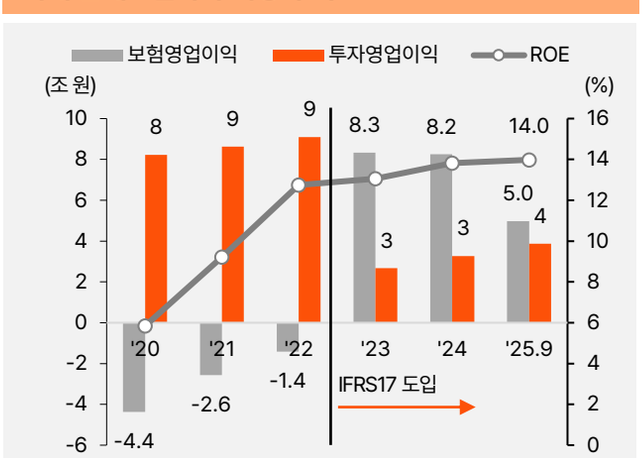
- 생명보험사는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확대로 보험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영업이익도 금리 변동성 완화와 자산 리밸런싱 효과 등이 더해지며 개선세를 보임. 이익 체력의 회복으로 ROE는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상향 흐름을 시현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장기보장 부문의 손해율 안정화가 보험영업이익 개선의 핵심. 특히 자동차보험은 정비·부품비 조정 효과로 손해율 부담이 완화되며 이익 기여도가 높아짐. 이와 더불어, 금리 안정과 위험자산 비중 조정 등으로 투자영업이익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손보사의 ROE은 소폭 개선됨

국내 생명보험사 수익성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국내 손해보험사 수익성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② 정책 Focus: '규제·건전성 체계 정비 및 장기투자 기반 확대'

보험업권, 규제·건전성 체계 정비와 함께 장기투자 및 생산적 금융 기능의 확대 기반 마련 중

- 보험업권에서는 규제·건전성 체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투자 및 생산적 금융 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금융당국은 지분 취득, 대출, 펀드 투자 등 일부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위험계수(위험계정) 및 요구자본 산정 방식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조정안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논의
  - 지분 취득 규제 완화: 기업 지분 투자(PE, 성장지원펀드 등) 확대 가능
  - 대출·대체투자 규제 완화: 회사채·프로젝트 금융 등 영역 확대
  -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자본 부담 완화: 벤처, AI, 탄소중립 등 정책 분야 자금 공급 가능
- 이재명 정부 정책의 지방정부 연계·가계부담 완화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지역경제 및 가계 안전망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참여하는 폭 확대 전망
  - 생산적 금융 기조는 단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 책임·포용성을 강화하는 흐름

보험업계 생산적 금융 추진 내용

추진 분야	세부 내용	정책적 의미
규제 합리화 기반의 생산적 금융 확장	• 지분 취득·대출·펀드 투자 규제 합리화 추진 • 장기자산운용 기반 ALM 관리 강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지원	• 보험사가 실물경제·기업 성장에 직접 자금 공급 가능하도록 규제 환경 개선
IFRS17·K-ICS 기반 건전성 관리 고도화	•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마련(연내)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합리화 검토	• 건전성 신뢰 기반 확보 → 장기자산 투자·생산적 금융 확대 여력 제고
금리·듀레이션 체계 개편 (장기투자 여력 확대)	• 최종관찰만기 35년까지 단계적 확대('35년까지 10년간) • 시장금리 충격 완화를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	• 장기부채 평가 안정성 확보 → 보험사의 장기투자 (인프라·대출·지분) 여건 개선
소비자 환원형 사업모델 확장	•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보험의 서비스화·신탁 활성화 추진	• 장기 운용수익을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 → 보험 신뢰 강화 구조 구축
지자체 상생상품 통한 생산적 기능 강화	• 상생기금 300억 + 소상공인, 저출산, 지방소멸 대응 보험 제공 • 신용·기후·상해·풍수해·화재·다태아보험 6종 운영	• 지방·취약계층·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1년), 계약대출 상환유예(최대 1년)	• 가계의 출산·육아기 부담 완화 →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
불완전판매 근절·소비자 보호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	• 판매수수료 개편, 내부통제 강화(전 주기 소비자 보호 체계)	• 지속가능한 보험산업 기반 확보 → 장기적 생산적 금융 실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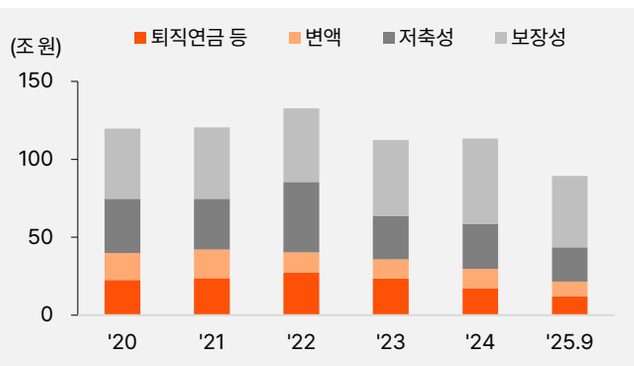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③ 전망: '보장성 확대에도 성장세는 약화'

2026년 Forecast: (생명)보장성 중심 성장세에도 저축성 부진으로 보험료 증가세 둔화, (손해) 자동차 보험 침체와 장기손해보험 둔화로 성장 모멘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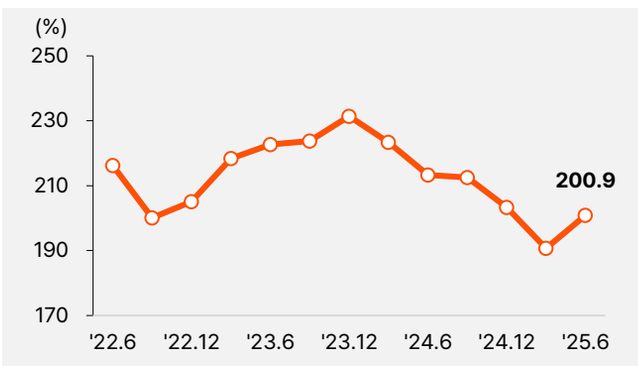
- 생명보험사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확대에 따른 위험보장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며 보장성 보험 중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세제 혜택 축소 영향 등으로 저축성보험 회복 여력은 제한적
- 장기 간병, 치매, 건강 등 관련 상품은 IFRS17·K-ICS 규제 환경 하 보험사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나, 판매 규제 강화 및 공·사보험 연계 논의 등이 본격화되며 일부 보장성 상품은 인·허가 및 요율 조정 가능성
- 생보사의 K-ICS 비율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 약세가 예상되나, 자본여력 및 ALM 수준에 따라 회사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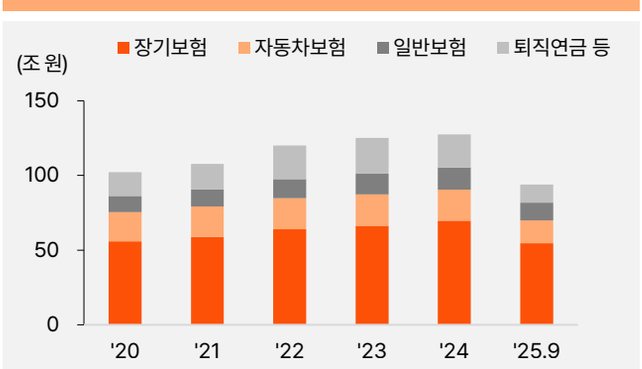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자료: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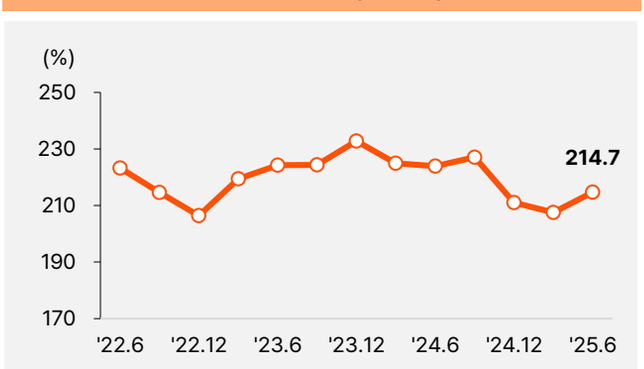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성장은 장기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건강, 상해, 질병 중심의 보장성 상품 수요는 고령화 심화와 의료비 부담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날 전망. 다만 실손보험은 손해율 관리 강화와 상품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되면서 성장 기여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부품비 상승, 전기차·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수리비 구조 변화 등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비수가 제도 개선과 손해율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손해율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며 보험료 증가세에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
- 손보사의 K-ICS 비율은 자동차·실손 중심의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며 소폭 하락 압력이 예상

국내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국내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자료: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④ 결론 및 시사점: '건전성 방어·리스크 관리와 생산적 금융 간 균형'

보험산업

금리 하락기 건전성 방어와 ALM 안정화

- 장기금리 하락으로 부채 현가가 커지며 K-ICS 비율이 악해질 수 있어, 장기채권 확충·헷지 강화·듀레이션 조정 등 안정적 ALM 운용이 핵심 과제로 부상
- 금리 변동성 축소 국면에서 자산 리밸런싱 검토 필요, 해지율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별 자본부담·환산손실 등 관리 강화, 부채 듀레이션 증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확정금리 상품 취급 시 ALM 영향 평가 강화 필요

생산적 금융·정책 연계 투자 대응 및 자본규제 변화 준비

-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인프라, SOC, 혁신기업 등 장기자산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 심사 역량, 전문인력 확보, 내부 기준 정비 등 필요
- 비상장, 장기주식, 인프라 등 관련 위험계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본효율성 기반의 장기투자 전략을 사전 모델링하여 자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생산적 금융 확대가 K-ICS 비율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완충자본 확충 검토

보장성 중심 성장 및 리스크·운영체계 고도화

- 고령화·의료비 확대 흐름에 맞춰 간병, 치매, 건강보험 등 장기·위험보장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수적이며, 공·사보험 연계 및 판매규제 강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상품 구조·요율 설계 재정비 필요
- 실손·자동차 등 손해율 변동성이 큰 영역은 언더라이팅 강화, 예측모형 정교화 등을 통해 영업이익 안정성 확보 필요
- IFRS17 체계 하 계리 가정 정교화, CSM 관리 및 데이터 기반 리스크 고도화 필요

08

S1: Semiconductor

① 현황: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가시권'

2025년 Review: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

- 메모리 중심인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로 2025년 고성장세 기록
- AI 인프라 외에도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상반기 소비 진작 효과, 미국發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전방시장의 선제적 재고 확충 수요가 맞물려 메모리 전반의 가격 상승 견인

> **(*)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중국의 설비 교체 지원 정책으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IT 기기와 가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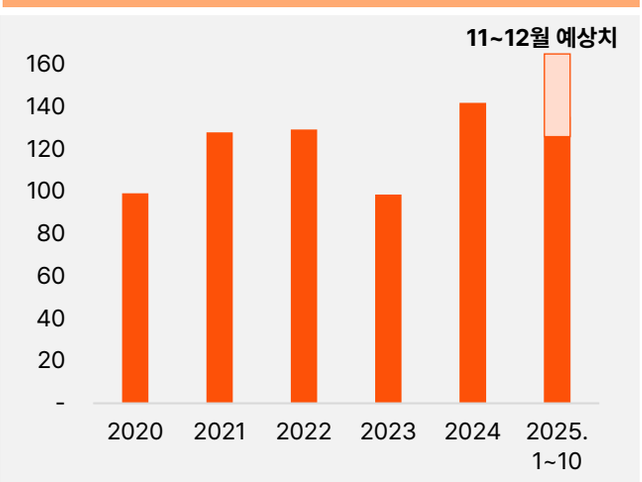
- 또한, 주요 메모리사는 HBM 생산 확대에 따라 범용 DRAM 생산 라인을 점진적으로 HBM 설비로 전환
  → 범용 메모리에서도 공급부족 · 가격 상승 발생
- AI 인프라 투자의 낙수효과와 메모리 단가 상승에 힘 입어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 중(10월 누적 1,354억달러)
- 과거 5개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에서 11~12월 수출 비중은 평균 18%
  → 2025년에도 동일 비중 적용시 연간 수출액은 1,655억달러 예상(전년 수출 대비 +17%)

2025년 메모리 업계 성장 요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국 이구환신 정책	IT 기기·가전 보조금 정책으로 전방수요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최종 소비자 브랜드의 재고 선주문 효과							
AI 가속기용 HBM 수요 증가	범용 DRAM 생산 라인, HBM 설비로 점진적 전환 → 범용 메모리까지 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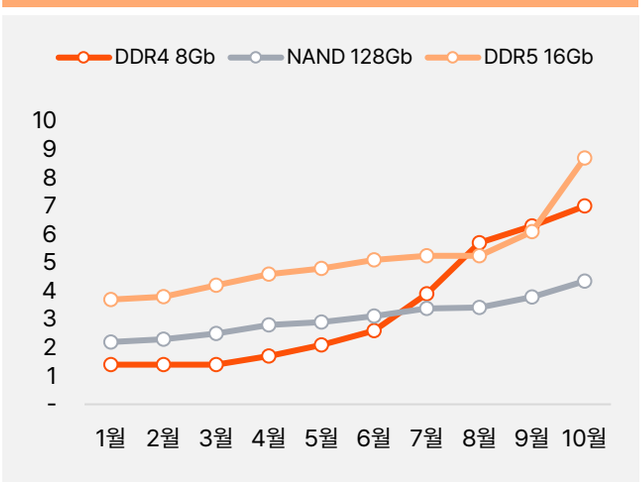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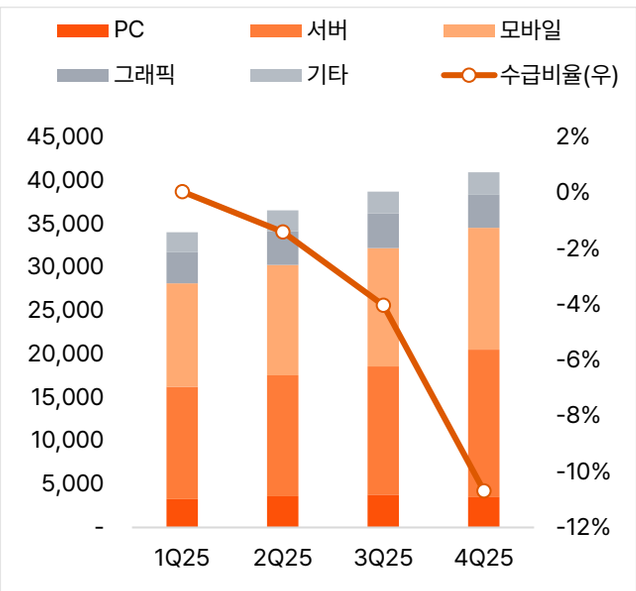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산업통상자원부

① 현황: '메모리 vs 비메모리 격차 확대'

2025년 Review: 메모리 호황에 가려진 비메모리 존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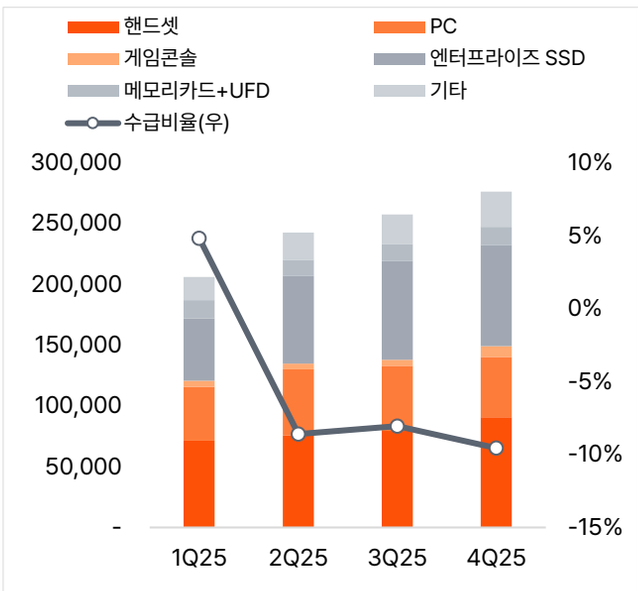
-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 야기 → 2025년 4분기 글로벌 DRAM 공급량은 수요량 대비 11% 부족 추정
- 데이터의 빠르게 처리하는 DRAM 뿐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물을 저장하고 불러낼 수 있는 저장 메모리 NAND 수요도 급증
  → 최근 AI 모델 개발의 중심 축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전송 지연이 적고 저전력의 강점을 지닌 SSD 사용 증가

글로벌 DRAM 수요 및 수급률 (Million 2Gb)



자료: 업계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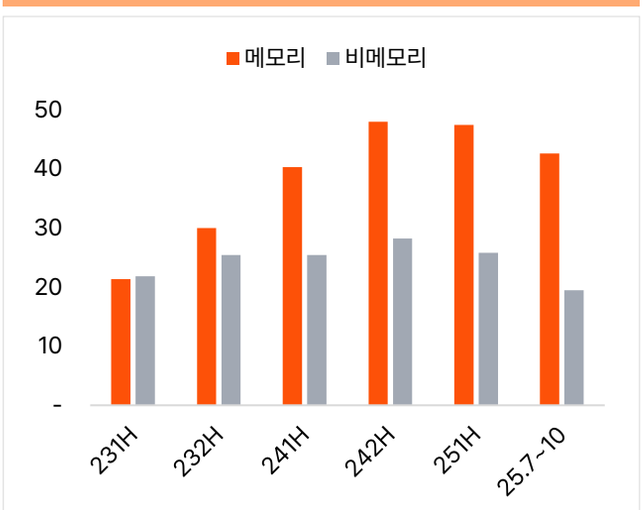
글로벌 NAND 수요 및 수급률 (8Gb M. Equiv.)



자료: 업계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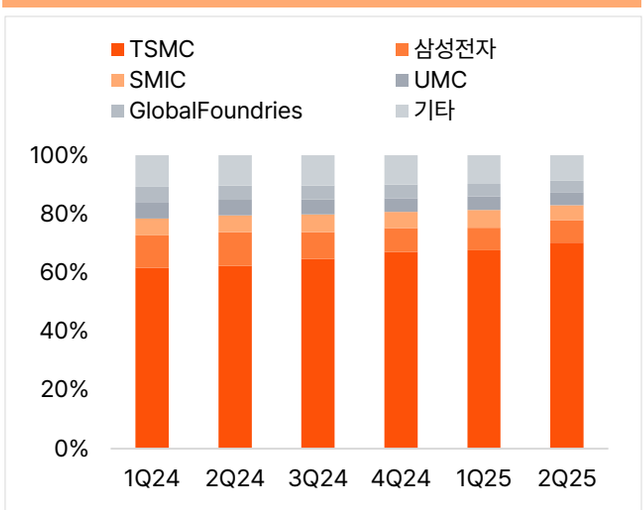
- 한편,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달리 국내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둘 간의 수출비중 격차 확대
  (한국 비메모리 수출 비중 2023년 상반기 51% → 2025년 하반기 31%)
- 파운드리에서는 TSMC의 독주가 심화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이전보다 확대
  (양사 간 비중 격차 2024년 1분기 51%p → 2025년 2분기 63%p)

한국의 메모리 · 비메모리 수출액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자료: TrendForce

② 정책 Focus: 'GPU 확보·특화칩 자립의 투트랙 전략'

선택과 집중: 범용 GPU는 대량 구매 & 특화 AI 칩은 자체 개발 지원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GPU 대량 확보, AI 인프라·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
- 반면, 온디바이스 AI·전력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내재화 함으로써 기술 자립 추진
- 이 외에도 유망 기업 발굴의 마중물이 될 정책금융 확대(국민성장펀드 조성, 반도체 분야 약 21조원 지원 예상), 수출 불확실성 완화(강력한 반도체 관세 정책을 예고한 미국과 협상하여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등 다각도로 반도체 산업 지원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동향

세제개편안 (2025.07)

- R&D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추가(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등)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AI 분야 추가(AI 데이터센터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 (2025.08)

-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반도체 포함
  - ✓ 자율주행 등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탑재 제품 출시 목표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SiC 전력반도체 포함
  - ✓ 약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기술 개발, 인재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 계획(기술자립률 현재 10% → 2030년 20% 목표)

한·미 관세협상 (2025.07~11)

-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쟁국(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 적용 합의
- 다만, 아직 반도체 관련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확정 상태

국민성장펀드 (2025.12 출범 예정)

-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10대 첨단전략산업 및 게임·콘텐츠 분야에 적극 투자 예정
- 이중 75조원은 정부 기금으로, 나머지 75조원은 연기금·민간금융·일반 국민 공모자금으로 조성하되, 정부 재정이 투자 위험을 선부담함으로써 민간의 참여 유도
-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는 20.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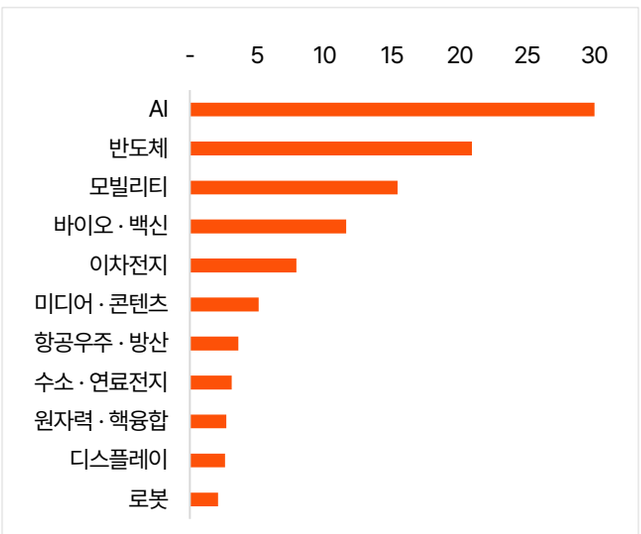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2026년 예산안 중 반도체 관련 사업 예시 (억 원)

주요 내용	2026 예산	비고
GPU 서버 확충	13,9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U 통합운영 환경구축	6,8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1,851	산업통상부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6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559	산업통상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10)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지원금액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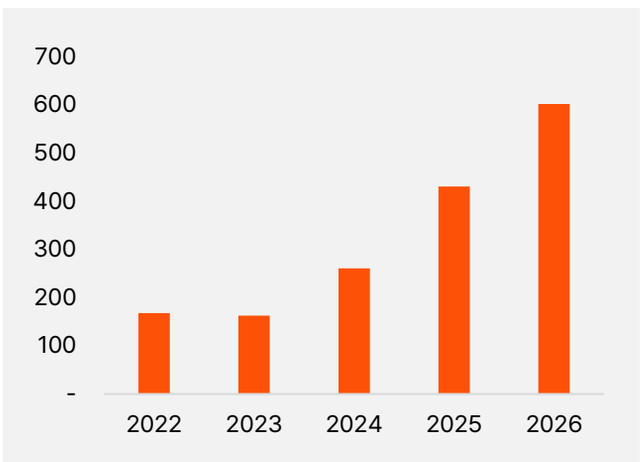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③ 전망: '슈퍼사이클 동력 지속'

2026년 Forecast: 내년에도 이어질 AI 낙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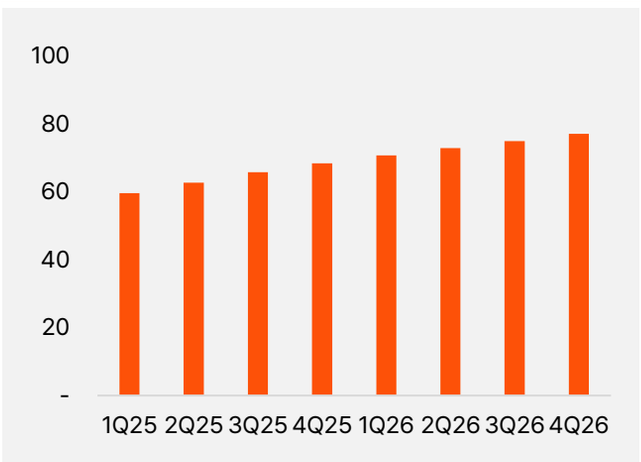
- 빅테크의 AI 워크로드 증가 및 데이터센터·서버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AI 가속기 중심의 구조적 성장세는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반도체 시장 규모 2025년 대비 +18% 성장 예상)

주요 빅테크 설비투자 규모 (십억 달러)



(*) Amazon·Google·Meta·Microsoft·Oracle·Alibaba·Baidu·Tencent 합산 기준
자료: TrendForce, 언론종합

글로벌 데이터센터 공급 규모 (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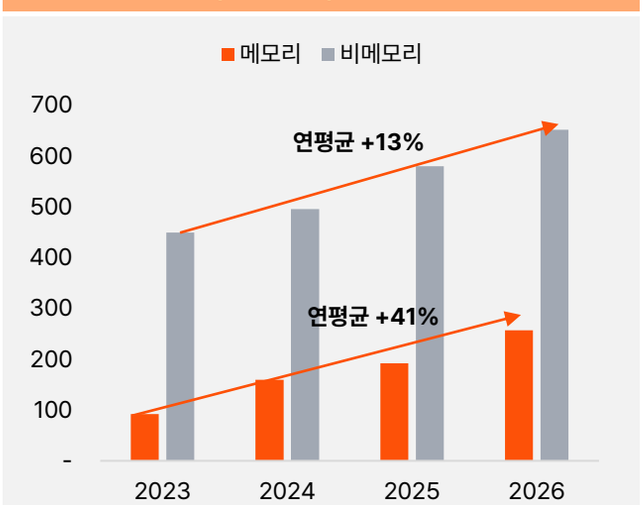
자료: Goldman Sachs, Statista

- 2025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Stargate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OpenAI는 양사에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 공급 요청 → 월 90만장은 글로벌 HBM 생산 능력의 약 2배 물량

  (*) Stargate: 2029년까지 5천억달러가 투입될 미국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OpenAI · SoftBank · Oracle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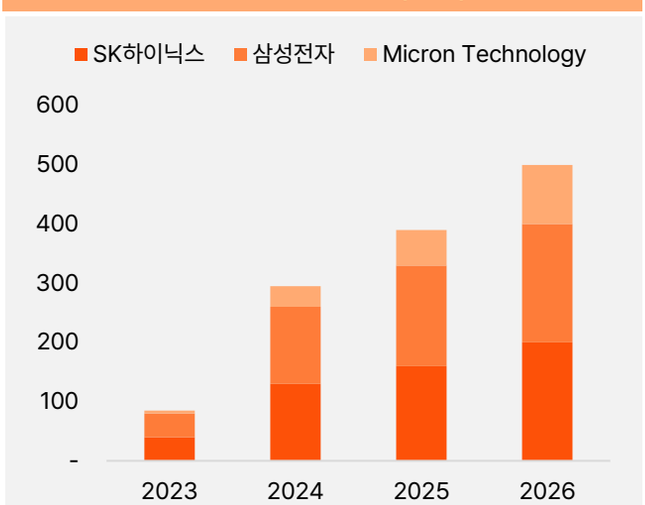
- NVIDIA·AMD의 AI 가속기에 탑재될 HBM4(6세대) 양산·납품도 임박해 HBM 공급 부족 심화 가능성

반도체 시장 규모 (십억 달러)



자료: 업계자료, 한국무역협회

DRAM 3사 HBM CAPA 추정치 (K/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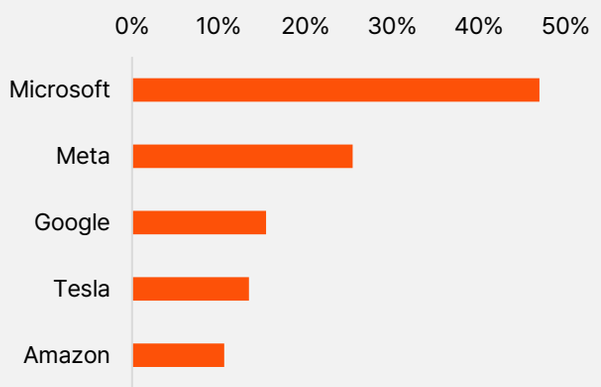
자료: 업론종합, 신한투자증권

③ 전망: 'AI 칩 다각화도 기회요인'

2026년 Forecast: 글로벌 脫NVIDIA 시도는 K-메모리 · 파운드리에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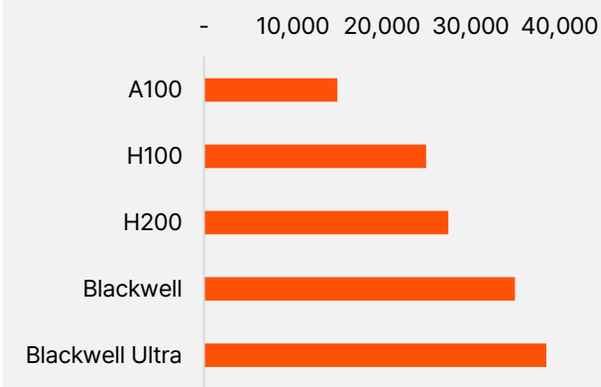
- AI 반도체를 NVIDIA GPU가 독식하고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요 빅테크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빅테크들의 NVIDIA 의존도 감소 노력과 AI 반도체 다각화로 인해 국내 메모리 업계는 NVIDIA 외 다른 업체로 공급처가 확장되고 가격 협상력도 함께 높아질 전망
-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esla의 자율주행 칩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파운드리에서도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2026년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팹에서 Tesla AI 칩 생산 예정

빅테크의 NVIDIA 의존도



자료: Bloomberg(조회기준일 2025.11.10)

NVIDIA 주요 제품별 가격 (달러)



자료: 유안타증권

주요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동향

구분	주요 내용
Google	• 맞춤형 AI 반도체 Tensor Processing Unit(TPU) 자체 개발 → 2025년 11월, 차세대 TPU Ironwood 공개
Microsoft	• 2023년 AI 학습 · 추론용 자체 설계 칩 Maia 100 공개 → 차세대 칩 Maia 200, 2026년 상용화 목표
Amazon	• AI 훈련용 칩 Trainium, 추론용 칩 Inferentia 개발 → 2025년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자체 칩 Trainium2를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단지 개소
Meta	• AI 모델 Llama 운용을 위한 자체 AI 반도체 프로젝트 MTIA 진행 중
Tesla	•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AI5 2027년 양산 목표

자료: 언론종합

Tesla AI 반도체

구분	특징	생산 공장	양산 시기
AI4	모델Y 등 현재 생산 차량 탑재	**삼성전자**	2023년부터 양산
AI5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TSMC, **삼성전자 테일러 팹**	2026년
AI6	차량 · 데이터센터 겸용	**삼성전자 테일러 팹**	2028년

자료: 언론종합

④ 결론 및 시사점: '전 공정·팹리스 전반 정책 지원 강화 필요'

시장 전반의 성장세

- 전방 수요인 AI 개발 경쟁 및 데이터센터 증설이 계속됨에 따라 **2026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성장 지속 전망**

반도체 다변화에 따른 메모리·파운드리 수혜

- Google, Tesla 등 주요 빅테크들은 NVIDIA GPU를 대신할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중
-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등 메모리 수요 성장과 고객 다변화 효과 기대**
-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의 실제 생산을 담당할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고객 다변화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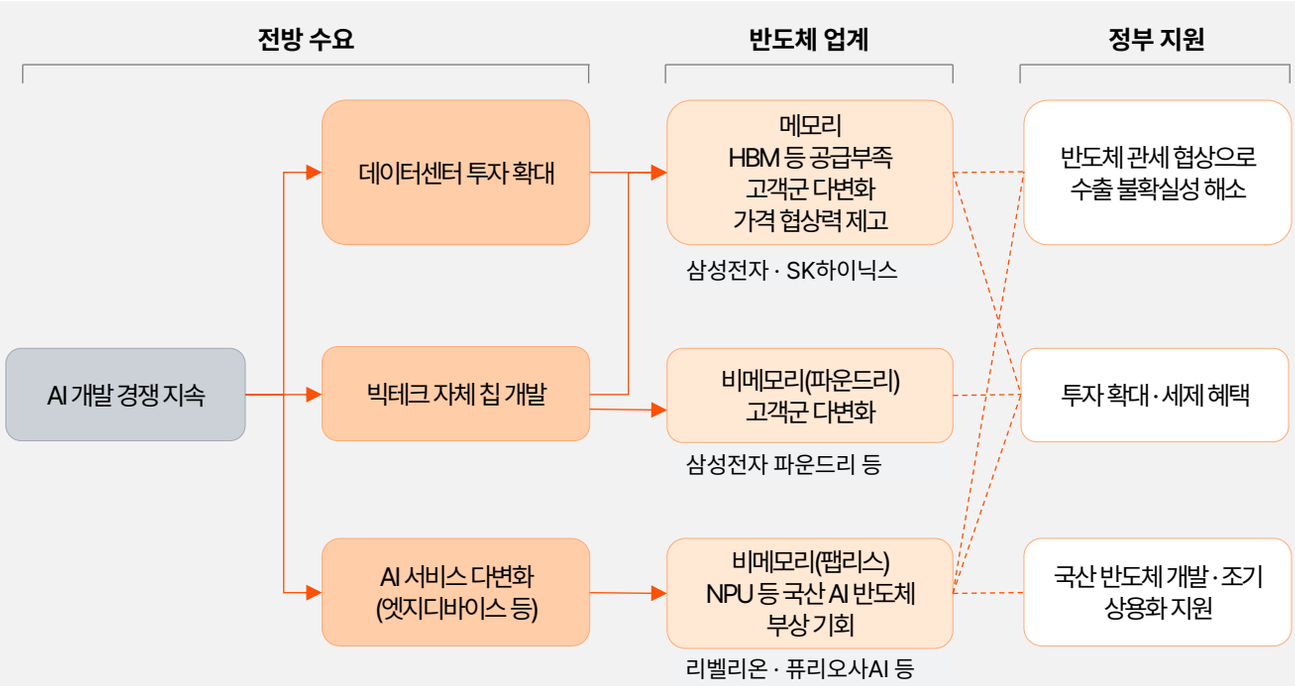
AI 서비스 다변화·소형화에 따른 팹리스 수혜

- AI 모델이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발전하고, 엣지디바이스 등 소형화·최적화된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범용 GPU가 아닌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가 부상할 가능성** 존재

반도체 관련 정책 효과 기대

- 이러한 가능성 속에 투자 지원과 수출 불확실성 해소 등 정부 지원책이 마중물이 되어 2026년 국내 반도체 업계 호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팹리스 스타트업, 장비 업체 등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제공될 수 있는 **핀셋형 지원책, 지속성 있는 정책**이 중요

2026년 반도체 산업 전망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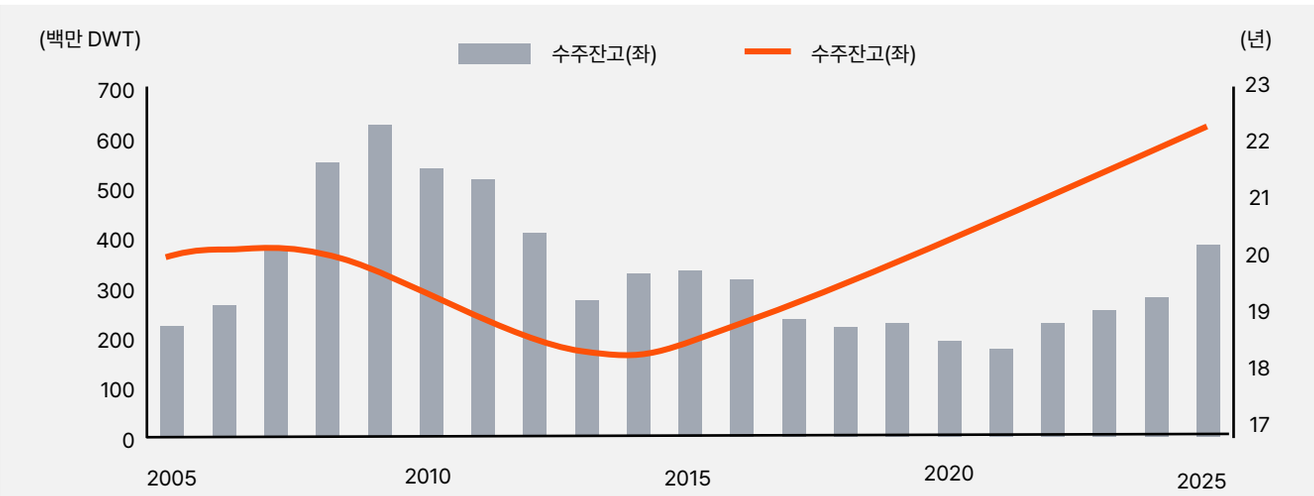
S2: Shipbuilding

① 현황: '발주 폭주 후 조정'

글로벌 조선 경기 사이클 위치

- 2021~22년 신조 발주 폭증 이후, 2025년은 조정 국면
- 전세계 수주잔고는 여전히 높지만, 1998~2015년 인도량 감안 시 교체발주 여지는 충분

글로벌 수주잔고와 평균 선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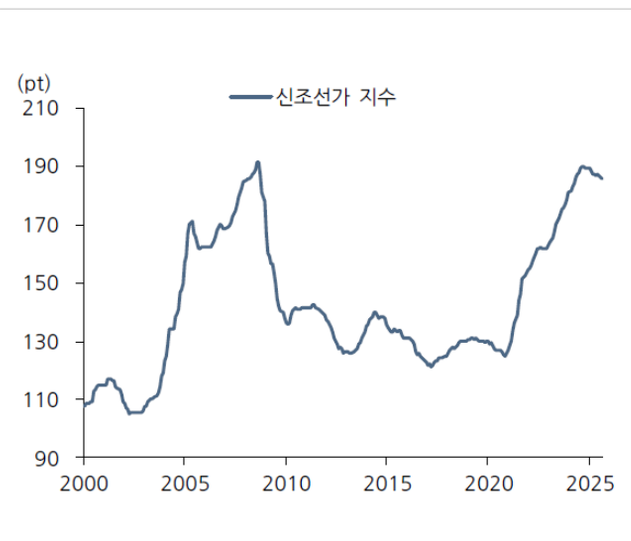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선가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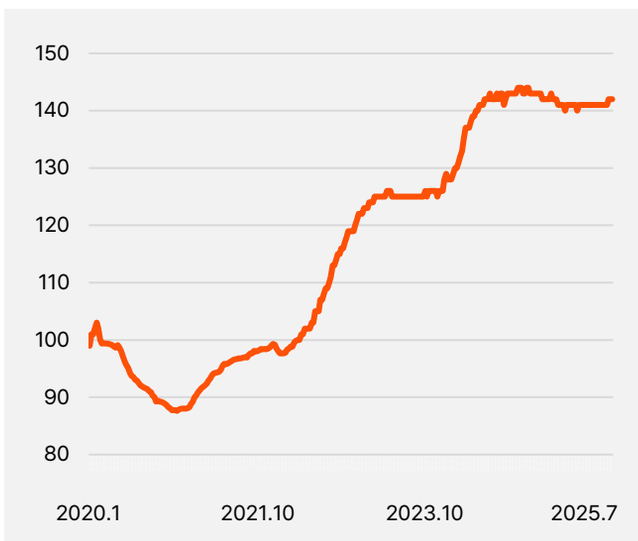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2023년 고점(190pt대) 이후 180pt대에서 완만 조정
- 중고선가는 운임·톤마일에 따라 강세 유지 → 신조 vs 중고 가격 갭 축소 흐름

신조선가 추이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고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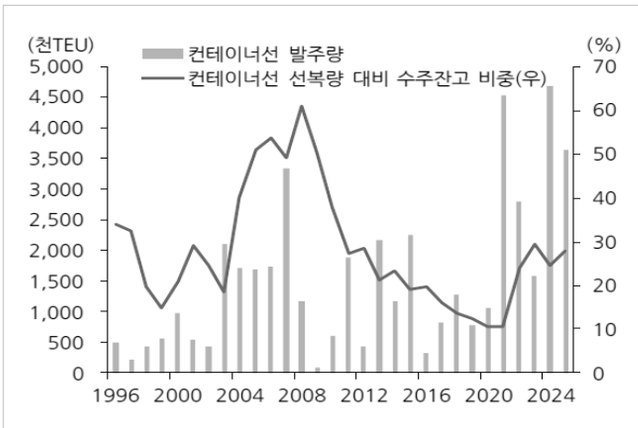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① 현황: '발주 폭주 후 조정' (계속)

선종별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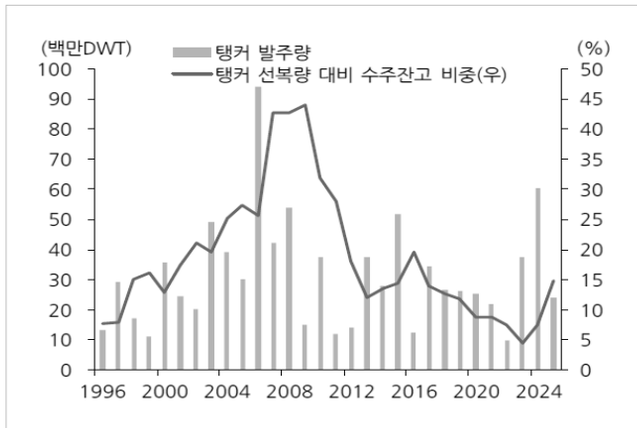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21~22년 과잉 발주 → 25년 이후 정상화/조정 구간
- 22년탱커: 10년 가까운 저발주 + 러시아 제재로 톤마일 증가 → 중고가 강세, 신조발주 회복 초입

컨테이너 발주량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탱커 발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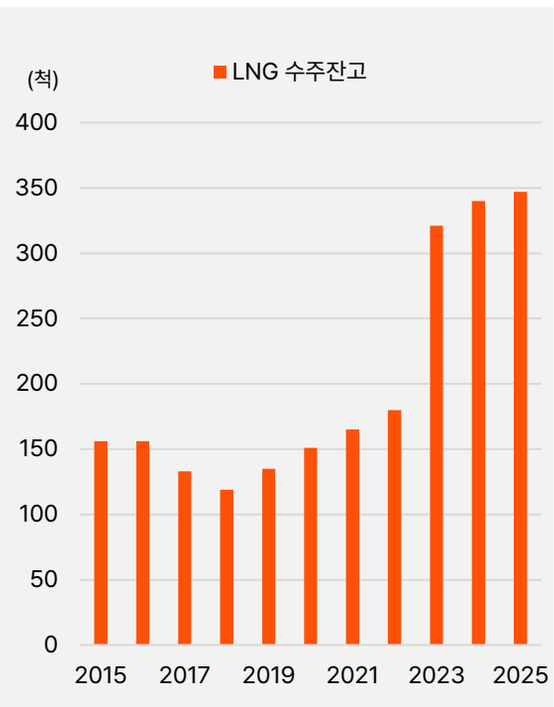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LNG선: LNG 프로젝트 대거 승인

- 2025년 LNG 생산 프로젝트 대거 승인
- 22년 카타르/미국 프로젝트 발주 피크 이후 숨 고르기, 하지만 2028~30년 FID 프로젝트 기준 LNG선 260척 이상 잠재 수요

LNG선 수주 잔고



자료: Clarkson

건설 중 주요 LNG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생산가능용량	FID일정	가동예상시기	필요척수
아르젠티나	Argentina LNG Phase 1 FLNG2	3.5	'25.8	'28	7
캐나다	Cedar(FLNG)	3.3	'24.6	'28	4
멕시코	Amigo FLNG1	2.1	N/A	'28	3
멕시코	Amigo FLNG2	2.1	N/A	'28	3
모잠비크	Coral North(FLNG)	3.6	'25.10	'28	4
오만	Marsa LNG	1	'24.4	'28	1
카타르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6	7.8	'21.2	'28	8
러시아	Artic LNG 2 Train 3	6.6	'19.9	'28	9
러시아	Baltic LNG	13	N/A	'28	14
미국	Port Arthur LNG Train 2	6.5	'23.3	'28	14
미국	Corpus Christi LNG Stage 3 Train 8	1.42	'25.6	'28	3
미국	Rio Grande LNG Train 2	6	'23.7	'28	12
미국	Corpus Christi LNG Stage 3 Train 9	1.42	'25.6	'28	3
카타르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7	8	'24.2	'29	11
카타르	North Field LNG Expansion Train 8	8	'24.2	'29	11
UAE	Al Ruwais LNG	9.6	'24.6	'29	10
미국	Port Delfin 1(FLNG)	4.4	N/A	'29	9
미국	Commonwealth LNG	9.5	N/A	'29	20
미국	Rio Grande LNG Train 3	6	'23.7	'29	12
미국	Woodside Louisiana LNG 1	5.52	'25.4	'29	11
미국	Woodside Louisiana LNG 2	5.52	'25.4	'29	11
모잠비크	Mozambique LNG	12.8	'19.6	'30	17
미국	Port Arthur LNG Phase 2	13.5	'25.9	'30	29
미국	Woodside Louisiana LNG 3	5.52	'25.4	'30	11
미국	Rio Grande LNG Train 4	6	'25.9	'30	12
미국	Rio Grande LNG Train 5	6	'25.10	'31	12
합계	-	**158.7**	-	-	**261**

자료: Clarkson,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정책 Focus: '스마트·친환경 중심 해양강국 전략 가속'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

- 스마트·친환경 선박 중심의 미래 시장 선점과 함께, 해상풍력·해양플랜트·LNG 벙커링 등 신해양산업과 연계한 국내 발주 기반·공급망 생태계 확충
- 초정밀·자동화 기반의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특수선·극지선·군수 MRO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경쟁력 및 글로벌 조선 리더십 강화

조선 관련 정책 과제

조선업을 제조업 전략산업화

- 조선업을 전략 제조·안보 산업으로 재규정 (반도체·원전·에너지와 같은 축)
- 방향성:
- 대형사: 고부가 신조·해양플랜트·방산
- 중견·중소: MRO·관공선·특수선 등으로 역할 분담 → 밸류체인 전반 경쟁력 강화

대미(對美) 조선·방산 협력

- 한·미 정상 간 조선·방산·원전·에너지를 포괄하는 전략산업 파트너십 선언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조선·LNG·원전 포함) 확대
- 한국 조선소가 미국 조선 CAPA 확충·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포지셔닝
- 장기적으로 미 해군 함정·군수선·에너지 관련 선박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반 형성

에너지 전환, 해양 인프라 정책

- 재생에너지·LNG·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전환 로드맵 추진
- 해상풍력·해양플랜트 확대 → 풍력설치선·전력설비선·특수선 수요 간접 창출
- 에너지·전력 인프라(해상 변전소, HVDC 등) 강화 정책과 조선·해양플랜트 수요가 연결

국내 CAPA, ESG

-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소 CAPA·인력 유지·확대를 위해
- 중소 조선·기자재·MRO를 포함한 내부 생태계 최적화 정책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숙련 외국인력·지역인재 육성 기조
- ESG·안전 규제 강화와 병행해 친환경·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

자료: 언론보도 종합

K-조선업 해양강국 실현

세부 추진 내용
- LNG·전기 선박 경쟁력 향상
- 메탄올·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 친환경 연료 추진선·운반선·화물창 국산화 지원
- 쇄빙기술 적용 선박, 저온·극한 운항 선박 개발 추진
-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상용화 선도
- 설계,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 등 전 공정 디지털화 지원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 확산
- 숙련 인력 확보, 연구·설계 전문 인력 양성
- 은행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유도, 무역보험공사 RG 특례보증 확대
- 친환경 선박 R&D 재개 및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
- 군함 등 특수선 건조 및 MRO 산업 육성
- 수요처 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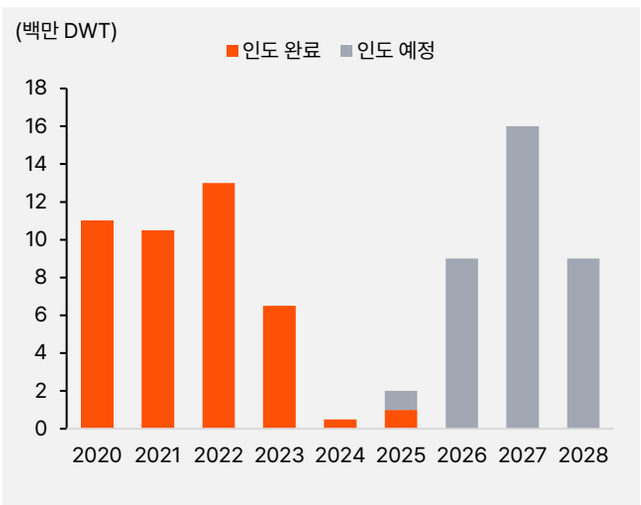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종합

③ 전망: '과열 뒤 꺾임 국면 진입'

2026년 Forecast: 2021~22년 피크 이후 양적 발주는 조정/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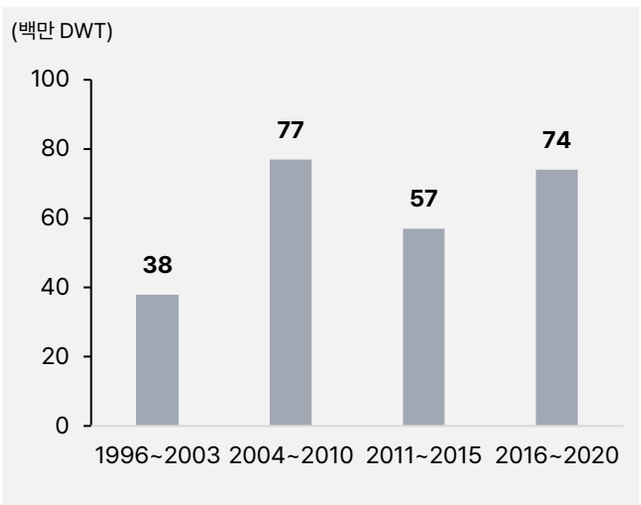
- 2021~22년 피크 이후 양적 발주는 조정/정상화
- 하지만 1998~2015년 인도 선복을 대체해야 하는 교체수요 감안 시
  → 26년 이후에도 "수주 절벽"보다는 완만한 조정 시나리오가 베이스

Tanker 인도 및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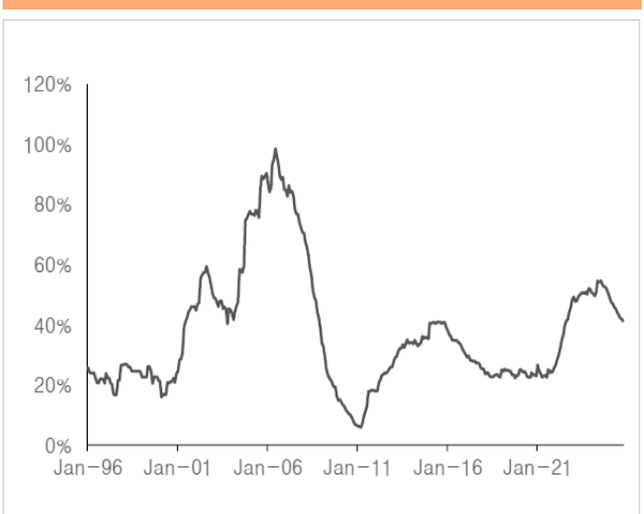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운항 중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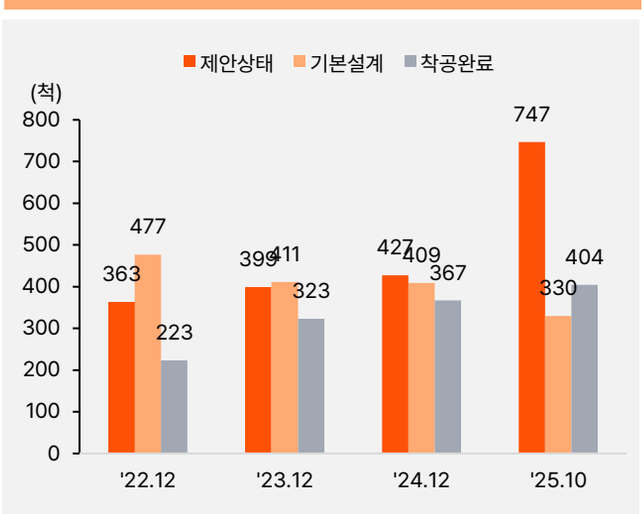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LNG 선복 대비 수주잔고



자료: Clarkson

LNG 프로젝트



자료:Bloomberg

④ 결론 및 시사점: '고부가·친환경 중심 질적 전환 가속화 필요'

사이클

- 2020년대 조선 사이클의 성격 - 과거: "신규 수요 + 과잉 CAPA + 장기 불황" 구조
- 현재: 노후선 교체(1998~2015년 인도 선박 대규모 교체 물량)
- 환경규제·연료 전환(IMO, EU ETS, 탄소세 등)
- 해양 방산 수요(미·동맹 해군 현대화)
  → 세 가지가 함께 산업을 지탱하는 다중 모멘텀 구조

K-조선업의 위치

- 글로벌 포지셔닝
  중국: 수량·CAPA 중심 – 벌크·중소형·저가 물량 비중 높음
  한국: 고부가·고난도 중심 – LNG선, 초대형 컨선, 가스선, 군함·특수선 비중 높음
- 구조적 경쟁력
- LNG·가스선, 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등에서 기술·신뢰도 프리미엄 유지
- 해결과제
- 인력난·임금상승·후판 등 원자재 가격 → 원가 구조 관리 필요
- 중국·동유럽 조선소의 CAPA 증설 → 중저가 선종에서 가격 압박 요인

산업 전반 시사점

- "양(量)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지만, 질(質) 중심으로 이미 방향은 바뀌었다"
- 글로벌 잔고·선령 구조상 조선업의 장기 수요는 존재
- 다만, 범용선·저가 물량은 중국이 가져가고 → 한국은 고부가·친환경·방산·서비스(MRO)로 가치사슬 상단을 차지해야 함

전략 시사점

선종·사업 포트폴리오

- LNG·가스선, 고부가 컨선, 군함·특수선 비중을 중장기 타깃(%)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
- 단순 매출볼륨보다 "고마진 잔고 몇 년치 확보 여부"가 생존 변수

생산·인력·디지털

- 인력난·고령화 대응: 외국인 숙련공 활용 + 지역 인재 육성 병행
- 스마트 야드·자동화·디지털 트윈 도입으로 → 환경·안전 기준 충족 + 생산성 향상 동시 달성 필요

방산·해양 인프라와의 결합

- 군함·잠수함·해양 경비선·해양 플랜트(해상풍력 설치선, Subsea 설비선 등)를
  → "두 번째 축"으로 키워, 상선 사이클 변동 완충재로 활용

Author Contacts

이은영 상무

삼일PwC경영연구원

eunyoung.lee@pwc.com

김승철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eungchurl.k.kim@pwc.com

이희정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euij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곽호경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okyung.kwak@pwc.com

강서은 책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eoeun.kang@pwc.com

안정효 선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jeonghyo.ahn@pwc.com

김효진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yojin.h.kim@pwc.com

최형원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yungwon.choi@pwc.com

강수정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신서윤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eoyoon.shin@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

CM

정낙열 파트너
nakyul.jeong@pwc.com

서용범 파트너
yongbeom.seo@pwc.com

석주현 파트너
ju-hyun.seok@pwc.com

이승훈 파트너
sung-hun.lee@pwc.com

김영순 파트너
chris.y.kim@pwc.com

임영빈 파트너
young-bin.yim@pwc.com

원치형 파트너
chihyung.won@pwc.com

IME

배영석 파트너
youngseok.bae@pwc.com

김승훈 파트너
seung-hun.kim@pwc.com

유원석 파트너
won-seok.yoo@pwc.com

서용태 파트너
yong-tae.seo@pwc.com

장원호 파트너
wonho.jang@pwc.com

김태성 파트너
tai-seong.kim@pwc.com

신민용 파트너
min-yong.shin@pwc.com

전용욱 파트너
yong-wook.jun@pwc.com

김진섭 파트너
jin-sub.kim@pwc.com

한재상 파트너
jaesang.han@pwc.com

TMT

정재국 파트너
jae-kook.jung@pwc.com

이주형 파트너
tommy.lee@pwc.com

김경환 파트너
kyung-hwan.kim@pwc.com

한호성 파트너
hosung.han@pwc.com

백종문 파트너
jong-moon.baek@pwc.com

한종엽 파트너
jongyup.han@pwc.com

강찬휘 파트너
chan-hwi.kang@pwc.com

김지미 파트너
ji-mi.kim@pwc.com

이재혁 파트너
jae-hyuk.lee@pwc.com

FS

김경구 파트너
kyoungkoo.kim@pwc.com

임상표 파트너
sang-pyo.yim@pwc.com

진선근 파트너
sungeun.jin@pwc.com

진봉재 파트너
bong-jae.jin@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11W-RP-139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